

제43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8월26일(수)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경제부처

상정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1
- 부별심사: 경제부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발언을 안 하고 마지막 끝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부별심사: 경제부처

○위원장 이광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답변 시간을 고려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생산적인 질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8월 31일 월요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남구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경제부처 부별질의인데 부총리님께 우선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롤러코스피’ 이런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우리 코스피가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최근에는 그래도 그나마 안정이 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사이드카가 몇 번이나 발동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구체적으로, 하여튼 좀……

○박수영 위원 많이 됐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최근에 많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좀 세지 않습니까?

○박수영 위원 글썄,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무려 83회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서킷브레이커가 열 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대부분이 언제 발동됐는지는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최근에……

○박수영 위원 5월 27일 이후입니다. 소위 ETF 도입 이후에는 사이드카만 무려 52회, 서킷브레이커는 10회, 모두 5월 27일 이후에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5월 27일 이후를 보면 63거래일인데 그중에 62회 발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 숫자적으로 따져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 발동돼 왔다, 좀 진정되고 있다고 부총리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결과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롤러코스피의 주된 원인은 5월 27일 도입된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봐서 제일 많으니까요, 62회나 되니까.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나와 있는데요.

1월 13일 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부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1월 13일 당시에?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당시에 저렇게 하는 부분은 몰랐고요. 그 전에, 12월 달에 환율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 해외에서는 이렇게 허용하는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해외로 나가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한 적은 있고, 그런데 정책실장이 CEO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그 사실은 몰랐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것은 몰랐습니다.

○박수영 위원 1월 16일 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 개별 주식 레버리

지 ETF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16일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아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 부분도 제가 1월 16일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구요. 우리가 그때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런 부분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 ‘할 수 있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부총리님이 우리 경제 수장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저 부분은요, 위원님……

○박수영 위원 경제 수장께서 움직이셔야지 정책실장이 저렇게 CEO들 모으고 언론에 얘기하고 금융위에 숙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방향을 정하면 개별적인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이렇게……

○박수영 위원 금융위하고 해야지, 금융위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정책실장이 나서서 일일이 다 하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금융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1월 19일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금융위에 과제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 직원을 인용해서 ‘청와대가 금융위에 과제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내가 금융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30일 보면 금융위 내부 문건인데,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 이 내부 문건에 보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공직 31년 했습니다만 하반기 이러면 보통 10월, 11월 이 정도에 출시하는 것을 얘기할 텐데 문건에 하반기 출시한다 해 놓고 실제 출시된 날은 5월 27일, 상반기에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 이것은 또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그것은 또 금융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뭐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5월 27일 날 시행한 것 아닌가, 정상적이라면 입법예고도 좀 오래, 천천히 하고 의견수렴도 더 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래 금융위의 내부 문건처럼 하반기, 10월이나 11월 되어서 시행을 했어야 정상일 텐데 이렇게 서둘러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다 거쳤는데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토론이 없었다고, 지금 제가 회의자료를 받았는데, 회의록 받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 우리 장을, 증시를 롤리코스피로 만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차관회의고 국무회의고 제대로 된 토론 한 번도 없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전부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뭐니까? 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때가 좀 부

답스러우면 차관회의라도 제대로 토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G20 국가에,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나라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답변 좀……

○박수영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금융위 ETF 지시한 분, 금융위원장님 안 나와 계시고 부위원장님 와 계시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박수영 위원 권대영 부위원장님, 1월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금융위 관계자 발로 ‘청와대가 국내 증시 경쟁력 제고 방안 추가로 논의하면서 금융위에 과제가 떨어진 것’, 즉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 위에서 밑으로 보낸 거예요. 청와대에서 보냈다, 지시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 지시가 대통령 지시입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지시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박수영 위원 허위 보도입니까? 동아일보 보도는 허위 보도……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그 기사는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금융위원회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금융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제가 공직 생활한 경험으로는 바로 부인하거나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 기사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흔히 보통 관료적으로 해 오던 관료들의 습성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내부 문건, 2026년 하반기 상품 출시라고 분명히 만들어서 향후 일정을 해 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반기로 하기로 한 것을 5월 27일 출시, 즉 차관회의, 국무회의 서둘러서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한 이 의사결정은 부위원장님, 누가 한 겁니까? 원래 내부는 하반기에 한다 그랬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내부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했지 이런 특정한 일정에 맞춰서 출시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 회의는 한 번 했습니까? 이 내부 회의 같은 건 했습니까? 아니면 의견 수렴은 좀 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저희가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의견을 거쳤고요. 이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시기를 하반기에 하기로 한 것을 5월 27일로 당긴 것, 이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특별히 당기고 늦추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라고 보고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부위원장님이 이제 정무직 되시더니 답변도 잘 피해 가시네요.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반기 출시하기로 했으면 천천히 충분히 숙의해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걸 5월 27일로 당겼으면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김용범 실장 중

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급하게 당겨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제가 업무 과정에 있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수영 위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좋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게 4월 17일 차관회의 올라가고 4월 21일 국무회의 올라가는 상황 같으면 차관회의 하고 나서 보고받았습니까, 이런 게 올라간다는 것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작년 12월 달부터……

○**박수영 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것 왜냐 그러면요 차관회의에 올라가든 국무회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레버리지 ETF 안정을 보이는 게 상품의 여러 가지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상품 구조를 이렇게 짰으니까, 우리 증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삼전닉스를 단일종목으로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차관회의, 국무회의는요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만드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박수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한 이후에도 보면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돼 있고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범 실장은 ‘레버리지 탓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작은 김용범 실장이 해 놓고 사과는 장관들이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부 운영입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시작은 정책실장만이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계 부처 장관이 모여서 12월 말에 그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은 거기서……

○**박수영 위원** 아니요, 그 시작을 그러면 부총리님이 하셔야지 왜 일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면, 국면마다 부총리는 안 보이고 정책실장만 보이는 것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정책실장만 보인 게 아니고 장관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실장이 금융위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은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해외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국내 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에 레버리지 ETF를 저희들 F4 회의 해 가지고 3000만 원 한도 하고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확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은 꼭 레버리지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리밸런싱 그런 측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제도를 보완한 다음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잦아들어서 그나마 또 저희들은 이런 제도의 설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느끼게 됩니다.

○박수영 위원 교훈을 너무 늦게 느끼신 것 같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 정책실장만 보이고 경제수장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총리 아닙니까? 좀 제대로 앞에 나서서 모든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나서는 게 어떤…… 위원님,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 나서는 거지요. 모든 부처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부동산도 해야 되지요, 제 일도 해야 되지요, 물가도 해야 되지요.

○박수영 위원 아니, 그래서 부동산과 증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이광재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배달앱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배달앱 시장이 사실상 쿠팡하고 배달의민족 두 회사의 독과점 체계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하는 정책도 보면 아주 서로 비슷해요.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책정할 때도 9.8% 이렇게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최근에 조금 내렸습시다만, 무료배달비용이라고 그러면서 배달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포장, 요즘에는 찾아가서, 배달시키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6.8% 수수료를 또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주할인쿠폰 비용들도 전부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또 신규 광고를 신설하고 광고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래서 모 언론에 의하면 매출의 한 40~45% 정도가 이 수수료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중기부차관님, 이 배달앱에서 배달을 할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한번 이런 실태 조사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저희들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글썄, 조사를 좀 하시라는 얘기들을 저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한 1, 2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뭐 40%, 30%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한번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배달앱 시장에서 비용 부담을 하

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공식화시켜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꼭 실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정위 부위원장님, 온플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플랫폼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럽식의 독과점 규제법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만 지금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독과점 규제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통상 압력을 제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당분간은 처리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유보를 해 놔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사실 미국기업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미국의 의회의원들이라든가 미국의 행정관료들이 쿠팡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하지 말자 이랬다는 건데, 우리가 주권국가잖아요. 그렇지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양극화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반도체 이런 건 호황인데 우리들은, 바닥경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문제를 들어주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소외의식 같은 것도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꼭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 공정위도 같은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규율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김남근 위원 공정위가 좀 중심을 못 잡고 통상교섭본부가 막연하게 ‘쿠팡이 압력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계속 유보하고 유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고 소상공인들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 그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국회도 노력할 테니까 공정위도 노력해서 가지고 꼭 온라인플랫폼법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이미 국회에 많은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장관님, 우리 경기가 지금 K-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남근 위원 반도체·첨단전략산업 부분들은 수출도 잘되고 상당히 호황인데 지금 전 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폐점하고 있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97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2020년경만 하더라도 폐업률이 80만 밑이었고 이랬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같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상당히 부담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파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도 지금 경기 양극화에 따라서, 특히 취약 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지방 그리고 또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김남근 위원 아무튼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2027년 예산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 첨단전략산업들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지만 K-양극화에 대응하는 예산도 책정할 예정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점점점점 ‘정부에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 보면 아주 확실하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빈곤층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좀 의식적으로라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대통령께 몇 번 보고를 드렸고 보고드릴 때마다, 특히 최종 보고에서는 대통령께서 미래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K자형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보다 촘촘히 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이라든가 중기·소상공인·비수도권·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 지원을 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국회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자꾸 K-황금시대, 반도체 호황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는 계층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우리 정부에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과점 배달앱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배달앱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땡겨요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낮은 점유율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8% 가까이 점유율이 올라와 있고, 먹깨비 같은 경우도 한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점유율 1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배달앱들의 점유율을 계속 높이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면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과점체제로 되어 있는 이 시장의 경쟁체제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생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할인쿠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배달비 지원 얘기들도 있고 상생배달앱 홍보를 늘리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상생배달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자,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상생배달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나아지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하다가 끊어지고 조금 하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이 없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 경쟁체제로 갈 때까지, 점유율이 예를 들면 한 20% 정도는 상생배달앱들이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적 목표가 없이 그때그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재정경제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부도 저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키워 가지고 독과점의, 한 특정 배달앱의 어떤 과잉·독점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갈수록 점유율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속도를……

○**김남근 위원** 그래서 임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으로 해 주시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중기부차관님, 담당을 농림식품부에서 여기로 갖고 왔잖아요, 중기부로?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세우시고 좀 지속적으로 하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지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상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농림식품부가 했을 때 약 11%까지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저희 목표는 상생배달앱 지원을 통해서 2030년까지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져가면 일부 배달앱들의 독과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이게 올해 하고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2030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적어도 점유율 20% 올라갈 때까지는 다 할 거다 이런 신호를 주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배구조도 중요해요. 지금처럼 신한은행·하나은행 이런 데들이, 한 은행이 이렇게 주도하는 식의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상생배달앱이 될 수 있나 이런 문제의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많은 소비자단체·소상공인단체 이런 데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신탁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사회적금융들도 참여하게 해서 지배구조를 폭넓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신탁이나,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많잖아요? 60만, 70만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60만, 70만 회원들이 행사 때마다 많은 선물 같은 것 받는데 이런 할인쿠폰 같은 것 선물로 받아서 소비에 활용하고 그런다면 훨씬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홈플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님, 지금 홈플러스가 다시 긴급운영자금 투입하면서 매출도 2배로 늘어나고 이용하는 고객 수도 한 74%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상화되는 게 뚜렷하고 9월 4일 날 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상당히 고비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날 회생절차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청산을 전제로 한 대응이었어요. 그러면서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한테 4000억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청산하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정부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실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로자 보호라든지 또는 납품업체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대주주라든지 그리고 또 최고경영진의 책임 분담 그리고 채권자들의 어떤 분담하는 이런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또 협력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남근 위원** 대주주하고 채권단의 그런 협력을 얻어 내는 것도 국회가 주로 했지 정부가 하지 않았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정부도 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정부가 한 것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마치 청산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근 위원** 그냥 바로 몇천억을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홈플러스와 관계된 소상공인들이나 특히 노동자한테는 상당히 실망을 줬다라는 점들을 좀 유념하시고 홈플러스를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홈플러스를 어쨌거나 살리자, 그래서 모든 여기 참여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자기희생도 하고 또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근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제가 오늘은 국민을 대신해서 쓴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51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조세저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나흘 만에 질타를 하시고 야권인 민주당에서도 재경부 각성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은 좀 야속하실 거예요. 그것 사전에 다 청와대랑 조율하고 끝낸 거고 당정협의 다 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분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재경부만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님 나오시지도 않았습시다.

그리고 저희가 엠바고 풀린 8월 3일 저녁 6시에 바로 준비해 가지고 재경위가 국민의 힘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게 고쳐 쓰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고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내

시기는 내실 겁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르게요, 진짜 이번에는 시가 30억 이하의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 주는, 진짜 거주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보유나 그다음에 다주택, 고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정상화한 그런 합리적인 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도 해명자료를 낸 것은요, 저희들이 잘못된 측면 그것보다도 언론에서 저희들하고 다른 식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그런 대응도 적극적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거 그대로 강행하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비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주거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가 보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을 바꾸는 과정에서 했는데 또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경청을 해서 비거주용에 대해서도 어떤 합리적인 거주 사유가 되면 또 인정을 해 준다, 이런 현실에 맞는 대책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거는 강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규칙 같은 것도 40일 입법예고 딱딱 채우는데 20일밖에 안 하시고, 그런데 예고라고 하지만 이미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올려 가지고 집주인들이 전월세 다 전가하고 있고요. 시행도 안 했는데 시장부터 요동칩니다. 이게 세수가 돈다고…… 세수가 도는 호텔경제학이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적이 뭔지 한 문장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거주용 주택 중심의 주택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소비자물가가 1.8% 오르고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는 데 민생경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민생을 총괄하시는 부총리님이시잖아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제개편안으로 순증되는 세수 효과가 3조 4000억 원인데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세금을 왜 걷는지, 그거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는 소득의 반이나 내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왜 안 그러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징벌적인 과세라는 것을 실토하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2조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주택자, 청년층한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통계가 말해 주는데 보유세 올릴 때 이런 거 다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데,

전가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번에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20억까지는 오히려 깎아 줬습니다. 지난 부분……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월세 전가되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과거의 그런 데이터를 검토하고 하신 거냐고 물은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거주용에 대해서는 깎아 준 부분이 있고 비거주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거주용에 대해서는 이게 대부분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배준영 위원 그거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110억의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는데 지금 세금을 많이 세이브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아예 없애 버린다고 하면 어려운 기업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게 많고요. 또 일일이 다시 정부 지원금으로 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줄지도 모르고 결혼·출산에 대한 혜택, 대중교통비,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건데 당연히 지금 반발이 크지요.

그리고 사생활 이슈가 큼니다. 거주·비거주 이거 말씀하셨는데 1가구 1주택자는 역대 정부가 지켜 왔습니다. 이제 소문에는 전체주의 국가처럼 GPS, 핸드폰 발신, 신용카드 사용처처럼 이런 걸 실거주 여부까지 따져서 세금 받는다고 하니까 더 흥흥해지는 겁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뼈를 깎아서 정부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신다고 했어요. 의무지출·재량지출 다 10% 줄여서 쓰신다고 했지요.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40%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10%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사업 개수는 10%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도 정부는 총지출 800조 플러스알파로 역대 최고의 지출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국민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 필요한 항목을 보니까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이랑 상당히 일치해요. 그 기금을 조성하고 보태는 데도 쓰이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저수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마찬가지로 불황기에는 당연히 적립을 하고 호황기 때는…… 호황기 때는 적립을 하고 불황기 때는 또 그것을 저수지 역할로 쓰고 이런 기금 안정화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저수지라고 하니까 제가 약칭 이재명 저수지라고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무지출에는 어르신들 기초연금도 있고 실업자들 구직급여도 있고, 국민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이런 돈까지 깎겠다고 하시는데 또 세제개편안에서는 국민들에게

가는 혜택 줄이고 세금 더 걷어서 세금 순증 효과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의 뼈를 깎아서 재정 저수지, 이재명 저수지에 넣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민의 뼈 어떤 걸 깎는 겁니까?

○배준영 위원 의무지출 10% 줄인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기초연금, 실업자들 구직급여,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지출이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금 기초연금이 고소득 노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받는지, 그분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준영 위원 의무지출을 깎아서 저수지에 넣는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툼하게 주자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의 주장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준영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재정부에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이번에 이재명 저수지의 쓰임새를 보니까, 제가 67가지 정부기금을 봤는데 청년, 지방, 교육 등 광범위한 목적으로 쓰는 기금을 이렇게 이번에 한다고 그래요. 부총리님은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번에는 성장잠재력이라든지 그리고 청년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핵심 품목, 핵심에다 집중하겠다 하는 거니까……

○배준영 위원 아니, 새로운 게 굉장히…… 67가지를 봤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유사 일반회계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부총리님, 이것 예비비 성격도 보이는데 예비비보다 훨씬 금액이 크고 사용 범위도 넓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더 넓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짝퐁 슈퍼 예비비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부총리님, 이것 한도 없이, 기한 없이 쓸 수 있고 상시로 쓸 수 있고 20~30% 정도는 쓰고 나서 사후승인 받아도 되는 재량권이 정부에 있지요? 제가 법을 그대로 읽어 드린 건데 맞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것은 그 기금의 특성상 그렇게 정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상시 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홍근 장관님, 국가재정법 70조에 따르면 초과예산은 먼저 지방에 내리고 나라 빚 갚고 여력이 되면 추경 하고 그다음에 세입에 넣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150조나 떼어 가면 18.24% 시도지사님들 받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9.24.

○배준영 위원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재정난을 호소하는 추미애 경기지사님하고 의논해 보셨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입니다.

○배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그렇습니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하고도 의논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건 지방교부금에 따라서 지원 나가는 거고 지방교육감들 같은 경우는……

○배준영 위원 어쨌든 줄어드는 건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마는……

○배준영 위원 그런데 나중에 모아서 주신다는 것하고 처음에 쪼개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닙니다. 올해보다 당연히 내년에 늘어나고요. 계속 늘어나 게 돼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선취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 우리 정부가 1년에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현재 한 30조가량 됩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부채가 1300조니까 대충 4% 잡으면 30조 되는데 내년에 빚은 얼마 정도 갚으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은 조만간에 예산안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정 상황이 양호하게 지표가 드러날 거라 예상합니다.

○배준영 위원 저는 이 이재명 저수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수지가 없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미래계획 세우고 빚 갚고 남으면 다음 연도 세입에 잡아서 쓰면 된다고 보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쳐 쓸 수 없는 세제 개편안하고 미래대응기금은 국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진정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합당한 경제정책을 다시 제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짧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초호황으로 인한 세입이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빚을 다 갚을 거냐, 단년도에 다 쓸 거냐, 이 둘 선택을 과연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외에 어떤, 이 두 가지만 과연 걸입니까? 빚을 다 갚으면,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세입 여건이 악화되면 그만큼 빚을 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채이자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고스란히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담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또 단년도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한꺼번에 다 쓰면 그러면 그것은 훨씬 더, 총지출은 막 몇십 %까지 올라갈 건데 이걸 어떻게 그다음 해에는 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적립을 해서 필요한 만큼 꺼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을 구상하고 설계했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만

우선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이후에……

그동안 제가 더 별면 더 쓰고 덜 별면 덜 쓰는 이 불안정한 구조를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보충하면서도 정말 성장잠재력,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 기금을 쓰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하에 설계되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답변하시니까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빛 다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경이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 통제를 받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그런 계획이 딱딱 잡혀져 있으면 굳이 이재명 저수지에 그렇게 가두지 않아도 우리가 다음 연도에 이입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저희는 중장기 전략 수립하고 있고요. 결코 이재명 저수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회 통제 받습니다. 염려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통제, 규율, 절차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광재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거주용입니다, 거주용 주택을 하는 주택 문화 이걸 정착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보유만 해도 장특공제를 80% 중에서 40%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15년 하계 되면 50%를 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보유하는 걸로 되고 내가 지방에 살든 어디 살든 보유를 어디 원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거주용 중심의 주택 문화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책을 거주용 주택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거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가 기준으로 지금 17억 기준인데 20억까지는 아예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종부세에서 빼 주고요 시가 30억 기준까지 오히려 세금을 낮춰 줬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쪽의 주택 문화를 가져가지 않고는, 그러면 저만 해도 어디다 사 놔 놓고 보유하면 세금 깎아 주니까요, 내가 거주하고 보유가 분리가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실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저희들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도 아니고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철학,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쪽에 중심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됐지요? 나중에 추가질의하시든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기 안산갑의 김남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갑 김남국 국회의원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최근에 우리 경제를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를 포함해서 수출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 주식 시장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질 GDP도 전기 대비 0.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과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목상권,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요 임대 난 곳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2·3월, 3·4월부터였을까요? 매출이 30%, 40%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실제 7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55.6%로 최악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떨어졌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장도 보니까, 전통시장도 보니까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어렵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진단하면 거시경제는 반등하고 호황이지만 이러한 어떤 회복의 온기가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게는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정부의 호황과 이런 어떤 거시경제의 좋은 지표들이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돼야 되고 하반기 민생 재정의 실행 속도도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크로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또 다른 쪽, 방산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이런 쪽은 수출도 잘 되고 좋은데 특히 청년, 지방,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온기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산업에서 들어온 세수를 가지고 이런 분들을 단기적으로 도와드리는 부분, 두 번째는 물가 부분도 어쨌거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할당관세라든지 정부가 비축하는 물자를 풀다든지 해서 물가를 낮춰 주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떻게 역량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해서 작은 R&D, 생활형 R&D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도와드리고……

○**김남국 위원**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더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이게 대표적인 게 데이터로 입증된 게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일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결과 보니까요 지난해 13조 5200억 원 소

비쿠폰 지급으로 5조 8600억 원의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 중에 43.3%가 직접 골목 매출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만 이렇게 연구 결과 발표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실증분석 하나까 결론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이 2.91% 더 늘어났다 그리고 2025년 GDP 성장률 역시 기여도가, 0.12% 높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입증하듯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내수가 위축되었을 때 아주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국 위원** 정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1조 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서 올해는 1조 1500억 원까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026년부터 국가 재정지원을 법률상 의무화한 것 역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매우 뜻깊은 제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을 넘어서서 얼마큼 정말 제대로 쓰였느냐도 정부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결산을 보니까요 중앙정부 예산 1조 원 중 실제 지자체 현장에서 집행된 금액이 7940억 원에 불과하고 무려 2055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했듯이 재정 여력이 열악한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지방비 최소 5%를 매칭하는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지역화폐가 필요한 가장 절실한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오히려 발행을 포기하는 역설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비 매칭 5% 이 부담을 더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자체가 신청한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액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상권의 침체도 그리고 BSI 반영 비율까지도 고려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실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서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비 지금 5%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정부는 그 대신에 국비 지원으로는 비수도권은 5%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은 7% 해서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국비·지방비 합치면 8%, 비수도권은 10%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은 12%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더 어려운 지역에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재정 여력 등을 봐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소외지역의 상인들이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조금 더 적극 예산액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골목상권의 자영업 위기 이면에 또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용의 위기도 사실 경제의 양극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님 안 나와 계시고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차관 나왔습니다.

○김남국 위원 차관님께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님, 전체 고용지표를 보니까요 취업자가 전년 대비 10만 8000명 늘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은 70.3%로, 양호하대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전체적인 지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고용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남국 위원 청년층을 뜯어보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 고용률이 44.2%로 27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이 무려 6.8%로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거의 2배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니까요 이 문제를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AI 대전환에 따른 구조적 충격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감소한 청년일자리 28만 5000개 중에 무려 94%가 AI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오히려 거꾸로 청년층 일자리는 줄었는데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23만 개 늘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산업 내에서 일자리를 분석해 보니까 50대는 늘어났는데 청년층 일자리만 오히려 거꾸로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입사원들이 원래 회사에서 했던 자료 분석, 단순한 코딩, 문서 기안과 초안을 작성했던 이런 업무들이 집중적으로 사실은 배제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업무들이 신입 청년 취업자들이 배워 가지고 더 나은 경력자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자리인데 이러한 경력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과거와 같이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청년일자리가 줄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청년일자리 숫자 감소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지탱할 청년 인재들이 아예 경력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로,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조적인 문제, 특히 최근에 AI로 대표되는 AX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도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경력을 만들어 주고 이게 일자리로 연결되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그래서 과거와 같이 청년일자리가 단순히 줄어 가고 있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면서 또 동시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경력을 쌓아 가고 더 나은 일자리로 개선했을 수 있는지까지 그 지표를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니까 미래내일 일경험 그리고 KDT AI 캠퍼스 등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맞습니다.

○김남국 위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를 보면 사실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라는 이런 지표만

을 보고 있는데 단기 일자리가 몇 개 늘었다라는 그 지표를 넘어서서 실제 양질의 일자리로 어떻게 청년들이 나아가는지 통계 지표를 1년, 3년 장기 지표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계를 관리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때 재정 당국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정책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청년일자리 문제는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구조적인 문제 해결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하게 청년들의 일자리만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AI 교육이라든지 반도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 교육을 일단 시키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창업도 하게 하고 또 그리고 중소기업에 가서 AI 어떤 대 전환에 대한 서비스 해 주게 하고 이런 경력을 쌓으면 경력 관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에서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역량 개발 쪽에 저희들은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기업이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쪽에 중점을 두고 그런 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국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위원회에 나으신 분 계시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대통령님께서 1년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것을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행안부하고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소비자보호원에는 마일리지 포인트가 1년에 약 20조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일리지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적게 쓰면서 소상공인을 돕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텐데 그거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황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우리 국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보호하되 투기·투자 목적의 보유는 과세와 규제로 차단한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의 공적자금을 악용하거나 편법, 탈세로 부동산정책의 허점을 노리는 불공정 행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임광현** 예.

○**황명선 위원** 이번에 보유 고가주택 전수점검을 거쳐서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셨는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랬습니다.

○황명선 위원 어떻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뉴스에도 나오고 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황명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살펴보니깐요 이번 조사는 단순히 탈세 추정해서 국고를 늘리는 기술적 세무행정 차원이 아니고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 가운데에서 무려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용도로 유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전수점검으로 밝혀냈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황명선 위원 이번 1차 세무조사 대상인 50개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1조 9000억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황명선 위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회사 자산은 사주 일가의 개인 쌈짓돈이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바로 세우고 회사의 공적자산을 사주의 개인적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관행에 강력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매우 아주 적극적이고 우수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칭찬합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감사합니다.

○황명선 위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국세청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비웃듯 악용하는 투기형 탈세 형태가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청장님, 다주택 중부세 중과를 회피했던 법인의 사례들이 있겠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집이 양도차익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법인에 넘겨서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고 그런 편법들이 이번에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번에 전수점검 하면서 법인자산을 이용한 편법 탈세행위가 얼마나 치밀하고 대담해졌는지를 직접 체감하셨을 텐데요.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들 사주 일가의 편법 행태, 정말 현장에서 보니까 아주 매우 심각하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사실 본인과 본인 가족이 쓰는 슈퍼카나 초고가주택은 본인 돈으로 해야지 회사 경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그런 유혹을 느끼겠지만 안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잘못된 일각의 관행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통상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원칙이기 때문에 개별 조사 결과나 전모를 외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저는 예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공정성을

흔들고 범법 행위를 일삼는 투기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그 위법 실태와 엄정한 조치 결과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는 세무조사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탈루 유형이나 사례 등을 알려서 앞으로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성실한 납세자의 박탈감을 덜고 재발을 차단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는 반드시 차단한다,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메시지를 저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세무조사에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통상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황명선 위원** 청장님께서 각별히 세무조사 전 과정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국민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이번 점검과 조사가 일회성이 아닐 텐데요, 맞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황명선 위원** 앞으로도 추가 조사 계획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탈세 문제도 있지만 또 소속 직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바로 잡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고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황명선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목적이 무엇일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가장, 말씀드렸을 때는 세제개편안은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민과 민생을 지원하는 것, EITC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등을 개편했다는, 큰 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민생과 서민, 성장, 잠재성장을 반등과 공정과세……

저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일차적 목적이 세수기반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예산집행을 임의로 조정하면서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께 지난 개편으로 세수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그리고 개편으로 얼마나 더 걷힐 것으로 추계했는지 또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국민을 위해 어디다 쓸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듯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 세제개편은 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접근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는 다 해 봤자 3조 4000억 정도니까 세수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 기타 산업으로 돌 수 있는 세수에 비하면 진짜 세수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예. 그러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차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 이번 개편안에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크게.

다만 세부 설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비거주주…… 앞서 부총리님께서 거주외의 개념, 비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주외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공제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주신 말대로 이번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비거주 1주택자가, 걷히는 돈이, 예산이 한 3조 4000억 정도로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황명선 위원 아닙니다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전체가 성장잠재력 그다음에 민생·지방, 이것을 짊어 주는 것 또 올리고 하는 것을 다 합쳐 가지고 3조 40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비거주 1주택자가 통계를 보면요, 작년으로 보면 1주택자가 낸 세금이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하면 1700억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금년도에는 또 달라지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황명선 위원 크지 않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황명선 위원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대상 규모와 실제 세수효과, 아까 세금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양도세 개편이 전월세 시장으로 저는 영향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이 늘어난 세 부담을 피하려면 선택지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거나 직접 파는 것인데요. 그런데 양도세 개편은 28년도 시행이므로 종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유예기간인 27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결국 1년의 유예기간이 곧 임차인의 퇴거 유예기간으로 되는 것이지요. 27년도 한 해에 매도를 위한 퇴거 요구와 전세물량 감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시에 발생하면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압력으로 저는 작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비거주 1주택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고 충격도 특정 지역에 저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부총리님, 다시 말씀드리면 개편의 큰 방향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세 부담 규모와 전월세 시장 파급효과,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사각지대에서 무너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부총리님께서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정부가 스스로 안을 다듬겠다고 밝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저는 그 자세는 매우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왕 손보실 때 오늘 이렇게 지적해 주신 내용까지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원칙은 지키되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함께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께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주 중심으로 가는,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유만 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기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덜어드리고요.

좀 전에 배준영 위원님이나 황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월세 부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요.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황명선 위원 맞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전월세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금융·공급·세제 지원 이렇게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배준영 위원님이나 황명선 위원님 이런 분들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AI 같은 것에 넣어서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부산 동래의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체부장관님과 해수부장관님을 상대로 전재수 부산시장께서 전임 해수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본인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업무라고 할까요? 업

무와 그다음에 선거기간에 했던 발언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문체부장관을 만나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했고 그러나 문체부장관께서는 ‘기억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후보 시절에 ‘북항 돛야구장에 대해서 본인이 많은 검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시 해수부에서 굉장히 역할을 장관으로서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해수부장관께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보면 전재수 당시 후보는 출마 선언 5일 전에 돛야구장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했고 ‘해수부장관 시절 부산을 위해 상당 부분 검토를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D-6일 전 ‘해수부장관을 하면서 전부 검토를 끝냈던 상황입니다’라고 했습니다. TV 토론회 중에는 ‘제가 해수부장관으로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수부장관을 하면서 해수부의 주무부처와 그다음에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고 그 모든 자료와 영상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지, 어떻게 4개월 18일 동안 재임을 하면서 문체부에는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했다고 그리고 장관 재직 시절 동시에 북항 돛야구장 건설을 위해서 모든 검토를 마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분은 부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국민들 앞에 뽀뽀스럽게 얘기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확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장관님, 해수부는 북항 돛야구장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검토한 바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해수부는 항만공사하고 북항 돛야구장 관련 협의를 전재수 장관 재임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해수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항만공사하고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영 위원** 해수부 내에 전임 장관의 검토를 위해 생성된 문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전임 장관에게 북항 돛야구장과 관련해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국민 여러분, 전재수 시장은 장관 시절에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국민들 앞에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정확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부산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며 더구나 본인의 공직에서의 업무를 없던 일을 했다고 포장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재수 시장은 장관 시절 4개월 18일밖에 재임하지 못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통일교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도망치듯 사퇴했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성과·업적을 과장하여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의 공약을 장관 시절에 검토를 마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을 자기 시장 당선의 도구로 활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이것을 검토를 마쳤다는 것은 수많은 해수부의 공직자들을 연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의 어떤 직원들도 이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고 문서를 생성

한 바도 없다고 오늘 장관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했다는 것 일까요? 유령들과 함께 일한 것일까요? 전채수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입니다.

저는 앞으로 전채수 시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허위문서 작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속이면서 시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이런 기만과 거짓 위에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부총리께서도 또 기획예산처장관께서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전채수 시장의 입장이 매우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님과 이미 저에게 어제 보고해 주신 해수부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얘기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자리가 바뀌셨네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지영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산자부 전체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광주 군공항 기지가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거대 프로젝트의 결정 과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설명하지 않고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장관께서는 저의 질문에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부지를 기업에 제안했고 최종적으로 기업이 선정한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지영 위원 여러 지역의 다양한 부지라 함은 광주 외에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지요. 다른 지역들이 있었지요.

○서지영 위원 그러나 장관님 이석하신 뒤에 산업부차관께서는 그런 다양한 지역이 어디였는지, 다양한 부지가 어디였는지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저의 서면질의에 산업부는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기업의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산자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빌미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제가 그때……

○서지영 위원 여러 지역과 다양한 부지가 기업의 영업비밀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제가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다양한 부지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서……

○서지영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것과 답변은 속기록을 바탕으로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서지영 위원 기업의 영업비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다양한 부지를 추천하고 다양한 지역을 추천한 것이, 그 다양한 부지와 다양한 지역이 기업의 영업비밀입

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왜냐하면 논의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바라는 부지, 용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느 물을 쓸 거냐, 어느 용도로 쓸 거냐도 기업마다 다 다르고 기업들이 다 별도로 관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서지영 위원** 산자부가 제안한 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니,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비밀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기업들한테는.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리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지영 위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요청한 게 아니라 여러 지역과 다양한 부지가 어디였는지 단답식으로도 주셔도 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에 대해서 이미 기업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확정된 게 언제지요? 확정 발표한 게 언제지요? 제가 알기로는 7월 6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 언저리…… 그쯤 됩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데 어제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강대식 위원님의 질의 이후에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아이디어를 낸 것은 본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광재 위원장님께 언제 광주 군공항 부지 아이디어를 제안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이 위원장님한테 아이디어를 제안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어떤 경로로 제안하셨는지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6월 재보궐 선거로 들어오셨고 이 부지가 최종 선정된 것은 7월 6일인데 언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전달하셨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협의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드릴 질문이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 보충질의 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관 장관님 말씀하시고 또 제가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다만 기업이 선정한 것을 마치 정부가 선정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광주 군공항 문제는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건 광주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광주 군공항 그다음에 송정역 옆에 있는 금호타이어 부지, 이 두 부지가 기업도시를 만들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제가 무등일보나 광주 지역 갔을 때 강연을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을 때 보니까 파주 LCD라는 걸 수도권에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군부대일 거다, 그래서 파주 LCD를 한 경험이 있었고. 아파트 공급을 하는 데가 어디가 가장 빨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례에 있는 군부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를 거다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 군공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단지나 대규모 시설을 빨리할 때는 군공항이나 군부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일반론으로 제가 여러 차례 광주에 강연이나 기고나 이런 걸 많이 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님?

○서지영 위원 예.

○위원장 이광재 다음은 광주…… 그다음에 광주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기금에 관해서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안도걸 위원 장관님, 우리 기금이 67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결산을 보니까 순자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연금이라는 특수한 적립금이 쌓이는 현상이 반영된 거고요. 이거를 제외하면 우리 중요한 기금들의 재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8개 주요 사업 기금 그리고 4개 기금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지금 적자가 늘고 또 적립금도 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지난 윤석열 정부 때 3년간 세수결손이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0조 원에 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의 세수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기금의 재원을 공자기금을 통해서 약간 빨아들인 거지요. 그게 상당히 악화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게 원래 돈을 모아 뒀다가 필요할 때 즉시 쓰는 이러한 건데 기금의 재정안전판 역할이 지금 사실상 많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 기금의 경우에는 핵심적인 사업마저도 지출 규모를 좀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장관님께서 깊이 인식하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에 다행히 세수가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자금을 활용해서 지금 고갈이 된 기금에 여유자금으로 좀 집어넣어 줘야지 기금의 건전성도 살고 또 필요한 핵심적인 지출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금수지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 악화될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 기금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재원 발굴이 가능한지 또 관행적 지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기금사업을 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들을?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폐지나 통합 이런 것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개별 기금수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걸 초과적인, 추가적인 세수로 보전할 경우에 근본적인 이런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또 동일한 재원이 계속 부족해지는 것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지출 삭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입 증대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꺾었기 때문에 상환을 한다든지 전입 규모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재원 보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미래대응기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저희가 또 일반기금이나 다른 기금을 통해서 전입·전출 가능하니까요.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책펀드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중물 투자 해야 되는 거고 또 정책펀드가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분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펀드 수가 23년도 7개에서 작년에 15개, 그리고 결산 금액으로 보더라도 투자 금액도 배 이상 지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약간 유사·중복 펀드 간에 좀 난립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 거고, 큰돈을 뭉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만이 제대로 된 투자 성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펀드별로 운영 기간이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비효율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보니까 펀드마다 평가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비교 평가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각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는 나는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아마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유사·중복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관리 시스템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펀드 로드맵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 전해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진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 유상범 위원님도 같은 정책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펀드가 만들 때는 아마 각자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겠습니까만 펀드 수가 늘어나면서 당초에 목적했던 부분이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목적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펀드 간의 융합, 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또 평가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다음에 운영체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나 관계 부처하고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게요, 서남권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반도체 투자, 서남권 투자는 그야말로 향후 50년의 우리 반도체산업 패권을 유지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은 분명히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균형발전정책 의지가 가세가 돼서 이런 결단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또 용인 클러스터와 제로섬, 대체 관계다 또 공급 과잉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억측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속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능한 빠른 부지 할 수 있는 게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본인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정책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수도권에 있는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오해가 많았었는데 알다시피 거기도 마찬가지로 속도전입니다. 용인에 있는 반도체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용인 반도체도 빨리 짓도록 저희들이 인프라, 용수라든지 전기를 하고 있고 광주 반도체도 부지가 선정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업이 서남권 입지를 선택한 것은 거기가 그만큼 입지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의 포인트가, 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전력, 용수, 부지, 인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걸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안도걸 위원** 기업에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그야말로 심층적인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전략적인 판

단을 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TSMC 있잖아요,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같은 경우는 26개월 만에, 계획부터 준공까지 26개월 걸렸거든요. 우리는 언제 이것을 완공해서 양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는 당장 내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국토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방부 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일단 29년도에 완공을 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래서 양산은 30년 6월 전에 한다라는 게 분명한 거지요? 그러한 일정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전격전으로 우리가 돌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에 있어서는 여러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남·광주에 할당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 지금 270만 평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군공항 이쪽이 250만 평입니다. 이걸 다 잡아먹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소부장단지라든지 조성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여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후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빠른 용수 확보를 위해서 동북댐 증고 등 공급 필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타 면제를 통해서 이번에 됐는데 동북댐 증고 관련해 가지고 이쪽이 수몰 지역이거든요. 과거 수몰 지역인데 또 한 번 수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 전격전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특별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논의에 들어가 주심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물량에 있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추가 필요 면적은 기업과 산업부가 검토 중이고요. 그린벨트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등과 대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후부차관님 한 말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동북댐 증고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8월 31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몰 규모라든지 이주대책 이런 것들 의견들 종합적으로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안도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광재 그럼요.

○송언석 위원 예전에는 앉아서 했었는데.

○위원장 이광재 앉아서 하세요.

○송언석 위원 다른 분들이 다 나와서 하길래.

○위원장 이광재 참고로 이거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송언석 위원 재경부장관님, 어저께 하던 얘기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보니까 세액공제, 비과세, 세금 감면 등 16개 세제 혜택을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요 이게 현재 세법에 잘 들어 있어 가지고 요건만 해당이 되면 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폐지하고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산을 하고 다음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매 연도마다 정부의 예산편성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난 뒤에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 가면 각 개인마다 내가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하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관계 부처에서, 지자체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검사를, 점검을 한번 하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번거로운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세법에 들어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없애고 재정지출로 전환하려고 하느냐. 왜 그러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전환한 것은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혼인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면 감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냥 애들 낳을 때마다 얼마씩 주는 게 낫겠다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세지출하고 재정지출이 같이 있는 것은 오히려 재정지출은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그때 그냥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더 낫다……

○송언석 위원 지금 얼핏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다 없애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차라리 양쪽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면 석유류—연안 화물선 경유,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이런 데 대한 부가세·간접세·환경세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간접세는 보니까 개별소비세도 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있고 되게 많습시다. 이런 세금들을, 이것도 또한 만약에 면제를 해 주고 있던 것을 재정지출로 전환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연안 화물선, 어떤 연안여객선박에 대해서 줄 거냐 이것도 일일이 다 조사를, 검사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려면 부가가치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면세를 없애 버리면 당장 그 품목에 대한 물가 인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받았던 세금을 면세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만큼을 이미 자기는 돈을 넣었지만 그걸 국가에 납부를 안 하고, 자기는 납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지 않습니까. 물가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인상까지 나타나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상이 되는데 이런 효과까지도 고려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감안했고요. 재정 한도에서부터……

○송언석 위원 물가가 좀 올라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좀 올라도 관계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재정지출로도 가고 조세지출로 가다 보니까 지원 효과도 낮다는……

○송언석 위원 조세지출이 있고 재정지출이 있고 양쪽에 다 있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라든지 혼인세액공제 같은 부분은 소위 말하면 조세지출만 있는 거잖아요. 현재 다른 어떤 재정지출 사업이 국가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지방비로써 결혼·출산에 따라 가지고 추가 지원한다든지 이거는 별문제로 하고. 국가 예산에 관해서는 그건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그걸 굳이 아예 조세지출을 없애 버리고 재정지출로 전환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걱정은 만약에, 어저께 기획예산처장관님도 상당히 많은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언젠가 이걸 다시 사업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알다시피 청년도약계좌 같은 것 멀쩡하게 잘해 오던 걸 중도에 중단시키고 청년미래적금……

여기 금융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정무위에 가 있어서 제가 대참……

○송언석 위원 정무위 다 끝났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아마 오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내가 1시간 전에 왔는데 위원장 안 오고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찾아오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예, 알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게 지금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미 신뢰를 가지고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 무려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님? 3579명이라 했지요? 3579명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 탔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우대형인 줄 알고 안내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형이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원복할 사람 원복해라 해 가지고 한 300여 명이 다시 또 원복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정부에서 재정지출로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박홍근 장관님 계시지

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밀어붙이니까 법도 사실은 무력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량적인 범위 내에 있는 재정지출보다 조세지출 제도로 해 가지고 세법에 들어 있는 것은 조금 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굳이 신뢰를 깨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언석 위원 아니, 지금 세법이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재정지출로 가면서 주로 연안 운항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의 지원은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합니다. 이쪽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홍근 장관님께서 오히려……

○송언석 위원 지금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젠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송언석 위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에는 용산공원 완전 개방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지금 여기 국토부장관님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용산공원 전체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 주택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언제 이 말을 식언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에 들어가 있는 조세지출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출로 갔을 때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금융위의 부위원장 와 있는데, ISA도 마찬가지로 아니예요? 기존에 있던 ISA 그것은 말이지 5년 만에 딱 끊어 버리고 이월도 안 되게 해 놓고 지금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 한다는 것 아닙니까?

또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조금 더 다듬어서 조금 더 지원 대상을 늘린다든지 지원 규모를 확대해 준다는지 하면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기존에 있던 것은 가입이 또는 운영이 어렵도록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구윤철 장관 얘기하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부가 하는 말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라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ISA 관련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송언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계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부차관입니다.

○송언석 위원 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법사위 출석 중에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상하게 제가 질문할 때는 장관님들이 다 안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감천댐 건설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 전, 지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건

데 지지부진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14개인가 댐 건설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 감천댐 건설사업을 취소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거제에 사흘간 940mm, 950mm 비 온 것 기억하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 부족 사태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이 질문 잘하시던데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 것도 용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수를, 지금 당장 광주에는 그만큼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데는 다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왜 감천댐은 멀쩡하게 잘 가던 걸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적 물 수요·공급……

○송언석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송언석 위원 산자부장관 계세요?

관세협상 해 가지고 1년에 200억 불씩 주기로 돼 있지요? 금년에 줬습니까, 미국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직 프로젝트 확정이 안 돼서 준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언석 위원 금년에 안 줬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서로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프로젝트 협상 중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언석 위원 프로젝트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난주에도 막 협상을 하고 왔는데 현재 일정상으로는 9월 중에는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언석 위원 진행되는 상황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송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백선희입니다.

기초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장관께서는 8월 말에, 8월 안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발표할 예정이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 발표 일정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금 하위소득 70% 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고자 하는 그 개편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급여의 수준을 하후상박으로 바꾸는 구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개편 방향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노인 간에 몫을 떼어 내서 돌려막는 가난 나누기라고 하는 비판도 거세다라고 하는 것을 장관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의 그 개편 방향이 재정 절감 꿈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기초연금 개편안이 재정 절감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철저히 하되 좀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두텁게 하자라는……

○백선희 위원 지금 노후소득 보장하고 하후상박 구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빈곤 구제책으로서의 사회보장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무려 40%로 낮춰졌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노후소득 공백 문제 그리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때 기초연금제도, 당시로서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문제를 다소간에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선이 국민연금 보완재로서 출발을 했지 이것이 빈곤 소득계층을 위한 어떤 공공부조 성격으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을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노후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게 소위 다층체계 그러니까 3층 연금체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3층 연금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OECD에서 노인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층 연금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직은 연금체계가 더 성숙되고 있는 단계이고……

○백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연금체계 간의 역할 구분이나 정합성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선희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번 국정과제에는 사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을 포함해서 다층 연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부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개편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노후소득의 다층 보장체계하고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따로 떼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OECD가 권고하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소득대체율이 60~8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턱없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층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40%, OECD 최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기껏해야 43%로 모수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OECD 기준의 최저 기준으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해 봤더니 33.4%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봤더니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이 31.2%에 불과한데 제가 이것을 다시 OECD 기준으로 봤더니 24.2%에 불과합니다. OECD 최저 기준이 40%인데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연금은 24.2%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층 체계, 퇴직연금 볼까요? 퇴직연금, 노후에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13%밖에 안 됩니다. 노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살펴봤더니 2.7%에 불과합니다.

3층 체계가 있지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에 불과합니다.

지금 1·2·3층을 다 합해 봤더니 소득대체율이 36%이고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40%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도 어렵지만 노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노후의 생활 수준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후상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개편의 방향인데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께 소득을 더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소득보장의 구조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극빈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 보지요. 생계급여의 어르신들, 생계급여 대상자를 보면요 아시겠지만 기초연금을 지금도 받기는 하지만 소득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생계급여, 총소득에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실질적인 효과가 0원입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재 34만 7000원에서 45만 원으로 오른들 나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층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고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빈곤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기초연금을 만약에 인상돼서 받게 되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상된 기초연금을 몇만 원 더 받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것을 받게 되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게 되면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의료비 폭탄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민을 하시겠지요, 몇만 원의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료혜택을 포기할 것인가 내지는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의료혜택을 유지할 것인가. 왜 정부가 이런 고민을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박에 해당하는 분들을 볼까요.

상박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안에서 조금 높은 계층의, 70% 안에서 높은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월 소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05년에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평균 얼마를 받는지 했더니 이분들이 받는 월평균 정기 소득은 한 달에 126만 6000원입니다. 한 분이 사실 수도 있고 두 분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많은 소득이 아닙니다. 기초 연금을 포함해서 126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는 여유 있는 노인들이니까 그 소득을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일 때 내서 기초연금 안에 있는 다른 소득계층으로 옮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불과 126만 6000원에 해당하는데, 평균으로요—여유 있는 노인이라고 딱지를 대고 이분들의 일정 부분의 연금급여를 박탈하는 것이 내지는 삭감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후상박 구조에서도 빈곤층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의료급여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동해 가지고 지금 이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연동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를 개편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흔들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편 방향 중에 중요한 것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하고요, 247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96.3%이기 때문에 거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좀 편하게 바꾸자, 기준중위소득 100%에 가까우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걸로 보기에 지금의 하위 70%의 노인 인구수를 대충 유지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KDI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꿨을 경우에 지금은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이 50년에는 62% 수준으로 삭감이 되고 그리고 70년에는 57%, 소득 하위 57% 수준으로 삭감된다고 하는 추계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초연금을 왜 개편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이 잘못되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복지국가를 만들고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안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너무 많은 통계와 말씀을 주셔서 주신 자료와 인용한 것은 저희도 좀 받아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노후 빈곤 문제,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다층적인 그런 연금체계를 좀

더 성숙화시키고 또 역할 구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점점 성숙돼 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현재 65세 이상 중에서도 한 56% 정도가 한 55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변화와 기초연금하고의 관계를 보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저희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되고 국회에서 법률과 또 예산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공론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명드리고 또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중구의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또 공직자분들 연일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의료 부분하고 어저께 최기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관리요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정은경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에서 84번째 과제로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박홍근 장관님과 정은경 장관님께서,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간담회를 주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장관님들 계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용갑 위원 의료난민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용갑 위원 대통령께서 전국의 의료 수요와 공급이 서울 인근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역 의료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 정부는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수도권 빅 5 수준으로 육성해서 원정 진료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용갑 위원 지난 8월 20일 날 아마 21년 만에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지방의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게 아마 2018년부터, 참여정부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교육정책에 더 치중하다 보니까 국립대학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여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고 사실 거기의 담당 과도 신설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에 사는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보다는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느라고 발생하는 비용이 약 4조 6000억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오가는데 그 고통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들고요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전역에서 만난 어느 환자는 저를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서울에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용갑 위원 큰 병이 걸리면 언제까지 서울로 가야 되는지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남대학교, 중부권의 암병원 신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는 지금…… 미국에 보니까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서 발표한 게 있지요, 300대 병원. 세계 300대 병원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14개가 포함이 됐어요. 그중에 2004년부터 시작했던 전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화순.

○박용갑 위원 예, 화순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암병원입니다.

○박용갑 위원 예, 유일하게 포함이 됐어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약 9600억, 1조 원 정도 들여서 전남대병원에 새 병원을 짓지요, 스마트병원. 작년 5월 달에 예타가 끝나고 5월부터 예산이 46.4% 추가가,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호남에 있는 환자들은, 중병질환자들은 사실 전남대병원의 스마트병원이나 화순에 있는 암병원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치료가 된다고 봅니다.

중부권은 언제까지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의존해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중부권에도 암전문병원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해도 아마 5년, 10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때 충남대학교, 중부권에 암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예타 컨설팅을 좀 해 주시고요. 예타의 예산이라든가 내년에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예산처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충남대병원 포함해서 내년도에 지방국립대병원 저희가 대폭 지원할 예정이고요. 충남대 암병원 건립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체 타당성조사하고 이

사회에서 부결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다시 새 총장이 와서 열정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자체 조사한 다음에 이사회 의결하고 그다음에 병원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예타 신청을 해야 되는, 이 절차가 있지 않을까?

○박용갑 위원 예,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향후에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복지부에서 그렇게 예타조사 공식 요청하면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비용,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위한, 자체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마저 저희가 하기에는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병원 자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계 각국에서 꿈의 암 치료 하면 뭘 얘기를 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마 양성자, 중입자……

○박용갑 위원 양성자치료센터나 중입자치료센터. 지금 부산 기장에 2027년도면—공사를 하고 있는데—준공이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박용갑 위원 그러면 호남 지역도 그렇고 또는 중부권 지역도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또는 양성자치료센터가 사실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5극 3특의 균형적인 성장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마 암병원 안에……

○박용갑 위원 과기부에서 좀 투자를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박용갑 위원 과기부하고 부산 기장……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기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부산시 기장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투자를 해서, 약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치료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지금 2028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28년입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박용갑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호남 지역도 그렇고 또는 중부권도 그렇고 이 중입자나 양성자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노동부장관님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차관입니다.

○박용갑 위원 어저께 최기상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12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환경관리요원들하고 차를 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 심정 제가 잘 압니다. 그 높은 차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데 발목, 무릎, 허리 다 고장납니다.

2018년부터 제가 퇴임할 때도 마지막 청소를 하고 퇴임을 했는데 저장차가 필요합니
다. 그렇지요? 제가 있을 때도 사실 저장차를 보급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아마 트럭을 오르내리고 했을 때 이 무
릎, 허리, 어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저장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방정부하고 매칭을 해 주든
지 해서 저장차 보급을 좀 계속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소관이 저희가 아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용갑 위원 아,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장형 청소차 보급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입법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제가 입법……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안전한 환경미
화원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어저께 최기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청소를 안 하
면 대한민국이 환경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
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용갑 위원님이 구청장을 하셔서 사례가 생생해서 우리가 서로 현실
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는 박지원 위원님하고 엄태영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지원 위원님까지만 하세요. 오후에 하신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엄태영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역시 충청북도 선비십니다.

그러면 오전의 마지막 질의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芝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박지원 위원입니다.

오늘 농식품부장관님 안 계시고 차관님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朴芝源 위원 제가 논콩을 비롯해서 전작작물들에 대한 지금 현장의 혼란 이런 것들
에 대해서 조금 짚어 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관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쌀이 남는다고 벼 재배면적을 축소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꾸준히 전락작물들 장려해 왔지 않습니까? 보리, 가루쌀, 밀, 콩 이런 것들이요.

제가 2023년도에 보니까 지난 정부이기는 한데 그때 벼 대신에 콩을 심으라고 정부가 유도를 하면서 논에다가 콩을 심는 이른바 논콩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된 인센티브가 희망하는 전량을 다 수매를 해 준다는 식으로 장려를 해서 23년 이후로 꾸준히 논콩 생산면적이 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朴芝源 위원 생산 재배면적을 보니까 일단 콩 생산량이 한 5년 사이에 2배 늘었고 논콩이 그중에 16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벼 재배면적 감축분에서 논콩이라는 전락작물이 기여한 바가 여러 작물 중에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朴芝源 위원 심지어 2025년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강제로 감축목표를 배정하고 조정을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朴芝源 위원 그래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또 정부 말을 착실히 가장 많이 따른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국 논콩을 통한 조정 실적 중에 44%를 감당했고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수매 약속과 저런 정부의 지침을 믿고 일일이 비용을 들여서 배수 개선사업도 하고 토지 조성도 하고 기계도 비싼 돈 들여서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콩 생산의 확대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유도한 정책에 의해서 호응한 결과라는 점은 인정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朴芝源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회의였다고 하네요.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회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 이런 내용이 흘러나옵니다. 기존에 3년 넘게 계속 6만t으로 유지되어 왔던 논콩 수매 물량이 3만t으로 갑자기 축소된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 나오는데, 차관님께서 혹시 이 내용 검토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콩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다 보니까 소비가 충분히 뒷받침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재고 이상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합리적으로 수급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런데 합리적으로 수급 조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신규 재배하는 것을 진입을 막는단지도 하고 기존에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비용을 들인 농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차분히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정부 차원에서 판로나 유통·소비에 대해서 힘을 써 준다든지 이게 가장 정상적인 정책 방향인데, 6만t에서 3만t으로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 버리면 그 충격이 너무나 클 것 같은데요. 그 연착륙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콩 재배를 일방적으로 줄이지는 않고요 전략작물직불 품목에 대해서 단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옮기면서, 높이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리고 콩 재배를 하다가 이번에 콩 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벼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정부양곡 수매를 한다든가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朴芝源 위원** 논콩 수매 물량을 6만t에서 절반인 반 토막 내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들과 6만t 정도 수매했는데 올해는 한 4만t 정도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배면적이라든가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최대한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6만에서 4만이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건데, 너무 일률적으로 급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편안, 인센티브를 주셨는데 수매 양만 줄인 게 아니고 그런 정책기조 변경의 피해가 곧바로 직불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백태 그리고 콩나물콩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생산을 한 농가에 대해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직불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으면…… 재작년에 설사 이렇게 준비를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도 사고 토지 조성도 했는데 작년에는 집중호우 같은 것 때문에 작기를 놓쳐서 못 심은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전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 관계자께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불가항력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방안이 없거든요. 대책이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작년에 재배한 농가들 중에서 상습 침수지구라든가 이런 것 등 콩 재배하는 것은 올해도 결국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벼를 심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朴芝源 위원** 3년 전에는 벼가 남는다고 콩 심으라고 해서 막 돌렸는데 불과 3년 지나서 콩이 남는다고 다시 벼 심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5년, 10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영농계획을 농가들이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불가항력적으로 호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년에 재배를 못 한 농가에 대해서, 적어도 그 전에는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비용을 투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농업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련 대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저희가 FTA랑 WTO에서의 콩 수입 물량을 봤거든요. 콩 수입단가가 수입 콩이 국내산 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그런데 한미FTA 부속 협정서를 보니까 FTA 식용 콩 TRQ의 TO 쿼터가 2.4%인가요, 3%인가를 매년 자동 증량하는 구

조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3% 가까이 자동 증량돼서 어차피 수입 콩이 들어올 것이라는 게 진작부터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이렇게 3배나 더 비싼 국내산 콩을 더 심으라고 요구를 했다가 불과 한 삼사 년 지나서 갑자기 콩 수매량을 확 줄이겠다, 이제 그만 심고 다시 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을지,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닌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소비량 예측에 기반한 충분한, 면밀한 계획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현재에서는 안정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재배면적과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콩 소비 확대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이게 논콩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 비슷하더라고요. 가루쌀도 처음에 20만 t까지 생산목표 제시하다가 이제는 한 2만t 목표 제시하는데 정작 소비량은 한 2000t밖에 안 되고 밀도 계속 수요가 안 나온다고 스스로 인정하시고 보리도 수요가 안 나와서 올해 주정협회랑 협상해서 별도로 특별매입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전략작물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목표치만 만들어서 던져 놓고 이것을 믿은 농민들이 나중에는 손해 보고 이런 식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이 되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킨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손해 본다 이런 인식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떤 농정 전환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발목을 잡힐 거다 이런 우려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관련법도 지금 발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7일부터 발효되면 양곡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 주신 콩, 가루쌀, 가공용 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그렇게 해 주실 때 중장기적으로 수급계획이랑 판로 대책까지 같이 좀 포함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해수부장관님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朴芝源 위원 지금 새만금 MP 관련해서 신항만이 14년도 MP나 21년도 MP에는 계속 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사업면적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그게 기본안을 서로 협의할 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만금청에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朴芝源 위원 새만금청장님 계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예, 나와 있습니다.

○朴芝源 위원 방금 해수부 말씀 들으셨는데 신항만이라는 곳이 이제 방조제 외측에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물동량이라는 게 다 소화가 되면 그 배후지인 수변도시라든지 여러 새만금 내의 사업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예.

○**朴芝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죽 MP에 들어 있던 신허만이 갑자기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빠진다고 하니까 다들 현장에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 해수부 의견 참조해서 지난 MP와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朴芝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차관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네덜란드는 농가가 몇만 농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8만 농가요. 그래서 1년에 수출을 얼마나 해요? 130조 원.

한국이 몇만 농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은 지금 200만 농업인, 100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100만 가구가 1년에 수출을 얼마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농식품만 약 68억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10조 원 좀 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네덜란드는 8만 농가가 130조 원을 수출하는데 우리는 100만 농가가 10조 원을 수출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1년에 농림부 예산이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올해 기준으로 20조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20조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소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좀 전에 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었는데 유상범 위원님 지역구에 있을 때 그 농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심으라는 것 반대로 심어야 농민이 꼭 성공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 술에 취해서, 연세가 많으신 농민이었는데 정치인들이—저보고 하는 얘기에요—돌대가리라고. 이게 종묘사를 조사를 하든지 그러면 씨앗이 어느 정도 팔렸는지 알 텐데…… 그분은 IT 국가라는 단어를 모르시더라고요. 컴퓨터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느 작물을 어디에 심었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불행이 어떤 특정 지역에는 그해 작황이 좋은 것으로 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부 전체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본부에 한 700여 명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광재** 농촌진흥청은 몇 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000여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전국의 시도하고 시장·군청에 있는 농촌, 그것 뭐지요? 농업

관련된 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시군 소속으로 되어서……

○위원장 이광재 시군 소속으로 그러면 전부 몇 명이에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농협·축협·산림조합 이렇게 따지면 거기는 또 몇 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협만 임직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렇게 보면 우리가 100만 농가에 대한민국 농림부 관련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업 관련된 우리 공직자와 농협과 축협과 산림조합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면 담임선생님으로 하게 되면 아마 몇 농가 안 되고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20조를 넣는데, 한번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네덜란드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한국에 농업만큼 미래산업이 될 수 있는 게 없는데’라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대사를 한번 만나서 기획예산처장관, 부총리도 바이오의 모든 기초는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전환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농민들의 아픔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국무위원하고 장관님이 자리에 안 오셨기 때문에 잠시 제가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조는 시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좀 틀어 주세요. 영화 하나를 보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화를 보면, ‘인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 가지고 한 24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그래서 딱 10분 이래서 엄마를 못 만나고 죽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우리가 AI와 접속이 끊기는 순간 아마 우리는 디지털 영지 밖으로 쫓겨나는 유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접속이 끊기면 결제가 멈춰지고 일이 끊기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겠지요. 연결이 끊긴 사람은 땅 밖으로 밀려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 스위치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국가도 아니고 그 생사여탈권을 쥔 것이 소수의 플랫폼 영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 뒤랑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봉건제’라는 책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영지를 구축해서 현대사회를 봉건제처럼 지배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창작자와 그의 기업은 매출의 15~30%를 지대로 바친다. 보통 사람들은—우리나라로 말하면 클로드·챗GPT 앱, 넷플릭스—디지털 월세를 매달 낸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데이터를 갖다 바치고 산다. 그

리고 AI는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빨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없으면 비즈니스가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과연 일시적 현상일까요, 아니면 본질적인 세계사의 흐름으로 오는 걸까요? 왜 우리 상가는 점점 비게 되는 걸까요? 결국 온라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플랫폼에서 경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들의 상가는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지금 얘기하는 이 경제 대책들이 과연 어느 정도 효용성 있게 논의될 것인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배민이 딜리버리히어로로 갔다가 딜리버리히어로로는 얼마 전에 우버에 매각이 됐습니다. 아마 카카오모빌리티도 우버에 매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플랫폼 독점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만약 쿠팡처럼 미국의 기업이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플랫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의 냉엄한 현실과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해서 우리 젊은이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지켜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AI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고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우리가 아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숙한 지혜가 만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셨지요? 그러면 오후 속개를 해도 되겠지요?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정책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임태영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영 위원** 충북 제천·단양 임태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에서 부별심사인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찰개혁을 검토하라고 총리한테 지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 정권은 검찰개혁 하다가 경찰이 커지니까 경찰개혁을 한다고 하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사법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마 지지율 떨어지면 또 언론개혁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혁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되고 회화화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질의는 장관들께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 다 참석하셔서 주로 차관들 위주로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하여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을 대신해서 허장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재경부2차관입니다.

○**임태영 위원** 예, 경제부총리 대신해서 허장 차관님 또 기획예산처장관 대신해서 조용범 차관님.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공언하셨습니다. 또 최근 국토부장관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도 확신하셨습니다.

차관님들께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 곤란하시지

요?

한말씀 해 보세요, 허 차관님.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시장을 이긴다기보다는 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태영 위원 하여튼 시장경제의 논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경실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 서울 아파트 가격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80%가 올랐어요, 열일곱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이명박 정부 때는 -10%, 박근혜 정부 때 21%, 문재인 정부 때는 스물여덟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119% 상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1%입니다. 하여튼 진보 좌파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이상하게 아주 가파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무시해서 그런지 어떤 연유인지 참 궁금합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시장을 적으로 보고 규제와 세금으로 무조건 옥죄려 결과가 아닌가,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역습에 정부 실패로 귀결됐다는 명확한 확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통 경제관료분들이 시장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다 보니까, 하여튼 이 정부에 대해서 부동산정책에 시각의 전환을 실무 선에서 좀 전환시켜 주시기를 차관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또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그런 방향성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하는 용산어린이정원 문제, 참 갈등이 많았지요. 오늘 오세훈 시장과 국토부장관이 만나서 추가 발표 7만 3000호는 경기도에만 하겠다, 용산을 제외한다 이런 속보가 나왔어요. 또 국토부장관은 용산공원 의견 접근이 안 돼서 탄천물재생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겠다, 지금 뭔가 방향 전환에 대한 서로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아직 그것 관련해서 실무……

○염태영 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지적과 제안은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민간개발에 의존하는 재건축·재개발을 늘 강조해 왔지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 서울시 국정감사에 가서 오세훈 시장한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승인이 난지가 20년 됐는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 혹시 폭발을 시키면서 이주와 또 철거일을 감축시켜 주면 거기의 재건축 조합원은 좋아할 텐데 그럴 의향이 없느냐 이런 제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국감 때 얘기하겠지만 탕평책으로 정부가 반드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관님, 지난 6월까지 코스피가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를 이재명 정권의 경제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곳곳에 코스피 돌파를 자축하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지요. 물론 주가 상승 자체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얼마가 올랐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올랐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보면 최근 1년간 코스피는 106% 넘게 상승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제외하면 상승률은 12.66%에 불과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상승폭의 약 76%를 차지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지요. 이것은 코스피 상승이 일부 초대형 주가가 끌어올린 착시 코스피 아니겠습니까?

저는 더 큰 문제는 시장의 변동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5일까지 코스피의 사이드카 46회, 서킷브레이커는 아홉 번 발동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코스닥 역시 시장안정장치까지 서른다섯 차례 발동했습니다. 그사이에 개인투자자의 위험은 더 커지고 빗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 1년간 약 20조에서 37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반대매매도 약 230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부는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지난 5월 22일 허용했지요. 충분한 검토 없이 출시한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 과열과 손실 위험이 더욱 커졌고 결국 두 달도 안 돼서 기본예탁금 올리면서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차관님, 전 국민을 삼전닉스 도박판으로 내몬 현 상황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저……

○임태영 위원 차관님 소신 발언하시기가 좀 어려우십니까?

어제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증시를 두고 나온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 한국’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보셨습니까?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여기 보면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폭등했다가 급락한 한국 증시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증시는 극심한 변동성이 있다고 집중 조명했지요.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 증시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정책을 추진한 금융위원회 또 감독을 총괄하는 금감원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에서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총리도 안 계시고 장관님도 부총리도 안 계십니다마는 정책 실패가 확인된다면 관련 책임자의 사퇴를 적극 건의를 제가 요청하려고 오늘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책임 있는 분들이 대통령께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건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빚과 손실까지 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한말씀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부제2차관 허장 코스피의 굉장한 급등과 급락은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잘 아시다시피 코스피 자체가 단순하게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코스피가 급등하고 반도체 경기 자체가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고 AI 관련해서

기대가 상당히 달라지면서 굉장히 좀 증폭된 측면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태영 위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못 질 여러 가지 언행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나쁜 투기고 주식은 선한 투자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감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기구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 분야 부별심사인데 경제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복지 관련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어기구 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복지 관련 국정 목표가 뭐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거고요,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기구 위원** 그렇게 하면 대체 불가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소득 양극화 부분을 해소해서 기본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 모두의 복지로, 기본사회와 모두의 복지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 철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K-양극화 문제 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복지체제를 다시 재구성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 필요한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잘 추구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열심히……

○**어기구 위원** 모두의 복지, 기본사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1년 지났는데 결과를 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뭔가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여기구 위원 국가데이터처장님 나오셨지요? 질문 한 번도 안 받으셨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국가데이터처에서 우리 정부의 복지라든지 각종 경제·사회지표 관련한 데이터를 해마다 내놓지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이제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저출산지수라든지 고령화 지수라든지 또 불평등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개선의 기미가 보입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저희가 지표 체계를 하는데 지표가 약 100여 개의 지표가 있다 보니까 좋아지는 지표가 있고 더 나빠지는 지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평등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고요.

○여기구 위원 좋아지고 있습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저출산지표도 최근에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자살률?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자살률도 최근 1년 사이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자살률, 지금 우리나라 사회지표들이 OECD 국가 평균에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살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오랫동안 톱, 1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소해야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작년에 자살이 어느 정도, 작년 월평균 몇 명 정도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작년에 1만 3900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셨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럼 하루 평균 몇 명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 40명 내외 정도 됩니다.

○여기구 위원 40명, 1시간에 2명 정도가 지금 자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직 높습니다.

○여기구 위원 자살 공화국이라고 지금 지명, 낙인이 찍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잘하셨는데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결국은 사회·경제적 또는 질병 그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자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지나 건강정책이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에서 마지막까지 하다하다 안되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여기구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정부가 말이에요 지금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한다고 기초연금과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지금 손본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은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기초연금 개편안을 현재 마무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기초연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사람한테 더 하후상박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그렇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면 이번 개편을 하게 되면, 하후상박하게 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 줄어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초연금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노후빈곤을 줄이는 거였고요. 노후빈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층에 좀 더 많이 지원해서 하위층의 노인빈곤율 개선하는 걸 목표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하위층, 진짜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여기구 위원** 그러면 지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빈곤 노인이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가 한 170만 명,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생계급여는 194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중에 빈곤 노인들께서 받는 게 한 78만 3000명 정도 되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구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이 하후상박 개정을 하게 되면, 하후하려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빈곤 노인들이 소득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이 보충성 급여라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다 보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만큼을 제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걸로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구 위원** 그래서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줬다 뺀 연금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하지만 저희가 생계급여의 기준이 되는……

○**여기구 위원** 이게 하후상박 하겠다면서 가난을 노인들끼리 나누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을……

○**여기구 위원**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서유럽 복지국가에 비해서 한 100년 이상 늦게 도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직 미성숙 단계입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이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연금 전체, 퇴직연금, 노인연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노인소득의 보장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실용 정부, 국민 정부는 이걸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것 가지고서는 논의하고 그러니까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소득 보장 체제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직은 부족하고 성숙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돼요, 큰 판에서.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 노인소득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조금 더 있는 것 뺏어 가지고 하후상박 한다고 그런다고 노인빈곤율이 없어지느냐,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논의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좀 장기적인 개편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 또 국회에도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맨날 논의만 하면 뭐 합니까, 논의만? 답을 내놓아야지.

다음, 고용노동부차관님 나오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 나왔습니다.

○여기구 위원 실업급여도 손뚱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이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금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실업급여 어떻게 볼 겁니까? 반복 수급한다고 이것 잡는다고 지금 실업급여 손본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런 적……

○여기구 위원 그렇게 언론에 나와요, 지금.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한 사람이 열네 번을 탔느니 이러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반복 수급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 수급의 어떤 지급을 축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실업급여 타는 사람들이 대개 누구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실업급여……

○여기구 위원 오죽하면 실업급여 타겠습니까? 여기 정규직 노동자, 공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반복 수급합니까? 실업급여 탑니까? 노동시장을 배회하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단기 계약직들이 이것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찾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노동시장 구조적인 문제와 관계 있기 때문에 반복 수급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업급여 반복 수급한다고 때려잡는다고 지출 구조 조정한다고 이런 것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지금 정부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안정과 지속가능한 실업급여 이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구 위원 지금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지금 저희가……

○여기구 위원 전체 취업자 중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제도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65세 이상을 빼고 추계를 해 보면 지금 미가입자가 한 1200만 정도 되고요. 사각지대 규모는 한 274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실업급여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광범위한 실업자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정부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창출하고 소개하고 고용서비스 잘하고 이렇게 해야 실업자가 줄어든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고용보험 나가는 게 줄 테고 고용보험 재정성이 건전화될 테고 이런 식의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지 실업 수급 그 조금 받는 거, 몇 명이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많이 받는다고 지출 뭐 한다고 말이지, 이것 때려잡는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나중에 저희가 최종안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상세하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우리 정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대체불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성장 성장 떠들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래성에 집 짓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광범위한 사각지대 잡고 정말 실업문제가 어떻게 오는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AI 얘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복지,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뭔지, 대체 대한민국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큰 틀에서 이재명 정부는 논의를 해야지 돈 더 받아 간다, 이것 뺏는다고, 이것 뺏어서 여기다 갖다 주고 이래 가지고 자세가 나오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여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윤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신 윤용근입니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의 수요자 입장에서 송미령 농림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윤용근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고맙습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대상이 누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위험지역 69개 군을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사업 기간이라 17개 군 지역입니다.

○**윤용근 위원** 25년 9월 17일 날 농림부가 밝힌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총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지금 정확히 예산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

○**윤용근 위원** 총 17개 군에 8115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는 17개 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선정과 정에서는 무려 44개 군이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랬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만큼 농어촌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다는 방증이겠지요.

장관님, 농어촌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윤용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재원구조를 보면 국비가 40%, 시·도비 30%, 군비가 30%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의 지역구를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인 청양군의 1년 지방세 수입이, 교부금 빼고 총수입이 50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169억 원입니다. 500억 원에서 169억 원을 빼면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부족합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약 34%에 달하는 재원이 군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시 투입되는 돈입니다. 재정이 없어서 다른 사업은 아예 시도를 할 수가 없고요. 국비를 따와도 매칭 군비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조용범 기획차관님, 올해 농어촌특별세 수납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상보다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대략 한 10조 원가량 추가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윤용근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농어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을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특세는 목적세입니다.

○**윤용근 위원** 동의하느냐고만 여쭙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윤용근 위원**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농림부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윤용근 위원** 농림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농어촌특별세로 지방 기초단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비로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비를 전액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염려가 많아서 군의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고요.

○**윤용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을 적어도 국비를 70%로 하고 시·도비는 30%로 하고 군비는 부담하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보전된 군비의 자체 수입은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한다면 농어촌이 지방소멸 위기를 더 빠르게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글썄요, 저는 그것은 좀 논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그러면 대통령은 농특세로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주무부처인 장관님은 그것 반대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것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부담분을 좀 높이고 군에서는 이것을 부담하지 말자,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아니라 청년 중심으로 하자라는 전혀 다른 제안이시기 때문에……

○**윤용근 위원** 제 말을 오해하셨군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군비 부담은 하지 않고, 그러면 군비 자체의 예산 부담이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집중 투자하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기본소득의 원래 정신하고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용근 위원**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소멸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소멸지역……

○**윤용근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을 받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재원의 34%가 재정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특세가 많이 들어왔으니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 재원을 70%까지 올려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좀 논쟁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윤용근 위원 그러면 대통령의 말이 별로 의미는 없었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대통령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용근 위원 대통령은 분명하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농특세를 가지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이 얘기는 시범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자는 얘기고, ‘나아가서 기본소득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살만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윤용근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장관님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군비 부담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 확보를 얼마 정도 하실지 검토가 끝나시면 본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방에도 보내 드리겠고요.

○윤용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농어촌기본소득의 사용지역이 현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정한 거주 읍 또는 면 단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몇 개 업종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이 농어촌기본소득을 받는 면 단위에서는 식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청양 저 갔다 왔고요. 청양 이미 다녀왔습니다.

○윤용근 위원 없습니다. 없고, 마트라고는 하나로마트 그 정도 하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다녀 보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처 그리고 사용지역이 너무 좁아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가 다 확인했으나 반납하는 분은 안 계시고요, 위원님.

○윤용근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적립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동장터도 있고요. 이동장터도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말하자면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이해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면 이 사용처와 사용 지역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대목들은 저희가 일부 수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청양 주민들하고도 제가 간담회를 했고 청양 주민들이 불편한 점……

○윤용근 위원 저도 매주 들어가서 간담회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윤용근 위원 누구를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을 단위로 들어가서 직접 어르신들,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만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정보 전달이 잘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윤용근 위원 자, 일단 알겠고요.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림부에서 5월 12일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남해군의 대파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이게 선순환 모델로 자랑을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파 가격 상승이 아니라 대파가 과잉생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남은 겁니다.

○윤용근 위원 어찌 됐든 그러면, 이게 호텔경제학 시즌2로 저는 들리는데, 그러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앞으로도 계속 대파 가격이 폭락하면 이렇게 농어촌기본소득을 가지고 대파 가격을, 주민들이 팔아 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한 가지의 예지요, 위원님. 채소는……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이 예를 가지고 마치 이게 그 경제적 효과인 것처럼, 정책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 그 예 중의 하나가, 가령 지역에서 이삼 일 만에 폐기될 수밖에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 됐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팔아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 여러 예 중의 하나였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용근 위원 사례를 드는 것과 그것이 마치 경제 선순환 구조의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를 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우수 사례 여러 가지 중의 하나의 예로 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도 있다.

○윤용근 위원 이게 우수 사례에 해당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지역의…… 아니, 이삼 일, 농사 지은 것이……

○윤용근 위원 그게 농어촌기본소득의 목적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목적은 아니지요, 위원님.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용근 위원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역 안에서 돈이 돌지 않습니까?

○윤용근 위원 앞으로 대파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면, 과잉생산 되면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전 지역이 그런 게 아니라 남해의 한 지역의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용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농림부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농어촌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런 경제정책의 선순환 모델 구조가 완성됐다라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 마련을 변경하는 그런 것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청양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애정을 가지고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정보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17개 지역에 들어가는 기본소득 총사업비는 7510억 원입니다. 전부 다 해서요. 그리고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162억 원 들어가구요.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구요. 기존에 여러 수당 나가는 것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윤용근 위원** 장관님, 저도 데이터를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용근 위원** 데이터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물론입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받는 기초단체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물론입니다.

○**윤용근 위원** 그래야 이제명 정부가 자랑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면서, 지자체하고 의논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용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청원의 송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청주·청원 지역구인 송재봉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나왔습니다.

○**송재봉 위원**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 대기업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인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사실입니다.

○**송재봉 위원** 이 쿠팡은 납품업체의 할인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그 사실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그리고 이것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지를 조사하려고 갔는데 날짜를 보니까 19, 20, 21일 그리고 24일, 네 차례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요 저희도 철저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정말 이걸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 일개 대기업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쿠팡이 집행정지 처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저희는 소송에는 대응을 하고 그와 독립적으로 지금 쿠팡의 조사거부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형사고발을 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그 외에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부과할 방법은 없나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고발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인 것 같고요.

○**송재봉 위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지금 현행법상 저희 조사권이 사전 통제 없이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집행해 왔고 쿠팡에 대해서도 대규모…… 동일한 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조사권을 행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걸 집행 못 한 거 아닙니까, 몸으로 막아서?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그러니까, 뭐 그렇지요. 법의 좀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서 고발을 하고…… 고발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독립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쿠팡을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 직매립 금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쓰레기가 수도권 내에서 자체 처리가 다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청주, 천안, 세종, 공주, 대전, 당진, 서산,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쓰레기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전체 물량에서 민간으로 간 계 한 20%쯤 되고요. 그중에 또 한 20% 정도가 수도권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이걸 쓰레기, 특히 생활쓰레기는 발생지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송재봉 위원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안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히 원칙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안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현재 수도권의 자체 처리 역량이 안 되는 거지요?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자체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러니까 21년도에 수도권의 3개 시도와 당시 환경부가 26년부터는 직매립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사이에 공공 소각장을 지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27곳이 짓고 있습니다만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언제 지어질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켜라’라고 했더니 답변에 보면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그 지키고 있다는 걸 보니까 공공 부문에서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부문에서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방으로, 그것도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또 지키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태라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반입협력금이라든가 부담금을 좀 5배라도 늘려서 그 비용을 피해받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건 공공 소각장에 적용하는 원칙인데 민간 소각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꼭 좀 적용이 될 방안을 장관님께서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최대한 공공 소각장을 빨리 지어서 발생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사이에 결국 피해를 주변 지역의, 수도권에서 만든 쓰레기를 주변 지역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버리는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환경 정의에도 맞고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비수도권, 특히 인접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송재봉 위원 기획예산처차관님 계신데요.

지특회계 관련해서 올해 지특회계 예산을 대폭 늘렸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대폭 늘렸습니다.

○송재봉 위원 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고 정말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좀 더 확대가 되나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저희가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특회계도 지금 대폭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위원 그런데 지특회계의 내용을 보니까 전입금이 중심이고 자체의 세입예산, 안정적인 세입예산은 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어서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 총액의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예산, 지특의 안정적인 고정예산을 보니까 주로는 주세 13.5%, 법정부담금이 2.6%로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 우리 읍주문화가 바뀌어서 술 많이 안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세는 줄 것 아닌가요, 앞으로?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송재봉 위원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말씀대로 지특회계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더욱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세출예산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보강이 들어갈 겁니다. 세입 보강이 들어갑니다.

○송재봉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특회계 계정별 세출사업의 범위를 보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나뉘져 있지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예.

○송재봉 위원 올해 대폭 늘어나는 건 지역자율계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지역지원계정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이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교통·물류 확충 이런 것과 또 지역특화산업 또 초광역권 산업의 육성 이런 분야가 저는 투자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산 자체가 지역지원계정에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광역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규모 있는 사업 설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법안 발의하면서 광역협력계정을 그냥 별도로 만들어서, 광역지자체 간의 행정연합이라든가 아니면 협력체계를 통해서 그런 광역경제권을 키워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런 방향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 간 협력을 위해서 내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할 겁니다. 그리고 규모도 키워 가지고 광역권의 산업 생태계 형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재봉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규모를 잘 키워서 광역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 규모가 상당히 되는데 평가체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

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출한도 배분 모형이 너무 과거에 만들어져서 현재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배분 내용을 봐도 경기도에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걸 배분 산식이라든가 공식 이런 걸 뭔가 새롭게 현재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화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저희가 지역별 지출한도 같은 경우에는 자의적이나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기관과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몇 년씩, 조금씩 보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계속 지켜보는데요.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형평성이라든지, 지역별 형평성 문제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형평성 문제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모형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공개가 안 되니까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떤 모형을 통해서 적용됐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처차관 조용범** 공개 여부는 세수 추계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이 가능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송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을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 해수부장관 그리고 방미통위 위원장, 과기부장관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6년 3월 17일 제10회 국무회의 중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해수부차관에게 세월호는 어느 부처에서 주관하는지 질의를 하셨고 진상규명이 끝났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차관께서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일부 추모사업과 우선 배상받은 분들의 민원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이나 피해 가족들이 억울하다거나 무관심해서 섭섭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잘 챙기기 바란다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차관께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해수부장관입니다.

○**김현 위원** 이 답변 틀렸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현 위원** 틀렸습니다.

4·16 단체에서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공식 사과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이 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및 군·정보기관 미공개 기록 공개, 이것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기록관, 국정원, 국방부 등 소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 이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등 기억·추모시설 차질 없는 건립도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 기한 삭제 등 지원체계 개편, 이 부분은 입법이 돼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안전 기본법은 제정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요 세월호참사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생존자와 희생자에 대한 논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무총리실 소관이기도 하고 해수부 소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서 가족들이 섭섭하지 않게 그다음에 억울하지 않게 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김현 위원**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 관련되신 분이 나와 있다면 지금 형평성 문제, 위원회 한계, 소송 부담 전가, 배·보상 문제가 상당 기간,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방미통위 위원장님, YTN 문제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고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 빚어졌던 방송장악의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26년 8월 21일 위원장님이 회피했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안건 자체가 상정이 되지 않고 무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관련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되어져서는 회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되어져서 부위원장께서 직무를 대행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 구성이 7인인데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6명이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회피를 하면 5명입니다. 5명 중에 4명이 있어야지 의사정족수가 되고 의결정족수가 과반 이상이 되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계속적으로 퇴장하면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면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유감스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YTN 종사자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진상규명해 달라고 하는 거고 2인 구조에서 불법적으로 YTN을 사영화시켜서, 지금 YTN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천문학적 숫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중철** 계속 회의 참석과 관련되어져서 참석을 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감사위원장님, 혹시 YTN 문제 계속 감사 중이신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매각 경위 등과 관련한 실지감사를 종료했고요 현재는 사무처에서 감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이 언제까지 됩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보고서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여튼 조속히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많이 비판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일하는 속도를 보면 한편으로는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점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실지감사가 종료됐으면 그 감사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원칙상 감사……

○**김현 위원** 원칙상 그렇지만 실지감사 내용이, 종료돼서 보고서 작성하는 그 와중에 어떤 내용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중간발표 못 합니까? 불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법 아닙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그러나 여러 가지……

○**김현 위원** 아니, 편법이나 불법이나의 문제이고 속도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2024년 2월 달에 의결했습니다. 줄속 심의, 그러니까 2인 구조에서 불법으로 심사를 해서 YTN이라는 국가 자산, 공공재를 기업에 넘겼던 거고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내용도 거의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지감사가 종료돼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감사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시간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앞으로 시간이?

○**감사원장 김호철** 길지 않게 걸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길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피해를 보고, 보도전문채널이라는 24시간 전문채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장님께서 속도를 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국회·언론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고……

○**김현 위원** 국정감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최대한 우선 처리의 사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우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과기부장관님, GPU 관련해서 2025년도 예정처에서 지적된 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위원들께서 고생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의원실에서 8월 6일 날 자료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받았습시다. 그러면 충실하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지금 GPU 배분 방안에 대해서 배분 및 운영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산업계 배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1만 장 중에서 국가 프로젝트에 6000장 그리고 학연에 3008장 그리고 산업계에 1216장, 그러니까 산업계에 다소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현 위원 다소가 아니지요.

PPT 띄워 봐 주세요, ‘GPU 배분… 산업계 배분의 불균형’ 관련해서요.

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30%를 산업계 지원하기로 했는데 12.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소가 아니라 과반도 안 되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고 또 이 분야에 사실은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학연관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해도 이것은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가 AI 프로젝트 중의 절반이 독자 AI 모델 개발, 이게 또 산업계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고 국가 AI 프로젝트 중에서도 정부 부처가 산업계를 지원하는 GPU 지원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더 많이 신청하고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제가…… 맞습니다. 탁상행정입니다. 바로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산업계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지 못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GPU 배분과 관련해서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기 충청권은 대전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보면 비수도권이 월등히 악화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더 다루겠지만 제3 강국,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계획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의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대표님이 오시니까 장관님들이 오시나 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답변드리려고 왔습니다.

○윤재옥 위원 두 분 안 계시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들어왔습니다.

(웃음소리)

○윤재옥 위원 장관님들 답변 준비하게 잠깐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타이머 하지 말고 질의 시작하시면 하시지요.

○윤재옥 위원 우선 기획예산처장관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말씀하십시오.

○윤재옥 위원 방금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빛철도법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달빛철도법은 특별법에 의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면제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윤재옥 위원 어쨌든 이게 2024년 9월 국토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이후 지금 계속 면제 결정이 안 나고 있어요.

이 법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걸로 들었습니다.

○윤재옥 위원 예, 장관님도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당시 현재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의총에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지만 취지가 대한민국 화합과 동서 교류를 위한 의미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전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내대변인이 언론에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대구-광주 달빛철도 조속 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타 면제를 확정을 안 해 주시고 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마 사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당시 이 철도가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이렇게 추진이 정치권에서 되었습니다만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정 당국, 기재부였지요, 강력히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재옥 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법안 발의자로서 재정 당국은 그냥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법 제정 당시에 제가 듣기에는 동 사업의 특별법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 법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윤재옥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장관님이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을 불러서 직접 대화를 했고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이라든

지 이런 것을 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남부내륙철도는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었잖아요. 거기에는 예타 면제 근거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B/C 자꾸 이렇게…… 이 건 B/C를 따져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성 말고 여러 가지 정책적 함의가 있기 때문에 당시 여야 거의 공동발의하다시피 해서 261명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법안에 261명이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도 동참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대구시에서는 국토부를 통해서 계속 예타 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계속 또 대구에서 요구하면 기획예산처에 보내요. 보내면 기획예산처는 법에 있다고 무조건 예타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또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이게 응급실 뺑뺑이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떡할 겁니까, 이거? 안 할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일단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나 대구의 시장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이미 소위 구 88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완전 노선이 일치하더라고요.

○**윤재옥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거는 대구시보다 광주시에서 더 적극적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최근에 제가 광주로부터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윤재옥 위원** 지금 시장이 교체되고 민형배 시장의 입장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안 나왔지만 강기정 시장 있을 때 국회의 소통관에서 수시로 대구 의원, 광주 의원 같이 합동으로 기자회견 하고 그랬습니다. 대구시장은 오히려 한 번도 소통관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당시 원내대표 또는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강기정 시장하고 통화를 했던 기억은 납니다.

말씀처럼 동서 통합이라고 하는 상징성은 크지만 7조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 최소한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됐는데 그 노선이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을 상징성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윤재옥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 안 하실 건가 여쭙보고 안 하시겠다면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발표를 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또는 운영적자가 너무나 빨리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도 일일 교통량을 제가 다 봤거든요.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부내륙철도도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도 이것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많이 다르고요. 사업규모

도 이게 7조 아납니까? 7조 사업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지금 국정과제 중에도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해 주시고, 하시려고 하면 빨리 예타 면제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경제부총리님, 지방선거 한 달 전에 청년 10만 명에게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겠다고 고용노동부장관하고 같이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재옥 위원** 그 사업 중에 청년들에게 실무를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공공·민간 분야에서 2만 3000명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일자리 경험 사업 중의 하나가 체납관리단, 국세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50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1차 모집한 인원이 5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청년들, 2030세대는 40%밖에 계약이 안 됐어요. 나머지 전부 40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년 일경험 제공하겠다는 당초의 정책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세청에서 청년들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일부는 체납 그런 쪽에……

○**윤재옥 위원** 총 9500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2차로 모집을 또 4000명 정도 했는데, 여기는 석 달 정도 하는데, 채권관리단 업무라는 게 체납사실 확인하고 납부방법 안내해주는 정도예요. 이게 취업에 어떤 경험으로 도움이 될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난번에 국세청장 얘기로는 이분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집에서 노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쉬었음 청년들보다 올 수 있는 범위를 봐서……

○**윤재옥 위원** 정책효과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 인원이 대기업일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하면서 대기업의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를 빼 버렸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재옥 위원** 왜 뺐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심층평가를 했는데 대기업들은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고 이게 효과도 없으면서 괜히…… 그 공제를 오히려 중소·중견 쪽으로 더 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심층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윤재옥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단기 알바성 일자리 경험 사업에 2134억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대기업에 세액공제 하는 예산이 984억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지금 청년들이 대기업에 다 취직하고 싶어 하는데, 점점 줄어드

는데 세액공제를 해서 청년들이 대기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업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대기업들, 어쨌거나 대기업 갈 수 있게 인센티브 주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대기업들은요, 정부가 조금 인센티브 주거나 그걸로 사람을 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여력을 중견이나 중소기업 쪽에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 충분히 알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대기업에 청년들 고용을 더 할 수 있게 촉진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반갑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 얼마 전 MBC 인터뷰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아주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두 기업만 600조 영업이익이 예상되니까 법인세 20%만 잡는다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동훈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보면 세금은 필요한 만큼 걷어야지 필요한 것보다 더 걷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한동훈 위원 국세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국민들께 세금 걷는 목적이요, 국민 보호하고 국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국민들께 세금 걷는 목적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국민을 징벌하는 목적은 아닌 것이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부총리님,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이것은 국가재정이 모자라서 증세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어떤 목적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사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한동훈 위원 자,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정책 자체가 수요를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 전통적으로 세금과 대출을 많이 써 왔는데, 대출규제를 많이 써 왔는데 그 일환의 정책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이번에 정책은요……

○한동훈 위원 그런 의미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사는……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부동산 증세가…… 제 입장 한번 들어 보십시오. 수요를 억제, 다시 말해서 집을 안 파는 사람을 벌 주고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증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쭉 말씀 드릴 기회 드릴게요.

저기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정권은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징벌적 그리고 수요 억제 목적의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바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것이고 세금을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면 정당성이 없다. 앞으로 민중당의 부동산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증세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과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부동산 증세, 그러니까 8월 3일 날 증세정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정책은 10조 가까운 부동산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 민생경제 다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 저는 지금 부동산 증세에 대해서만 여쭙고 있는데요. 보유세 9조 정도 더 걷을 계획이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부동산만 해서는 한 2조 정도 합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정책에 부동산 증세가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 증세는 응능부담입니다.

○한동훈 위원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동훈 위원 있지요? 이번에도 부동산 증세가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있습니다, 한 2조 정도.

○한동훈 위원 그러면 그 증세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이 모자라서 하는 증세는

아니고 그러면 정책적 목적의 증세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책적 목적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기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좀 낮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 줬습니다.

○한동훈 위원 부총리님, 부담을 현실화한다는 얘기는 돈 더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의도 자체가 이재명 정권은 아예 없이 이런 증세정책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응능부담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 중점 말고 그러면 수요에 관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이 없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수요 억제한다기보다는요 사는 거주용의 집에 대한 인센티브가……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재정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자체는 아까 말씀 들었는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세금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부동산 증세의 문제점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했던 말을 180도 바꿨다는 것, 둘째, 초과세수에도 불구하고 징벌적·압박적 증세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징벌당하는 국민은 잘못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주택 팔기 위해서 편법적인 근저당까지 하면서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징벌을 당하는 사람이 1주택자 그리고 전세·임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이라는 점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목적 자체가 수요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에서 증세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끝까지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동훈 위원 전혀 부동산의 수요와 관계없는 증세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동산의 사는 집하고 보유하는 집하고 이것을 좀 정상화해 줘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 정상화를 통해…… 부총리님, 결국은 부동산정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은 달라도 부동산정책 너무 어렵다는 것 이해해요.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나 수요냐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증세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건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더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한동훈 위원 산업부에서 누가 오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차관입니다.

○한동훈 위원 차관님이십니까?

차관님, 산업부가 9월에 대미투자 1호 발표 예정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9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위원** 정말 많이 바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사안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응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김정환 한미전략투자공사 전략투자본부장이 사임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저희 산업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전략투자본부장은 투자 이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또 협상하기도 하고 국내 기업의 참여 구조를 설계하는 중요한 임무를 하는 자리 맞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것은 좀 말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미투자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자리인 것은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자리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한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행시에서도 기수가 상당히 높으시던데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저하고 동기입니다.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차관하고 동기일 정도의 분이시지요. 외부에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임명된 것 언제지요? 두 달 안 됐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두 달도 안 돼서 힘들게 모셨던 차관의 행시 동기 그리고 외부 기업의 경험이 있는 분을 그만두게 한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 소관기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신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일신상의 이유, 그것 너무 편리한 말 아닌가요?

그러면 김정환 본부장도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처럼 개인 비위 때문에 자른 겁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비위가 아니라 일신상의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 자, 보십시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대미투자 1호가 발표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서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여기 말한 전략투자본부장, 이렇게 쪽쪽 실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그냥 국민은 몰라야 합니까?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공적 사안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 아니면 이견이 있었든 이것은 공적으로 밝혀야 하는 사안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김정환 본부장은 대미 전략적 투자 협상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한동훈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공직자가 두 달 만에 갑자기 사임하는데 그 이유를 국민이 몰라야 합니까? 이렇게 여쭙보지요. 그것 공적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일신상의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 일신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한 일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현재 차질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없습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없어졌던 것이, 그렇게 8월 15일 날 갑자기 잘린 것이 차질이 없어요? 통상교섭본부장이라든가 전략투자본부장은 별로 중요한 자리 아니거나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중요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전략적 투자 협상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방미통위원장님 계신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7·7법 시행 이후에 한 50일 가까이 지났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한동훈 위원 그렇지요? 그 법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 법은 기본적으로 자율운영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 잘라 죄송합니다만 짧으니까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한동훈 위원 그 법에서 만들게 돼 있는 투명성센터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한동훈 위원 이 법 1월에 통과돼서 6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준비는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이것은 임의기관에다가 자율기관입니다.

○한동훈 위원 맞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자율기관……

○한동훈 위원 투명성센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법에 정해져 있고 그것 출범할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런데 그것 7·7법 그렇게 유예하라고, 유예하라고 다들 그렇게 청원까

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50일이 지났는데? 그냥 막 지르고 보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좋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꼭 필요한……

○한동훈 위원 사실확인 단체 협약 맺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현재까지 맺은 회사 몇 개입니까? 9개 정도의 대상 회사가 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중에 몇 개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협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1개지요? 바이트댄스라는 곳은 했던데요? 한 군데 돼 있던데요. 제가 더 잘 아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거는……

○한동훈 위원 네이버, 카카오, 다음, 구글, X, 디시인사이드, 네이트, 메타 여기는 아예 안 하고 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법은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기본적으로 자율기구에 의해서, 자율운영 원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한동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그러면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적 있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취지는 검열의 민영화라는 식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에 의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충분히 우리한테도 합리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법에 대한 오해가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저도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님께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요.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께서 징벌적이라고 하셨는데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시가 30억 같으면 전국으로 따졌을 때 99%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 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세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보유, 그러니까 거주가 아니고 보유만 하면……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양도세를 40%나 장특공제로 깎아 줍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 장관님, 그 말씀 제가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8월 3일 날 한 것을 8월 19일인가에 얼마 안 돼서 바로 당정이 물러났습니까, 그게 괜찮으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동훈 위원 왜 그러면 그것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워낙 국민들이 어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이광재 이렇게 하시지요. 두 분……

○한동훈 위원 세금 문제를 그렇게 이의 제기한다고 물러나지는 않잖아요.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 국민 의사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한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이덕원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노용석 차관님 와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여기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PG 결제망을 이용한, 악용한 사기범죄 피해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범죄 구조는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사기업체가 자영업자에게 접근해서 세금 신고와 납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라고 속인 뒤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갑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는 수년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를 뺀 매출 대금도 자영업자 계좌에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자영업자로서는 PG 결제와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정상 PG사의 결제망을 이용하거나 대리점 총책 형태로 영업을 했습니다. 수년간 가맹점의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수년 뒤 국세청이 누락 매출을 찾아내면서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합니다. 그리고 신고 위반의 징벌로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붙은 이른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피해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릅니다, 한 곳당. 최근 강원도 양구군의 한 자영업자는 3억 5500만 원의 과세 예고 통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यो 최근에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22년에 이른바 절세 단말기를 내세운 이러한 미등록 PG 영업을 적발했고, 그다음에 금융당국도 n차 PG 구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꾸준히 애로점들을 파악해 왔지요.

이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실태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뗏다방처럼 움직입니다. 강원도 싹 굵은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경북이나 대구 이런 데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반드시 해 주시고. 카드사, PG사, 금융당국, 국세청 사이에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칸막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기업체를 조기에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수사·처벌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의의 피해자에게 가산세를 기계적으로 수억 원씩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기 피해가 확인되면 고의적 탈세하고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는 문화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교육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원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이덕원**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 PG업자들을 통해서 원래도 어려우신 자영업자들이 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하신 n차 PG 구조 이런 것도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위원님, 저희 지방청하고 소공연, 소진공은 지역본부, 지부 통해서 실태조사 실시하고 또 예방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국세청장님 계시나요?

○**국세청장 임광현** PG 사기 피해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러한 억울한 사기 행위가 가중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허영 위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원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미래대응기금 신설하면서 대응기금으로 편입하게끔 되어 있고, 과거에는 세수가 덜 걸히면 나중에 차차기 연도까지 이것을 결손을 보전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지 않았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영 위원 원래는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차차기 연도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차차년도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정산을 해야 되는데요. 가령 윤석열 정부 때 3년 연속 핑크가 났을 때 결국은 불용 처리 방식으로 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상에는 다 수립되어 있지만 그만큼 세금이 안 들어왔으니 정산을 해 보니까 줄 게 없었기 때문에 못 준 것이지요.

○허영 위원 그런데 나중에 세수결손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 처리된 것을 지방교부세로 추가적으로 추가세수나 초과세수가 발생을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들어온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허영 위원 이게 그런데 지방 측면에 있어서는 지방의 일반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허영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인제군의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 최근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받은 교부세가 5년간 한 1162억 원 정도 됩니다. 인제군의 1년 예산은 6600억 정도 되는데 5년에 한 6분의 1 정도를 못 받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다음 화면을 보면 원래 약 420조에서 450조를 내국세로 가정할 시에 한 4100억 원에서 4400억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36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맵시뎀 800억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800억이면 지방재정 차원에 있어서는 5분의 1, 6분의 1 정도가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교부세 또한 교부금처럼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교부세의 전반적 추이를 시나리오로 검토했는데 내년과 내후년 이후에는 교부세가 실제 각 지방으로 매우 많이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에 저희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만들었고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필요한 일반재원을 포함하여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뒀습니다.

○허영 위원 고맙습니다.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 지원이라도, 만약에 부족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부총리님, 엔비디아가 엇그저께 발표한 거 보니까 차세대 GPU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 와트당 처리량이 한 30배 그다음에 토큰 생성 비용은 35배 정도를 낮췄다 이런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블랙웰이라고 하는 GPU가 2025년 3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이게 불과 17개월 만에 30배 이상의 효율을 향상시킨 겁니다. 그런데 AI DC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구축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효율 향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력수요를 근본적으로 재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기후에너지부도 마찬가지로 제12차 전기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력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측을 해서, 전력수요를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다만 GPU의 버전은 계속해서 향상될 거고 지금 5년 전에 만들어진 GPU도 나름 또 의미 있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최고 버전인 베라 루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들을 예측하고 현재 버전들을 향후에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영 위원 나중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AI DC를 비수도권에 만들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에는 못 만들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전 지역에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일반 데이터센터처럼 창고용으로 지어져 가지고 또 외국 회사 임대용으로 지어 가지고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기업 창출 그리고 지역의 인재 양성과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계를 잘하셔서 지역의 인재,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AI데이터센터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이런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하고 관련된 창업기업들을 늘려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대학들과 연계해서 지역혁신거점이 될 수 있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잠깐만요.

저한테 이 질의를 보고 계속 이런 것 물어 달라고 문자가 오는데, 좀 전에 김현 위원님이 GPU가 국가 독과모에 6000개, 교육계·산업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몇 장이 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대학별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장 이광재 어쨌든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 몇 개, 카이스트 몇 개 이렇게 가지 않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그렇게 배분하지 않고 학계도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선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연에 지금 3000장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래서 지금 영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꼭 비교해 달라. 영국은 AI 리서치 리소스(AI Research Resource)라고 해 가지고 초보는 1만 개 GPU를 시간으로 하고 중소기업은 최대 2만 개, 본격 R&D에 들어가면 최대 15만 개 그다음에 AI·사이언스, 대형 과학은 5만 개에서 140만 개까지 쓸 수 있도록, 소위 중앙에서 쓰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거지요, 개개 기관으로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원리가 좀 다르던데 그것을 김현 위원님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따로 보고……

잠시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광재 예, 좋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1만 장의 GPU가 있고 사실 저희가 어떤 할인을 받아서 총 1만 3000장 정도를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슈퍼컴 6호기를 올해 설립하고 구축하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산업계가 더 많이, 스타트업들이…… 사실 지금 현재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AI 프로젝트에 산업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직접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최소화하고 스타트업들도 다양하게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그냥 기관에다 나눠 주면 절대 안 되고, 어디가 얼마 쓰는지 알 수도 없으니까 과기부에서 전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인선 위원님, 죄송해요.

다음은 대구 수성구의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오늘 언론에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38.6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에 대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게 가장 민감한 층이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30대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질의를 어떤 걸 할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가장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이 제도는 고환율이 계속되니까 아마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아이디어를 냈고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이인선 위원 금융위 역할이 한마디로 뭐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실물경제 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5월 27일에 어쨌든 삼성전자·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정했던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해외 사례하고 다른 게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이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도입이 돼서 진행됐는데 두 달 정도 지나고 바로 우리가 기본예탁금 강화, 모의거래 의무화 등 각종 보완책을 쏟아 낸 것은 결국은 정책 졸속이었다, 실패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규제를 붙이게 됐고 이런 규제가 덧붙으면서 금융수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규모 손실 가능성,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필요성 등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나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아닙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들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청와대 지시가 아니었다면 금융위는 적절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상품을 출시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했다고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리밸런싱하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너무 빨리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국은 투기판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투자자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지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오늘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대상이 아닙니다마는 6월에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는데 개인적으로 반성한다, 후회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저희한테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 수위·경위, 스트레스 테스트 및 시장 영향 분석 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말씀드리면 기관별·단계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거고요.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걸 주시면요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국내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은경 장관님 와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이인선 위원 장관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으로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맞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내주식이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14.9%로 정해져 있다가 5월에는 아예 목표를 20.8로 상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조정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현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추산으로 봤을 때 그냥 30% 정도 더 높아졌을 거라 보는데 추산이 가능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러니까 현재 국내주식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선 위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한 6500 정도의 코스피 지수라고 하면요 4월 달 기준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국내주식 비중이 25% 정도였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6월 말 정도는 30%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계속 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선 위원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평생 납부한 보험료로서 구성된 노후자금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당연합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원칙에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때 시기가 하필이면 5월 27일이다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나, 이 수단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 원칙을 바꾸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한테도 그런 문자나 이런 내용 질의가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설명 좀 드릴까요?

○이인선 위원 설명은 조금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할 게 있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자기 자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자산을 이기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책들이 한쪽에만 들을 게 아니고 야당이어도 정책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위 간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국립대 의대·치대 병원이 다 보복으로 이관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8월 20일로 지방은 이전이 됐습니다.

○이인선 위원 됐고요. 거기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치대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겨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이 질의가 끝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갑자기 몰빵으로 옮기는 게 맞을런지 아니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허브의 역할을 하니까 그다음에, 일어난 후에 옮겨 간 대학병원을 보면서 옮기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장관님이 생각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김윤덕 장관님 못 나오셨지요? 차관님 오셨네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입니다.

○이인선 위원 지난번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처음 결정한 게 2005년도다. 그렇지요?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공공기관 1차. 지금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5극3특을 앞세우면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것 분산을 하니 효과가 떨어진다. 이번에는 몰아 보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에 서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고 거기에 맞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효과가 떨어지니 몰아서 주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굉장히 의아해하고 준비하는 데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은 기관에서 하는데, 물론 대통령께서는 관심이 많으시고요 잠을 자지 않으시고요 걱정이 많으신지 굉장히 많은 위당을 주십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역별 배분 원칙 같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공개는 안 했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가 과연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과연 경쟁이나 혼란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건가? 그런데 심판해야 될 정부가 명확한 규칙을 알려 주지 않은 채 호루라기를 갑자기 불게 되면 굉장히 혼란하게 된다는 거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은 공개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도 좀 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대구는 금융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1차 이전된 신용보증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중소기업·제조업 비중이 99.5%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IBK기업이 오는 것이 금융정책이 모이는 것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북을 보면 교통·물류 기능이 김천혁신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첨단 제조도 구미에 몰려 있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안 오셨지만 차관님께서도 이런 공공기관이나 기능 집적에 대해서 지역 산업 연계에 대한 걸 잘 생각하시고 대구·경북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지금 현재 새롭게 구성된 지방정부와 또 관련된 기관들의 노조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이 부분들을 공론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인선 위원**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하여튼 지역에 1차로 가서 있는 그 시너지가 또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요. 부총리님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부탁드립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아까 질문받은 게 있는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대학병원의 복지부로의 이관은 제 생각에는 신속하게 해서 전체 국립대병원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진료나 연구·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대병원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 주신, 국내주식 비중을 왜 조정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매년 5월 말에 중기자산배분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똑같이 열어서 중기자산배분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내주식의 목표 비중을 조정한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이런 이례적인 변화를 평가해서 기금의 수익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개정 등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 중인 상황이고 국내주식의 수익률이 굉장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82.4%였고 26년 4월에는 59%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목표 비중으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연금 모수개혁을 하면서 저희가 연금의 소진 기간이 좀 더 늘어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루 감안해서 국내주식에 대한 목표 비중을 조정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인선 위원** 두 가지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노후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장관님께서서는 소통을 하면서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대 문제도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한꺼번에 가는 게 맞는지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대를 어떻게 할지도 좀 진지하게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저희가 서울대병원하고 소통하겠고요.

노후자금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항상 진지하게 해 주시는 이인선 위원님 말씀을 더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 고양병의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현 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11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파주에 오셨어요. 오셔서 타운홀미팅을 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저희 지역의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셨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대통령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접경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정법에 따른 또 환경보호에 관련돼서 제한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는 37%, 저희 바로 윗동네 파주는 76%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게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RDP 표현 많이 쓰는데 경기도의 GRDP가 꽤 되지요. 작년 기준으로 8위입니다, 전체 광역시·군에서. 그런데 경기도 GRDP에서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자료를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GRDP 1위 예상하시다시피 울산입니다. 8124만 원입니다. 경기도는 가운데쯤 있습니다. 8위입니다. 경기도가 약 43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고 있는 지방, 양극화에 의해서 피해 보고 있다고 하는 전남·경남 예를 들어 보면 전남 같은 경우는 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5551만 원으로서 4위, 경남은 4214만 원으로 9위입니다. 경기도가 8위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서울이 3위입니다, 8825만 원. 인천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1위입니다. 경기도보다 조금 낮은데요 3884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했을 때 대구가 GRDP 꼴찌라고 했어요. 꼴찌가 3098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00만에 육박합니다. 거기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끊어 보면 경기남부는 약 4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경기북부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북부의 인구가, 지금 김포까지 포함하면 4100만 원입니다. 김포는 한강 이남에 있지만 김포의 아래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북부로 통칭해서 불리고 있습니다. 4100만의 인구가 GRDP가 2900만 원입니다. 대구보다도 못하고 제주보다도 못하고 경남·전남보다 당연히 훨씬 못합니다.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같이 서울·경기·인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는 모든 발전 대책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지로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아파트만 들어옵니다.

오늘도 국토부장관이 서울시장 만나서 부동산대책 얘기하시면서 서울시장은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용산에 들어가지 않고 그린벨트 풀지 않고 경기도에 7만 1000호 이번 하반기에 공급대책 발표하겠다고 그러는데 7만 1000호 중에, 국토부장관님 안 나오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상당수가 경기부북일 것입니다. 또 고양, 또 남양주, 또 파주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오로지 아파트만 짓습니다. 도로교통망도 제대로 완비하지 않습니다. 대광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맞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기현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 정말로 아파트만 때려 짓고 오로지 저희는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성장동력이 없어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아시지요? 코스피 지수에 들어와 있는 200개 대기업 중에—경기북부에, 경기남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천 SK하이닉스 다 있습니다. 경기북부에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형편 없는, 경제적 성장이 침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로 제한하고 그리고 도로교통망도 만들지 않고 오로지 안정적인 주거단지로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국방부는 그래도 지은 죄가 있어서, 지은 죄는 아니지요. 국방부는 그래도 군사보호구역 합리적으로 해소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과 한 달 전에 국방부에서는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일부 해제 그리고 수색에 있는 수색비행장으로 인한 항공기보호구역 500만 평을 해제해 줬습니다.

그것만 해도 좋은 일이 많습니다. 뭐가 좋냐?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새로 짓기로 한 창릉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만 올라갑니다. 더 많은 주거단지가 제공이 되는 거지요. 기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문신학 차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기업투자 유치 위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 규제 특례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낙후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맞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수도권이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경기북부 지역은 기회발전특구의 기준에 신청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정은 우리가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올려야 지정을 하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 산자부장관님이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입니다.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계신 기획예산처장관님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다 같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산자부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그래 놓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올리지 않으니까 산자부는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방부처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경기북부가 이렇게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성장의

수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GRDP 2900만 원입니다. 410만 명의 그 인구가 전국의 꼴찌입니다. 분리해서 보지 않고 경기남부랑 섞기 때문에 8위 정도,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 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인구가 이렇게 지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산자부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기준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접경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청하는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약속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적극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지방시대위원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방시대위원이십니다, 장관께서. 만약에 이번에도 접경지역인데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점에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

법에는 있어요.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법에는 이미 있습니다. 법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대로만 해 주십시오.

김성환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이상고온현상은 이제 뉴노멀이 되어 버렸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안보 위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고온현상은 전력 안보의 위기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아무래도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니까요 전기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중심인데 해수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원전의 냉각 효율이 떨어져서 발전 효율이 7% 이상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이기현 위원** 영국도 가스발전 냉각탑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형 원전 두 기, 그러니까 2GW 정도의 발전이 줄어든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설비 과부하로 인한 정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 관련해서 전력 재난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는 원거리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원거리 대량 송전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송전설비 고장의 원인 중에 53%가 자연재해 플러스 설비 노후화입

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라오는 송전선로가 대부분 야산이라든지 아니면 큰, 대량의 산림 지대를 통과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뢰라든지 산불로 인해서 지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망, 바쁠 때도 항상 10%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언제 대형 산불이 발생하거나 낙뢰에 의해서 송전선로가 유실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드론 테러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이런 군사적 공격이 송전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전력체계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전력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력망도 예컨대 4차선 고속도로가 있다면 2차선 고속도로만 활용하고, 2차선 고속도로는 그런 비상시기를 대비해서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망은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비상상황에 상시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시간 다 됐는데 딱 짧게 말씀드리면 도심지역, 특히 수도권처럼 노후 아파트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노후 변전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것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더위에서의 전력손실이 크게 올라가면서 변압기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교체도 필요하고 또 전선의 지중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특별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위원님들이 한번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한전이 공급하는 것은 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오래된 변압기에 대한 교체는 이게 개인 소유여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장충금으로 교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오래된 변압기의 고장으로 인한 정전사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하게 지원은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의 변압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일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북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결국은 아마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마 젊은이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은 분당 판교잖아요, 집하고 일자리가 같이 있는 곳.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자리 문제하고 교통 문제, 주택 문제가 한꺼번에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세제를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셨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거주요?

○이종욱 위원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종욱 위원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실거주라는 개념이 양도세에 일부 있었는데 이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가지고 세제상으로 큰 차별을 두게 되는 정책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수단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거주와 비거주라는 것은 개인들한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자기 집에 살 건지, 다른 데 가서 살 건지. 그래서 국민들이 세제를 마음에 두고 수십 년간 인생 설계를 해 왔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 왔지요. 그런데 한순간의 세제 개편 하나로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니까 국민들 느낌은 ‘인생 설계를 다시 하라는 거냐? 이 집에서 세제 혜택 받으려고 5년, 10년씩 이사도 안 하고 살고 있는데’ 내지는 ‘그러면 내 청춘도 돌려달라’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이게 정책 수단으로 실제 작동 가능하나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자녀 교육. 그래서 확실적인 기준으로 나누다 보면 결국은 억울한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비거주 예외 사유를 제시했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양한 예외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부총리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좀 신축적으로 해 가지고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과감하게 넓혀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억울한 사람은 어차피 생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내세운 기준도 보시면 초등학교는 안 되고 중학교도 안 되고 고등학교 이상만 되고, 그렇지요? 치료·요양도 1년 이상이어야 되고 학폭 인정받아야 되고. 하여튼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억울한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여당 쪽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아예 없애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이번에는 거주용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학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철학이라서 통째로 없애기는 조금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 거주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청장님, 현재 양도세 같은 경우에 장특공제, 거주공제 받으려면 이것은 개인이 먼저 신청하는 거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개인이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PPT 화면 있나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웬만하면 주민등록 전출입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특별한 것을 인지하거나 할 경우에는 조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종욱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복불복입니까? 어떤 경우에 건별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국세청장 임광현 대체적으로는 주민등록이 요즘에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주민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주로 판단을 하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종욱 위원 이례적인 경우에?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종욱 위원 기준은 없는 거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세청장 임광현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인이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제보가 있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판단 할 때 확실적인 기준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부인은 사시고 남편은 주말에만 오세요, 주중에는 지방 가고. 그 경우에는 거주입니까, 비거주입니까? 따로따로 돼 있다고 해 보고요.

확실적으로, 지금 말씀 못 하시겠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제가 지금 가정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종욱 위원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남편은 주말에만 오고 주중에는 지방에 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남편이 거주입니까, 비거주입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그것은 양도세법에 나온 부득이한 직장 등의 사유가 있다면 거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5일을 비우고 이틀만 있어도 거주입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종욱 위원 월화수목금은 비우고 토요일만 와 있어도 거주냐고요.

○국세청장 임광현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법에 나온 부득이한 사유에 직장 문제로 남편이 지방에 있다면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종욱 위원 예,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선별적으로 보는 거고요, 사후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등록 여부를 정부24 앱으로, GPS로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장관님 안 계시지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이종욱 위원 모르실 것 같은데, 대광위원장님은.

국토부에서는 지난번에 왜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비거주 장남의 부정청약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현장 방문, 통신사 이용 정보, 카드 이용 정보, TV 수신 자료 이렇게 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법안하고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보도자료 낸 것 같습니다.

다시 국세청장님으로 돌아가서요.

국세청장님, 종부세까지 이제 실거주 아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종욱 위원 종부세는 누가 고지합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국가가 안내를 합니다.

○이종욱 위원 국가가 고지하지요? 양도세하고 다릅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종욱 위원 종부세는 실거주냐 아니냐를 국세청이 파악을 해서 몇 달 살았고 몇 년 살았고를 사전에 알아 가지고 고지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 만들고 있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지금이요?

○이종욱 위원 예.

○국세청장 임광현 그 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지요. 지금 세제 개편을 발표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와 다르고. 종부세는 6월 기준으로 정부가 인별 합산해서 11월 달에 고지서를 내야 되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이종욱 위원 그러면 각 개별로 거주인지 비거주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판정을 하는지 그것을 지금 작업을 하셔야지 이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뭔가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사후에 선별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제는 사전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고 앞서 나왔던 각종 애매한 사유들 이런 것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판정하는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개별 시스템으로 개인한테 고지서 날리려고 그러면 뭐 시스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종욱 위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개인의 주거주를 파악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북한의 5호담당제나 동물농장의 감시 시스템이 떠오른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지요.

결국 문제는 저는 거주라는 게 정책 수단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명확한 거주 기준과 예외 기준을 규정할 수도 없고 또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기도 힘들고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 같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자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너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살 때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몇 달만 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지금 1년 지났지요. 올해 말까지인데 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집을 살 때 공무원 허가를 받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당하고 왜 내 집에서 살지 못했는지까지 소명하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국민의 거주와 생활까지 들여다보는 나라가 앞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제도를 이렇게 국민의 생활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세제의 모습인가, 세정 당국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뒤돌아보십시오. 공정보다 더 큰 가치, 자유나 인권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주·비거주를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종욱 위원님은 너무 이것을 무슨 개인의 어떤 자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집이라는 게 살려고 사야 되는데 이게 보유하려고 사다 보면요 이게 보유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들고 갈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신축적으로 한다고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고 주민이 뭐, 가서 일일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을,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보유해 가지고 다른 의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인식만 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집이라는 게 보유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 사야 되고요. 이런 식의 현상을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들고 가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지점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욱 위원 제가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예.

○이종욱 위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현실은 보유하고 거주가 섞여 있지요. 투자 성격도 섞여 있습니다. 그걸 자르려니까 문제가 상당히 되는 거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거주해라, 경제학적으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종욱 위원 부총리 좋아하시는 잠재성장률의 증가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종욱 위원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게, 앞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제약됐고 경제활동에 큰 제약 요인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잠재성장률 떨어져요.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은 거주 중심으로 주택을 가져가자 하

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금천의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상 위원 국토부장관님하고 차관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존경하는 경제부총리님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국민들께 우리 정부는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주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겠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재 갖고 싶어 죽겠다, 우리 애한테 공부방 만들어 주고 싶어 죽겠다,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싶어 죽겠다. 이런 죽겠다에는 반응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런데 지하실에서 못 살겠다, 아토피 등 건강이 너무 해가 들어서 못 살겠다, 냉방과 난방이 안 되는 집에 사는 것,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무섭고 샤워시설이 없고 화장실이 실내에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밖에 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주거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돈이 부족하거나 돈을 다른 데 먼저 써야 된다 싶으면 제대로 내용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저는 이것은 주거 존엄이고 주거 인권이고 주거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반응해서 교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히 투표도 못 하는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 하는 분들이고 잘못하면 여론의 과대 대표될 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고 싶거나 집에서 홈시어터를 설치해서 영화 보고 싶다고 하는 반응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잘못이 없잖아요, 책임도 없고. 이 아이들이, 47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 주거빈곤 영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열악한 환경에서? 기사가 맨날 나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결혼을 하러 오셔서 출생을 하고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것에는 왜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지, 수많은 선진국이 부족한 3D 업종에 노동자를 그렇게 보충하던데 그 주거에 관한 신경은 정말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국토부장관께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지금 임기가 3년 9개월 남았는데 어떤 일정과 어떤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고요 마냥 미뤄만 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최저주거기준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들으셨지요? 최저주거기준이 뭐냐고 보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안전성 이런 얘기가 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하는 가구가 저렇게 많아요, 현재도.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사람들 수십만이고 말씀드린 대로 아동은 40만 명이 넘습니다. 지하·옥상·고시원 가구

90만 가구네요. 주거빈곤가구 비율도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3년간 주거 상향 실적을 봤더니 1년에 겨우 1만 2000, 1만 2000. 이래 가지고 수십만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하는 가구를 언제 줄입니까? 목표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것은 계획을 못 세우나요? 부총리님과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이것 혁명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요 최저주거기준을 봤더니 2011년 5월에 개정됐습니다. 15년 동안 개정이 안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때 한번 정해 놓고 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사이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새로 수립되고 아파트 가격이 수십억, 100억 대가 넘어가는데 이 최저주거기준은 15년 동안 변화가 없다. 아마도 그 기준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손보시겠습니까만 달라진 게 있는지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국정과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취약계층 임대주택 이주 촉진, 최저·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급여 확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유도주거기준은 아예 설정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연된 행복은 지금 존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침해되는 지금의 존엄을 내버려두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정부가 할 일이지요,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분들.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현재가 다들 살 만한 사람들이 미래를 대응한다고 기금에 관한 논의를 하나보다 하는데 이 주거기준 해소하는 것은 왜 목표가 안 되는지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이번의 예산정책처 지적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비주택거주자 관련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이 실적이 저조하다, 공공주택으로의 이주 의사가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주거 상향 실적이 확대되도록 사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분들은 주로 투표도 못 하고 뉴스도 볼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알아보면 진척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둠을 보려면요, 빛을 비춰서 어둠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이 정확히 안 보이는 겁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장관이 안 오셨는데 작년 8월 회의록 때도 장관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거나 정보 파악하는 방법 확대하겠다, 국토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겠다, 작년 8월 얘기예요. 올해 2월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셨나 하면 쪽방, 옥탑방, 주거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내겠다. 그런데 국토부차관은 8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선순위는 뭡까요? 적어도 아이들 그다음에 노인들, 장애인분들에 대한 주거빈곤을 해소하는 것, 게다가 법에 규정도 있어요, 최저주거기준이라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구를 우리가 20년 후에는 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1년에 몇 가구씩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 정부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3년 9개월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어받아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말씀드린 이주 여성분들, 아이를 낳고 사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주거를 제공하는 게 세계 선진국이고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그 정도는 야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라면? 그런데 그에 비하면 국토부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의 1순위, 2순위가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식주라는 게 인간의 기본권리인데 요새는 의식주라고 하기보다는 ‘이식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移), 이동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 관점에서 우리 기획예산처장관님과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권 문제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또 식 부분은 먹거리, 생활물가 아니겠습니까. 비싸면 제대로 섭취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 주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격의 문제 못지않게 최저주거기준 그리고 주택에 정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 목표는 수치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

AI, 반도체, 데이터,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식주의 최저의 기준을 모든 국민이 넘어가는 것에 기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 마음의 현재 불안과 불편, 불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과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담은 말씀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이기도 합니다마는 저도 과거에 옥탑방에서, 반지하에서 살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이런 주거기본권 또는 최저주거기준 문제 관점에서 토론회도 여러 시민단체하고 개최를 해 봤고 관련된 법안도 좀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그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기적·장기적 목표하에 향후 재정 투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을 향상시켜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에 4차 주거급여,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지, 3년 단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29년까지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선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주거의 품질과 관련해서도 아마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하반기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도개선을 할 거고요.

저희 기획예산처는 주로 주거급여 관점에서 재정 투자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해서는 크게 보면 임차가구가 있고 자가,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와 관해서 저희가, 이걸 소위 기준중위소득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이번에 저희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6.7%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임차가구들과 관해서 저희가 아마 적게는 일만 원, 많게는 한 오륙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가가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고치는 집, 중간 보수, 많이 고치는 집 이게 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선 시기가 있고 또 우

리가 지원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가슴이 찡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금년에 아마 4만 불 이렇게 갚 겁니다. 그런데 생계·의료·교육은 진짜 어느 정도 해결이 많이 됐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주거입니다, 주거. 특히 주거 중에서 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국가가 어떻게든 이분들을 빨리, 정책 우선순위로 빨리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정부 들어서는 공공임대를 좀 확대한다든지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한은. 기획예산처장관님도 동의를 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주택을 해서 LH든 공공기관에서 해서 이런 분들의 주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쪽방촌을 갔다 왔습니다. 40도 가는데 쪽방촌 가 보고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아주 열악한 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보고 그런 쪽에 저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 정부 정책 방향도 주거복지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주거를 해결해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있는 한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국토부하고도 더 협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광재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기획예산처장관님하고 재경부장관님의 그 말씀들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날아가는 새도 비록 비를 맞아도 집이 있는데, 사람에게 집이 주는 고통과 안도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찬 전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경남 창원성산의 허성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 중기부장관직무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경남 일대에서 충격적인 정책금융 대출 사기 사건 적발된 것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3000원짜리 노트 한 권을 140만 원짜리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허위 수출 실적 만들었지요.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혁신성장촉진자금을 타 낸 그런 전문 브로커 사건입니다.

이게 약 30억 정도 그렇게 일종의 사기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짜리 노트 한 권으로 대한민국 중기부의 정책자금 심사망을 뚫어 낸 거지요. 영세 상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정책자금이 서류 조작 몇 장에 불법 브로커들한테 돌아간 사건입니다.

문제는 정책자금뿐만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부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시고요, 그림.

(영상자료를 보며)

부정수급 현황 및 실태 이런 것 보면 경찰청이 형사입건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만 최근 4년간 9063억 원, 연평균 2260억 원에 달합니다. 브로커 개입을 통한 허위 신청, 가짜 증빙 사례가 급증한 결과지요.

또한 권익위가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 이행 실태 점검 자료를 보면 중앙 부처에서 발생한 총 부정수급액은 507억 9500만, 건수는 5만 193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중기부 소관 사업에서 발생한 건수가 6661건입니다. 금액은 229억 5000만 원이고요. 중앙 부처에서 중기부가 자랑스럽게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 부처 전체에서 발생한 금액의 45.1%고요 압도적이지요. 그런데 환수된 금액은 29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12.9%에 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규모나 건수로 보면 노동부가 항상 1등이었는데 작년 2025년에 드디어 중기부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혈세가 가장 많이 샌 곳이 중기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기부가 부과한 징벌적 제재부가금은 고작 16건의 10억에 그쳤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290억이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 보면 중기부는 너무 솜방망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 브로커 근절을 촉구했고 또 그 결과 중기부가 애를 많이 쓰셨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올해부터 개편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웅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 점은 노력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신고센터에 530건 제보가 들어왔고요.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9건, 1.6%에 불과합니다. 비율로도 보면 100건 중의 98건이 주의 공문이나 자체 종결로 끝나 버리니까 어느 브로커가 중기부의 조치에 겁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앞 정부에서는 별 관심도 없었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 좀 제대로 척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각오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웅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수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건 예전에 코로나 손실보상금 오지급에 따른 환수액이 거기에서 229억 중의 220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정수급과 관련 없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오지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불법 브로커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연초부터 매우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고, 수사로 이어진 경우가 적은 것은 현행 규정상 수사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래서 제가 대책을 좀 말씀드리는 게 강력하게 유관 기관하고 협동하는 그런 태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웅석 예, 맞습니다.

○허성무 위원 예를 들면 관세청, 국세청, 경찰과,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웅석 예, 금감원하고도 같이……

○허성무 위원 예, 금감원하고도 같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브로커 개입이나 허위 서류 조작 정황 포착을 위해서 자체 내에 엄격한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법적 개정이 필요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허성무 위원 그다음에 이게 결국 밝혀지면 환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 세금인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허성무 위원 그러면 환수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수사 및 공조로 기소하기 전에도 몰수·추징보전 이런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일단 저희가 브로커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만드는 데 우선하고 있고 또 피해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을 수혜한 기업에 대한 환수 여부는 건별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허성무 위원 당연히 그럴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대비를 해 두셔야만이 환수율도 높아지고 또 직원들의 일에 대한 긴장감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장관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시범사업이 올해 6개월 정도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요, 조금 중단될 그런 상황입니다.

○허성무 위원 예.

그림을 하나 보여 주시지요.

원래 1차 시범사업이 2024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저걸 하면서 고도화해서 26년에 2차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25년 12월에 지불혁신 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저리로 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 추진단에서 그냥 뭉개고 제대로 안 하니까 원래 하던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차 시범이라고 말도 못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방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10개 병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허성무 위원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탈락도 되고 진행이 잘 안 돼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9월까지 정도 집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27년부터 본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3개월이 비게 되고 지금 부처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하는데 1월에 하면 3개월 공백, 3월에 해도 6개월 공백, 만약에 6월 상반기 마지막에 하면 9개월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그리고 실제 27년에 정상적으로 본사업을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27년에 본사업을, 그러니까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

는 걸로 기획을 하고 지금 공청회 하면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입하는 걸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이게 부처에서 제때 신속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생기는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무래도 그 시범사업 요양병원에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공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뿐만 아니라 첫째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이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제일 큰 피해자고. 둘째는 장관님 말씀처럼 이분들을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의 문제가 있고 또 병원도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정부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복지부 공무원들하고 지금 한 2, 3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결단 필요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아무래도 예산의 부족 문제가 좀 있고 내년도 건강보험으로 하는 사업 하기 전까지의 예산 확보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올 9월에 종료되고 나면,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3개월, 기본 3개월 공백은 생기는 겁니다. 이 3개월 동안 그러면 환자와 환자가족과 돌봄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3개월에 대한 최소 대책을 지금 당장 세워 주시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허성무 위원** 사실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된 것에 귀속, 책임의 귀속은 복지부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번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장관님 자꾸 빠져나가시려 하는데요,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복지부에 예비비도 있는데, 물론 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 보면 연말까지 3개월 정도는 15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 한 50% 쓰고 50% 남아 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사용을 해서라도 정상화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데, 좀 자신감 있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현재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말씀 주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 예산 상황과 또 시범사업 계획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성무 위원** 장관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이것은 정부가 하던 사업이거든요. 정부가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중간에 담당이 바뀌고 이러면서 정부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인데, 그러면 정부가 완벽하게 지금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질의는 해양수산부장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강경숙 위원 장관님,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이 아직 안 나오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공약에 항만과 같은 그런 SOC를 조기 완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과제를 실현하려고 하면 현대차 투자가 유치가 돼야 되는데 가령 로봇 제조 공장이라든지 AI데이터센터라든지 수조 원의 플랜트, 이렇게 앵커 산업 유치가 신속하게 실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산업 생태계가 잘 작동을 하려 그러면, 이를테면 로봇 부품을 반입도 하고 또 다 완성된 로봇을 수출도 해야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물동량이 되는 그런 어떤 무역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또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학공업 생산품 이런 항만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게다가 새만금 산단을 보면 이차전지 입주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이리공고가 있는데 지금 이차전지의 마이스터고로 지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력들도 양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생산품 수출, 수요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렇게 새만금 배후 산업을 위해서 새만금 신항 개발이 진행 중인 사실은 장관님께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강경숙 위원 여기 한번 그림 보시면 저 앞애가 접안시설입니다. 저 앞애가 접안시설인데 8월에 완공 예정이고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곧 개항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저기 앞애가 접안시설인데 저 뒤에 있는 배후부지가 보이시지요,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강경숙 위원 그게 아직 조성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 뒤의 화면을 보시면, 여기 잘 보시면 그 그림이 저렇게 설계도, 평면도로 나온 것인데 빨간 선이 아까 말씀드린 접안시설이고요 그 뒤에가 배후부지입니다.

그런데 접안시설이 그 폭이 200m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면 배후부지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항만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200m 안에서 무슨 이를테면 포장을 하고 화물을 야적한다든지 어떤 식품의 신선도를 위해서 냉장·냉동시설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후부지가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0% 민자 유치로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면 민자 투자자를 발굴도 해야 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가져야 될 것이고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그 투자 유치 계획을, 그 투자 계획을 제대로 수요를 하려 그러면 2030년도까지 이 배후부지가 제대로 조성이 되어야만 그게 항만이 정상 가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변경고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즉 그럴 때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개발을 재정사업으로, 그러니까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걸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후부지가 지금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설토 투기장입니다. 말하자면 바다에서 흙을 끌어다가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고……

○강경숙 위원 맞습니다. 넣고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이게 배후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는 재정 전환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박홍근 장관님, 이게 올해 완공 예정인데 부두하고 진입로 개발하는 데 1.1조 원을 국비로 투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자 방식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면 1.1조가 매몰돼 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장관님께서도 좀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후부지 개발은 말씀하신, 이 건 제2차 신행만 건설 기본계획이 2040년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19년부터. 거기에 민자 개발사업으로 애초에 고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투입을 통해서 배후부지를 개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건데 항만 건설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방파제 같은 것은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재정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요.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 그동안 재정 투입의 원칙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해 왔는데 좀 전에 해수부장관께서…… 우선 이것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진단을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고요. 그전에도 이미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새만금에 현대차 9조가 여기 앵커산업이 유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30년도까지 그렇게 항만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여기서 유치를 해서 제대로 운영할 이유가 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보시지요. 여기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이 있고 또 공사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없는 걸 보면 평택·당진항은 32.3%고요 포항영일만항, 목포신항, 보령신항은 재정사업으로 100%가 있는데 새만금신항만 민자로 100%인 거예요, 재정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새만금은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름 굉장히 야심작인데, 왜 그러냐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서해안권의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을 또 만들기도 하고 환경해권 물류나 그런 어떤 산업의 허브를 만들기 위한 굉장히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접안시설 그 뒤에 있는 배후부지가 36만 평이고 그것이 2056억이 든다고 하니 민자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민자 대신에 재정사업으로 좀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항만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해수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항만도 지정을 해야 되고, 우선 항만 구역 지정, 항만 배후단지 지정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쳐서 저희에게 재정 전환의 타당성을 요청해 오면 이게 이런 형평성이나 절차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현 정부의 주요 사업이라는 국정과제에도 있습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고용부차관입니다.

○강경숙 위원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43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34%입니다. 그런데 청년 고용지표에서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데 전체 고용지표하고 청년 고용지표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나 하면 청년실업률

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이기도 하고 일자리 고용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청년 때에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어떤 뇌관으로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쉬었음 청년 그리고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문제가 사회에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큰 문제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908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고용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23년에는 83%이다가 25~26년에는 66.5%로 툭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청년을 연결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고용이 유지되지를 않고…… 지원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이후로 중소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고 본인의 역량도 좀 기를 수 있도록 해 주고 뭔가 눈에 보이는 정량화된 지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방증이 아닐까 싶어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오전에도 김남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같이 더해져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용 유지를 위한 장려금과 함께 또한 취업한 청년들이……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지목하고 싶은 것은 고졸 청년입니다. 고졸 청년인 경우에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역시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예산도 되게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직업계고 학생의 추이가 보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줄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예요. 왜 대체가 직업계고 진학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취업이 아닌 대학 진학으로 왜 그렇게 빠지는 것인지 그리고 왜 고용 유지를 안 하고 자꾸 이직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요.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AI 때문에 일자리도 되게 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자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의자놀이를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의자놀이를 할 때 100명이 의자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다가 음악이 딱 멈추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야 되는데 그 의자 수가 10개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 10개에 앉기 위해서 경쟁

력을…… 이겨야 해, 경쟁에서 너네들이 살아남아야 돼'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인 거지요. 그러니까 의자가 10개인 것을 20개, 40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AI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최근 4년간 28만 5000개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어든 일자리에 아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경쟁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일 거고 AI의 활용, 직무역량 강화라든지 시대에 맞는 고용이 제대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지요. 그냥 아무나 일자리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용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저희가 AI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취업계 고교 아이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그것도 관계부처랑 교육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이건태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경기 부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중소벤처부장관님, 일단 같이 좀 들어 주시고요 주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양극화 해소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 중소기업이 829만 개 총 기업의 99.9%, 중소기업 근로자가 1911만 명 총 근로자의 80.4%,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비율이 54.7%, 대략 이 정도가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예,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이걸 좀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부분에서 돌파구 구멍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돌파구 구멍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적정임금제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제를 기능등급제와 연계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저는 적정임금제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등급제를 반드시 연계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임금제는 현장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등급제는 건설업의 숙련기술 노동자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임금제와 동시에 기능등급제를 같이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임금제를 빨리 도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능등급제를 전제로 함으로써 기능등급제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기능을 등급을 매기고 또 개개 근로자들의 기능등급을 분류하고 인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지난한 절차인데 기능등급제가 안 되면 적정임금제 도입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되면 제도의 취지, 목적이 다른 두 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지금 당장 시급한 적정임금제 도입이 늦춰지게 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현실인 상황에서 발주자가,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노무비가 책정돼 있는데 발주자가 책정해서 지급한 그 노무비가 총액으로, 1차 수급업체 또는 2차 하수급업체 현장까지 정확하게 총액으로 지급이 되고 유출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만 된다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장 근로에 우리 국민 근로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성하려고 하는 양극화 해소에 건설업이 워낙 큰 포션을 차지하니까 공공 건설 현장부터 이것을 도입하면 굉장히 큰 구멍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가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왔고 곧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능등급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능등급제가 도입이 어려워지면 그에 따라서 적정임금제 도입도 어려워진다, 그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양극화 해소 그다음에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 데는 굳이 기능등급제가 없이도 가능하고 오히려 늦어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억짜리 공사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총노무비가 산출내역서상 700억이다 그러면 발주자가 책정한 그 700억이 현장 근로자들한테 총액으로 700억이 지급만 확보가 되면 되는 것이지 발주자가 연인원으로 35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현장의 하수급업체가 30만 명을 쓰든 40만 명을 쓰든 그것은 현장 업체가 현장 사정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고 우리의 관심사항은 책정된 700억이 노무 이외에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만 철저히 제도적으로 확보하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해가 되셨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건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그걸 병행 추진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용역 하고 있고 시범사업도 곧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모든 문제가 또 저출생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없고 주머니가 힘들고 그래서 내수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멍을 내야 되는데 가장 쉽게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게 공공 건설현장의 적정

임금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최근에 8월 13일 날 서울과 수도권에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부천에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만약에 여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교통대책을 같이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것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중에 혹시라도 된다면 토지거래허가제도 신속히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건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돼 있지만 실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발표가 있으면 바로 해제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25년도에 당초 예산이 3225억이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해 가지고 전용이 689억, 추경이 556억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22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에도 그랬습니다. 24년은 좀 특이한데 HUG에서 사업 지원을 신속히 못 해 가지고 특수하게 발생한 경우고. 결국 예산을 너무 적게, 과소 편성해 가지고 늘 추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돼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로주택조합들은 자금이, 한 6월이나 7월 달 돼 버리면 예산이 떨어져 버리니까 받을 동동 구르고 결국 일반은행에 손을 내민다든지 이런 민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HUG의 원도심 재정비 사업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금 용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태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상의해서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적 조치는 최대한 취하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태호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속보가 났는데요. 네팔에서 홍수가 나서 그곳에서 수력발전소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인가요, 기후에너지부하고 그다음에 두산에너지빌리티…… 남동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인 8명은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명은 고립되어 있다고 하는데 빨리 소재가 확인되고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모든 수단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주택정책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 문제를 두고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여기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지금 청년 보금자리론 있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청년들한테 생애 최초 4억 이하 비아파트, 그러니까 비아파트니까 빌라 이런 거겠지요, 구입할 때 LTV를 80%까지 허용하겠다고 했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80%까지인데 지금 서울 연립 다세대주택의 평균가가 4억 원이 훨씬 넘는 거 아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서울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3.7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보시지요. 이게 언론에도 났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보면 물론 평당 좀 다르겠지만 전용면적이 60~85㎡ 그 사이는 5억 4201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 이하는 3억 얼마인데요. 저희가 언론에 난 걸 보면, 다 분석을 해 봤어요. 진한 부분은 훨씬 그 4억보다 높아요. 그리고 조금 옅은 부분이 이제 4억 이하인데요, 다 외곽입니다. 그래서 강남은 그림의 떡이지요. 이렇게 청년들을 외곽으로 밀어내는 정책인데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토부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이런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녀한테 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 전세금 현금으로 지원해 주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원이라고 하면……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6억 5000만 원이라는 전세금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이런 부모 도움 없이는 은행권에서 그만큼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를 사야만 그것도 LTV를 80%까지 허용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4억 이하가 아니고 대개 4억을 넘는단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장관님 같은 부모를 두지 못했던 말이에요. 부모 찬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청년들한테 이 서울아파트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걷어차고,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4억 이하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지금 그런 수요는요, 청년들한테는 보금자리론이라고 별도가 있어 갖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 나갔고요. 그런 경우는 아파트……

○조배숙 위원 아니, 나갔는데, 나간 건 나간 건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하고는 싶은데 이게 4억 이하만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저는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기존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새로운 선택지를 찾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조배숙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4억 이상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4억 이상이 돼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그리고 작년에도 12조 원 정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보증자리를 이용해서 아파트 사고……

○조배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조배숙 위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오늘 오세훈 시장님 만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 회담 전후로 조금 혼란스러워요. 회담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 신규택지 계획에 용산공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회담 직후에는 ‘용산공원 내 주택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진의를 전달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 용산공원법이 바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입장’, 이렇게 상당히 모호해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10월 정도에 신규택지 구체적인 지역 발표하는 것 안에는 용산공원은……

○조배숙 위원 아니, 올해는 아닌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들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내에 아파트를 짓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문제는 첫 번째로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법이 바뀌어지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조배숙 위원 법이 개정이 되면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용산부지를 반환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뜻을 박았어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국가의 책무로 4조에다 뜻을 박았어요. 노무현 정부의 그 결단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약했는지 아시지요? ‘용산국가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완전 개방 추진’, ‘용산공원을 대한민국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면 좋겠지요?’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용산공원의 공원을 백지화하고 거기를 전체 집을 짓겠다고 하면 맞겠지만 용산……

○조배숙 위원 제가 그 얘기 압니다. 어린이정원 일부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린이정원이라고 특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언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여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용산어린이정원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서 거기다가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지요. 용산어린이정원이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준 거고 거기에다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그 용산공원 본체 안에 원래 장교 숙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지,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공론화해서 이걸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로 국토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더더욱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 후에 국회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조배숙 위원 자,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정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 지금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그건 사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까지 한 번도 어린이정원을 집을 지어야 한다고 논의된 적이 없고 용산공원을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게 현재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조배숙 위원 자, 그런데요 지금 훼손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훼손된 지역이라 하지만, 그리고 훼손된 지역이니까 거기다 새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훼손된 지역, 그러면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과거에 그 훼손된 그런 상황만큼 그 주택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변경이 된단 말이지요, 건설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용산공원의 10%만 활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 활용한다고 변명을 하지마는 이게 하나의 어떤 자체적인 국지기후를 형성해서 폭염과 집중호우를 완충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적 10%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태시스템 전체의 연결성을 악화시킨다.

PT를 띄워 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파리나 런던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도심 그런인프라

를 오히려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젤리제 거리를 거대한 정원으로 만들고 런던의 절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녹색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미래 허파로 남겨야 될 땅을 주택용지로 돌리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우리 당의 의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센트럴파크 녹지를 줄이면 녹지를 줄인 만큼 정신병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용산공원이 그래도 마지막 우리의 남은 녹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대리 정태호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구윤철 경제부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과세를 하려면 세율도 세율이지만 세율보다 먼저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바로 세워야 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준호 위원 세율이 정교하게 설계돼도 과세표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있다면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세표준을 결정짓는 핵심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중부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잠깐 보시면요, 중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지금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중부세 완화 등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방안과 맞물려서 95%까지 인상이 됐다가 부자감세 기조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법정 최저한선인 60%까지 지금 낮춰진 상태입니다.

비율 60% 적용은 과세표준의 40%를 시행령으로 증발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세율을 아무리 손보더라도 과세표준 기준인 이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상화하지 않고서는 공정과세를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율을 법정 최저인 60%로 지금까지 이렇게 묶어 둔 것을 보면 공시가격이 안정화되어도 세금이 과도하게 감면이 된다, 중부세라는 세목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게, 이러한 측면에서 이 비율을 60에서 80% 정

도로 되돌리자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다주택자들 경우는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70, 80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현실화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정 홍보의 기초에 있어서도 이렇게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건넸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과세표준 반영비율을 정상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렇게 과세표준이 세율과 함께 세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데 시행령 하나로 95%에서 60%까지 이렇게 널뛰게 한다는 게 과연 과세권이 지금 남용되지 않는 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세금이 급등락한다라고 하면 조세정책을 신뢰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행령 편의주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정권 들어서 재정경제부가, 예산처가 분리돼서 재정부에서는 조세정의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처럼 이렇게 세액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이런 지표를 핵심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행령에 의존하기보다 법률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조세법률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도 기준시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등락하다 보면, 어떤 게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것을 법률로 고정시켜 놓으면 또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신축적인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정준호 위원 신축적인 측면 그다음에 시장 대응의 신속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정태호 간사, 이광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준호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지만 저도 법을 전공을 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게 시행령보다는 어쨌든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주기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상설특위 형태로라도 해서 조세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이 관련된 지표를 법률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부총리께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한번 간단히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공시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했을 때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게 법률로 정해지다 보면 또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 중인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기왕에 부총리님 재직 중에라도 이런 고민이 실질적으로 한번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IU에서 카지노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9월 내에 입법예고 하겠다, 연내 실시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정준호 위원 지금 PPT를 잠깐 보면요, 카지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금융거래 수단은 기존에는 칩 교환과 관련된 내용만을 했었는데 티켓, 토큰, 바우처 추가하고 기존 1회 기준이던 거래액을 일일 누적으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에 출입 관련된 규정이 없었는데 연간 3일 이상 출입 시 고객 확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국인 카지노가 이렇게 되면 좀 위축이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면 회원제를 강제하고 신원정보, 게임 내역을 기록할 경우에 내국민 감소가 되면 합법적인 도박장을 이용하던 국민들이 불법도박, 해외 원정 도박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당시에 강원랜드가 폐쇄가 됐었는데 불법도박 사이트가 창궐을 했던 그런 통계가 존재를 하고요. 2022년 사감위 실태조사 당시 기준으로 지금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서 1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 규모임이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매출을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의 매출이 높느냐 안 높느냐는 사실 제 관심사는 크게 아닌데 문제는 카지노 매출액의 공익부담금 비율이 좀 존재를 한다는 거지요. 13%를 폐광기금으로, 10%를 관광기금으로, 0.35% 정도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납부 중이고 지금 매출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 부담금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폐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 정선·영월·태백·삼척에 총 177억 원 정도가 배당이 됐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금을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인당 1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타격이 폐광지역 이 4개 시군 재정에 영향을 끼칠 게 눈에 뵈히 보입니다. 관광기금의 축소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청소년 도박예방과 관련된 재원이 줄어든다는 건데, PPT를 보면 청소년 불법도박이 최근 10년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해서 매년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부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고민하고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에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번 제도 개편은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이용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할 때 그리고 1인 합산 300만 원 이상 고액 거래 이 정도인데요. 그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카지노 업권이라든지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 가

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대정부질문 할 때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께 서남권 산업투자청이라고 하는 부분의 설립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김 전 총리가 당신이 부산 동남권투자은행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권역으로도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했고. 존경하는 이광재 예결특위 위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부산 동남권투자은행 모델처럼 지역개발 뒷받침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금 법안으로도 고민이 되고 있고 충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투자공사법 이런 부분들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는, 5극 3특 기조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는 권역별 산업은행과 같은 이런 모델, 부총리께서도 한번 제도적으로 설계에 꼼꼼하게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서남권에 반도체로 대규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조직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하여튼 정부 내부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지금 TF, 필요하다면 어떤 조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군위원의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어제에 있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의 큰 벽에 가로막혀 있을 때 직접 또는 각 부처별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방은 국가사무다 그리고 군공항을 옮기는 것이 맞다, 더불어서 정책적 결단과 재정적 여력의 문제이고 실현 가능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혹시 들어 본 적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대통령께서도 대구 군공항 이전에 대한 대구 지역의 열망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지고 했던……

○강대식 위원 그런데 어제 부총리님께서 말씀 중에 지자체의 노력이 좀 약해서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 제 전화통이 어제 오늘 불이 났습니다. 부총리님의 인식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그 말이.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10조 원 이상의 선투자와 또 10년 이상의 장기

회수 이 문제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의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은 부총리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사실은 거의 다 모두가 실패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로만 강화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의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과거 한 6년이나 10년 전하고는 너무너무 많이 좋지 않다, 죽어 가는 상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건데, 군공항 이전 문제가 이렇게 멈춰 섰고 또 기업들은 충남 이남으로 가는 의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부총리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기존의 국가산단의 산업용지가 미분양 상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강대식 위원 LH에서 만들어 놓은 산단도 지금 수요가 없어서 30개 중에 10개 산단만 갖고 있고 20개 산단은 사업 여건만 검토하고 지금 손으로 조물락조물락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장관님께서 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일부 대기업 유치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요 대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때문에 못 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 때 기부 대 양여 재산 이외에 종전부지 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종전부지 개발비가 대구의 경우는 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6조 원을 종전부지 조성비 국가 지원에 대해서 너무 격렬하게 그때 기획재정부가 반대를 해서 특별법 안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LH조차도 종전부지 조성비로 인해서 대구 사업에는 참여를 꺼려한 거 부총리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광주에 이 물꼬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물꼬를 다 터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광주공항하고 대구공항하고 이렇게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된다. 부총리님 말씀하신 부분인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 자체가 대구·경북 시도민한테는 굉장히 참 역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도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강대식 위원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데 내가 토를 달아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한마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의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시도민들한테는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인데 이런 말씀들을 좀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설전을 벌이고 서로 양극으로 가는 이런 어떤 투쟁이 아니고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께서 여태까지, 국토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나 여러 장관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정부가 방법을, 어떤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나는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강대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런데 그게 지역에서 굉장히 열망이 모아져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야지만 군공항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간 공항 추진단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온 시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온갖…… 여기에 대구·경북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데도 이해해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강대식 위원 그다음에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5년도에 추경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강대식 위원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 편성한, 약 37조 정도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1차, 2차 이렇게……

○강대식 위원 합쳐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합치면 한 4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강대식 위원 그중에 국채 발행한 게 한 75%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채……

○강대식 위원 PPT 좀 띄워 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차 같은 경우는 세입이 줄어들 것 같아 가지고 감액 추경까지 했습니다.

○강대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추경 편성의 국가재정법의 사유에 대해서는 저보다 부총리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시급성이라든지 연내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강대식 위원 그런데 편성된 집행률에 있어 가지고, 집행 부진 사업을 한번 보면 실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58개고 50% 미만 사업이 36개고 하나도 집행,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14개나 있습니다.

당해연도 집행해야 될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당초 예산, 추경이…… 불가능할 때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게 거의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너무 부진한 사업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졸속으로 편성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작년에 추경 집행 점검을 했을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밤새워서 지금 이거 조사를 한 건데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럼요, 알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저조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보면 설계, 기본계획 수립 또 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 절차가 지연됐다거나 혹은 또 장비 도입

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 절차가 미흡했다거나 용자 사업의 경우는 수요 예측을 잘 못했다거나 이런 안 된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부분 추경 재원이 빚을 내 가지고 국채를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라든지 아니면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더 좀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사항들 자체가 실집행률이라든지 조정 부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전용 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크게 국방부의 어떤 예산을 보면 거의 지금 76.3% 정도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전용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강대식 위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용도에 맞지 않게 방향을 바꿔서 쓰고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전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것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정감사 시에. 정말로 그런 것 같으면 불용으로 남기는 게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지적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좀 더 잘 대비도 하고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추경을 편성하는 데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최대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의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의 조인철입니다.

어제는 총리님하고 5국 3특 관련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광역교통망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5국 3특 핵심과제 중에 권역별로 60분 교통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 과제로 들어 있지요,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이거 지금 추진 주관부처가 국토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로 돼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국토부가 주로 이제……

○조인철 위원 거기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망 계획 제도를 도입하겠다, 권역별로. 권역별로 대중교통망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이 5대 특광역시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시군과 같이 엮어지는 이런 광역교통망을 염두에 둔, 현행법상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돼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을 수립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체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법적 체계는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현행 법적 체계 내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조인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행법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그 주변 교통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광역교통망을 세워라,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한계점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했고 어제도 보면 총리님께서 잘 챙겨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제 용역을 좀 해 보겠다,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 용역을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 도입 여부를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어떤 광역교통망을 한번 그려 보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위원님, 현재 기존의 대도시광역법에 따르면 이게 통합되니까 이제 법체계에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법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5극 3특 체제를 발전시키는 초광역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0분 생활권을 위해서 대중교통망 구축계획이 새로 또 짜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으로?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 내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담기 위한 용역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용역은 그 제도, 그러니까 법 개정이야 용역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법 개정하는 것 플러스 각 권역별로 5극 3특에 적정한 광역교통망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남·광주 지역의……

○조인철 위원 전남·광주 지역만 한정해서 일단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초광역권 광역교통 발전연구 이렇게 되는 거지요. 초광역권에 대한 준비도 하고 구체적인 광주·전남 지역의 초광역권…… 이제 실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광역교통망을 한번 그려 보겠다 그 내용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조인철 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광주공항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고 그게 생산 시기, 가동 시기를 따져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 물류망을 어느 정도 갖춰 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주려면 광역교통망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고 60분 내 생활권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을 들여서 많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기간도 상당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 차분히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에 특정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계획을 혹시, 총리실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논의하거나 보고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고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광주권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광역권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 기존의 법체계와 또 다른 초광역권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초광역권이 앞으로 통합이 되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막 만들어진 초광역권에 대한 소위 말하면 광역교통망계획을 어떻게 짜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총리실 차원에서 그 지원위원회가 있다면 저는 거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게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인철 위원 광주통합특별시로 한정해서 용역계획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만은 지원위원회에 상정해서 같이 논의하거나 보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광주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광주도 충분히 우리가 지원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적어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광주에서 통합 이후에 그것까지 세밀하게 챙기고 있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같이 검토해서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잠깐 좀 여쭙보면, 그제 광주공항에 임시 국제선이 개항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과 또 여행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마는. 아닌 거지요? 10월부터 개항한다고 그랬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0월이면.

○조인철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만 위원님, 그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현재 12·29 참사에 따라서 무안공항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광주전남 지역의 여행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안공항을 개항하든지 아니면 임시로 하는 것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토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은 아닌 거지요?

고맙습니다.

방미통위원장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님.

○조인철 위원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많이는 못 보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조인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유튜브에 보면 상당히 많은 AI 영상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AI가 작성한. 그 통계 자료 보면 거의 둘 중의 하나밖에 구별을 못해요, 이게 AI가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인 건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태인 데다가 더 심각한 건 아이들입니다.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AI 챗봇을 많이 쓰는데 94% 이상이 그걸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고 개하고 어려울 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AI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은 거의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게. 제가 법을 몇 개 발의는 해 뒀었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심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재를 가한다든지 선별 작업들도 거의 굉장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제가 여쭙본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호주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 SNS를 금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말씀에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셨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AI뿐만 아니고 정보 환경이 변한 데 대한 해악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걸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나라들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AI뿐만 아니고 다양한 정보통신, SNS 규제 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인철 위원님께서 입법을 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입법들이 제안돼 있고 국회에서 입법 지원 활동들을 저희들이 하고 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나 청소년 다음에 학부모들, 교육 관계자들의,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반기에는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인철 위원 그때 이후로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의견 수렴 과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 지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진도를 좀 빨리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재 조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송미령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제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쭙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여쭙보냐면 여기에 부총리님도 계시고 기획예산처장관님도 계시고, 좀 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자고 하는 그 뜻입니다.

우선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공직자·군 수까지도 이 수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정부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당초에는 10개 군으로 했다가 금년도 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7개 군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7개 군을 확정했습니다.

○**김선교 위원** 7개 군은 8월 달부터 지급이 될 예정이지요? 지급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빠르면 이번 금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7개 군의 경우.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시범사업을 잘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인구 감소되는 군이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69개 지역입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69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정부에서 그것을 추산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한번 69개 지역 인구를 가지고 해 봤는데……

○**김선교 위원**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5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럼요. 그게 가장 큰 과제고요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김선교 위원** 현금성 복지는 한번 제도화하면 정말로 줄이기 힘듭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데……

○**김선교 위원** 주던 돈 안 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정부는 이 사업을 5년, 10년 지속할 경우에 필요한 총재정 규모 얼마인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은 얼마나 가능한지 한번 검토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원 문제를 사실상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의지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더구나 이 사업이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그런 과제지만 이것이 가장 취약한 것이 지자체 중에 69개 군 단위임

니다. 공감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69개 군 지역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것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만약에 69개 지자체를 하나의…… 제가 경기도 의원이니까 연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연천이 지금 국비가 40%, 경기도에서 30%, 연천에서 30%. 지자체 중에 연천에서 30% 지원하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240억 됩니다. 가용재원을 240억 부담을 시킨다? 가제나 쪼그라드는 예산에 지금 경기도가 재정이 아주, 추정하는데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00억~5600억 정도요. 그러면 SOC사업 같은 것 이런 가용재원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발전하는 데 속도도 늦고.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군수님들 열일곱 분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군수님들 의견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아니, 69개 군이 했을 적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가정을 해서요?

○김선교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 점점 늘려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도로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복지 예산은 주던 것 안 주면 또 난리 나고 뭐 이렇게 해서 현금성 지급의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좀 늘려 달라 이 얘기입니다.

경기도 같은 데서 30% 부담해야지,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 30% 부담해야지, 이런 부분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리고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재 지금 어디서 재원 조달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디서 재원 조달이라는……

○김선교 위원 지특입니까? 지역균형특별회계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 지특회계…… 지금은 일반회계입니다.

○김선교 위원 일반회계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면 농특세로 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야겠습니다. 농특세도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특세에서 쓰시면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목적세인데 농특세도……

○김선교 위원 글썄요, 목적세인데 농특세에서 생색내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도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용도의 사업이므로 농특세도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선교 위원**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총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 M1 기준으로는 1305억 원으로……

○**김선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부채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기업부채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 해 가지고 총.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한 1300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가계부채가 한 2000조 그다음에 기업부채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업들이, 그게 통계로 잡기가 저희들이 뭐……

○**김선교 위원**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한 2770조 정도 되더라고요.

정부부채만 해도 역대 최고인데 일인당 그러면 한 1300조 정도 되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부채비율이?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한테 위원님, 이게 부채가 자산으로도 가 있고 다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게……

○**김선교 위원** 뭐 어쨌든 일인당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한 2500만 원 이상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도 GDP가 커지면 또……

○**김선교 위원** 그리고 가계부채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2000조 원 정도……

○**김선교 위원** 2000조가 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라……

○**김선교 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퓰리즘 이런 것에 너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부채를 내서 잘 쓰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본……

○**김선교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실정 아시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신문에서 들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도지사이시고 그런데 우리 부채가 많아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 기편성해서 배정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언론에서 본 기억이……

○**김선교 위원**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포퓰리즘 예산을 다른 5개년 계획 같은 것 세우듯이 잘해 가지고 이것을 꼭 써야 될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잘 쓰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국토부장관님, B/C 비율 적용하는 것이 도시하고 아주 오지인 농촌지역에 뭐 좀 이렇게 역이라도 하나 신설하려고 그러면 꼭 B/C 비율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미래 예측하고 그런 B/C 비율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AHP라고 해 가지고 균형발전지수를 포함해서 평가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가지고, 왜냐하면 소원이 나도 시골 사는데 전철 좀 한번 타 보자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앞으로…… 그래야 또 그 지역이 지역균형발전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선교 위원** 제가 그것은 실무진하고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재원은 농특세 재원인데 그것을 지특으로 이전을 해서 지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드립니다.

○**김선교 위원** 농특세는 진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쓰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특세 목적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광재**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혜경 위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에 돈은 넘쳐 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의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수록 심해지는 K-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평등을 반드시 완화시켜야 한다 이런 시대적 과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와 관련하여서 복지가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 복지는 단순히 복지사업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위원님.

○**정혜경 위원** PPT 한번 봐 주시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순부채비율이 2025년도에 10%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보시면 아주 부채비율이 낮은 나라에 해당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GDP 대비 복지비 지출 규모는 OECD 대비로 보시면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변함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 지가 2015년에 시작했으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21년부터 추가증가율을 보면, 추가증가율제도를 도입했는데 6년을 적용했지요. 그래서 보시면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집니다. 기본증가율 산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23년만 보시면 제대로 지켰고 나머지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10년을 기준중위소득을 운영한 결과가 상대적 빈곤이 완화되었는가. 완화되었나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는 있지만 최근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한 이후에 급여액이나 수급자 수, 예산액은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혜경 위원 제가 보기에 저기 보시면,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격차가 아주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와 24년으로 쭉 보시면 21년도에는 85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24년에는 16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바로 1.9배나 차이가 나고 갈수록 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년을 기준중위소득과 추가증가율 이것을 도입한 것을 보면 이게 격차가 커지고 있고 상대적 빈곤율도 증가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기준중위소득을 만든 목표 이것은 중위소득과의 점진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로 보셔도 격차가 해소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27년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6.70%로 어저께 기획예산처장관님께서 결정을 잘했다, 인상을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산식 플러스 추가증가율, 예전에 했던 방식요, 그 방식대로 적용을 했던 것보다 개선된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6년 동안 적용했던 산출 공식이 조금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27년도부터는 산출 방식을 좀 바꿔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경 위원 그 적합성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본 바에 의하면 그전의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기본증가율이 8.66%고 추가증가율이 4.23%로 산출됐어요. 그러면 27년 인상률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25%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6.70%니까 배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식을 고쳐 가지고 꿈수를 부린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중위소득을 하는 가계금융조사가 한 2만 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서 연속성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게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혜경 위원 수치를 보셔야지요. 수치를 보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의 산식으로는 13%인데, 그렇지요? 지금은 6.70%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꿈수를 부려서 복지제도 자체를 더욱더 좋게 만들지 못했던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그것은 꿈수가 아니고……

○정혜경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세요. 6.70%, 좋습니다. 6.70%에 상대적 빈곤율 증가 추이도 꺾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 정책목표가 이렇게 6.70%를 한다고 해서 달성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26년도의 가금복 발표가 나오는 28년도 데이터를 좀 봐야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가금복의 중위소득 증가가 굉장히, 9% 이상으로 높게……

○정혜경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앞으로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상대적 빈곤율이, 지금 보세요. 갈수록 격화되고 있잖아요, 표를 보시면. 그렇지요? 그리고 25년도도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득이 아시다시피 아주 크게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부가, 일부의 층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훨씬 더 소득격차는 커지겠지요. 이것은 그냥 기본 상식으로 국민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25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커지겠지요. 이것은 상식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그냥 국민들께서 나라는 부자인데 우리 국민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더 살기 어려운가라는 것이 이 수치로 저는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확하게 예상되는, 그래서 훨씬 더 초격차로, 상대적인 빈곤율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야 되는 거지요. 나라가 부자이고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무 변화가 없는 우리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 빈곤율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해소해야 되겠지요. 해소하지 않으면 이것 지속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K자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고 상대적 빈곤을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정혜경 위원 그래서 이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사실은 기준중위소득을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10년 동안 해도 실제로는 이 중위소득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준중위소득을 폐지하고 중위소득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뒤에 표 한번 다시 봐 주시면요, 가구원 수에 따른 균등화지수입니다. 보시면 1·2인 가구는 연도별로 해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5·6인 가구는 보시면 감소를 했거든요. 이것은 좀 이상하다. 5·6인 가구가 증가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정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 아, 정체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감소는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인 가구를 정책적으로는 더 지향하게 하는 이런 복지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 확대 추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보시면 이 격차가 6인 가구, 그러니까 다인 가구일 때 훨씬 더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불평등하게 지수가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우리 사회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사회로 가겠지요. 이것 자체도 저는 복지제도 자체로 보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가구균등화 지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보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자체가 사실은 10년 동안 운영해서 제대로 격차 해소를 하지 못했어요. 상대적 빈곤율도 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

원회가 사실은 산식은 있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보고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폐쇄적인 운영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의 정책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 근본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이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회에도 이 운영과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장관님과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초격차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초격차로 불평등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랬을 때 복지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확대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제가 얘기하는 중위소득을 제대로 하는 것, 기준중위소득을 폐지하는 것, 이렇게 갈 때 실제로 우리의 복지는 훨씬 더 두터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불평등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과세수와 아주 역대급의 세수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K-강국으로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불평등한 것을 해소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위소득을 가지고 복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장관님과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광재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저희가 2015년도에 최저생계비로부터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면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면서 수급자나 급여액 예산이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 완화, 상대빈곤 완화가 이 급여가 얼마나 적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계속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6년간에 적용됐던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변경해서 주요 사회·경제적 지표를 보정한 그런 방식으로 개편을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감사합니다, 장관님.

다음은 제주갑 민대림 국회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 민이 아니고 문입니다. 문대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중심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기반을 위해 최첨단 GPU 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2027년 예산안에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GPU 1만 장 추가 공급계획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5년 추경을 통해 1만 3000장을 확보하는 등 최근 2년간 3조 5000억 원을 들여 GPU 2만 2700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GPU는 일이 년만 지나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만큼 확보한 물량뿐만 아니라 구매 가격과 구매 시점의 적정성 그리고 실제 활용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GPU는 일반 공공시설과 달리 기술 변화가 빠른 자산이라서 교체와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합니다.

부총리님, GPU를 몇 장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 또는 5년 뒤에 이 GPU를 어떻게 운영하고 교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실제 지금까지 확보된 블랙웰 B200 3.5만 장 그리고 앞으로 확보될 해남 솔라시도의 1.5만 장 포함해서 5만 장에 대해서 운용 계획과 그리고 교체 시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대로 베라루빈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 전반적인 운영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5만 장을 확보하지만 우리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서 AI데이터센터에서 2029년까지 확보하기로 한 8.4GW의 AI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이론상으로 베라루빈 거의 200만 장에 달합니다. 물론 GPU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CPU, EPU도……

○문대림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GPU 수명과 성능 저하 그리고 전력비 증가, 새로운 세대 GPU 등장에 따른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한 중장기 교체계획 그리고 현재 확보한 GPU의 감가상각과 채투자 비용을 포함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장기재정계획을 함께 마련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GPU를 단순한 일회성 구매사업으로 보지 말고 구축과 운영, 업그레이드와 교체까지 포함하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순환 관리체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GPU 확보량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교체 비용을 포함한 5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현 위원께서도 GPU 배분이 중소기업과 초기 스타트업 등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GPU가 절실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GPU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연간 자부담금이 약 2억 7000만 원 정도에 이를 수 있어 상당한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부담 때문에 정작 GPU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초기 스타트업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실 초기에 설계할 때 자부담 비용 10%, 12% 정도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독자 AI 모델 개발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산업계 지원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문대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형평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초기 AI 기업을 위한 별도의 배정 분량을 마련하고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자부담을 낮추는 차등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별 활용 격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는 GPU를 배분할 때 지역할당 방식이 아니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공모 방식입니다.

○문대림 위원 정부의 GPU 사업은 대규모 상면, 전력, 냉각설비 등 이러한 설비를 갖춘 클라우드 사업자가 자사 데이터센터를 제안하고 이후 산학연이 신청 과정을 평가해서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신청 건수 그리고 현재의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면 기업과 인력, 연구기반이 집중된 수도권에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반시설이 없는 그러한 지역은 애초 경쟁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때문에 GPU 선정 과제 71.7%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은 28.3%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신청 건수와 수행 역량만 가지고 배분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자체나 대학 그리고 기업과 함께 지역의 잠재 수요와 활용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먼저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점 방식이 그러니까 플러스 1점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점은 좀 늘리고 또 홍보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서……

○문대림 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어쨌든 지금 정부의 배분 방식에 따르면 저희 지역구 또는 제주도가 GPU 공급 정책

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대형 클러스터 트랙에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국가 배분 트랙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제주의 기업이나 기관이 GPU를 쓰려면 인프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원격 접속으로 써야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주에는 지금 GPU, GPU 하는데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7%, 전국 최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독립된 전력계통을 갖고 있고요 관광, 농업, 우주, 바이오 등 AI를 접목할 수 있는 특화산업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1년에 한 백육십칠팔 회 정도 출력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충실히 따랐는데 전력 수요처가 없어 가지고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연산시설이 아니라 국가 전력 정책의 실증 설비로서 작동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는 당장 대규모, 물론 제주도도 40MW 그런 AI 데이터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실을 보려면 한 이삼 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아닙니다만 400MW도 크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소규모 GPU 인프라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PPT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LG CNS가 GPU 최대 576장을 탑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모듈러 데이터센터, 이른바 AI 박스라고 하지요. 이런 걸 선보인 걸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런 AI 박스를 제주도에 시범 구축하는 방안을 저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주는 관광데이터, 우주산업, 바이오, 에너지산업 등 GPU 기반 데이터를 활용할 분야가 차고 넘칩니다. 또한 제주는 1만 8000여 신들의 섬입니다. 자연, 문화, 역사 등 창작활동을 소재로 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GPU 기반 데이터센터가 구축된다면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이 제주도로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400MW급 그런 AI 데이터센터 추진도 중요하지만 GPU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AI 박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데이터센터가 효과적으로 제주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만 지금 지원하는 방식인 GPU 공모 방식 등은……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사업 공모 방식은 그렇게 해서 역량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런데 공모 방식을, 제주로 옮기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대림 위원 지역별 할당 방식을 추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

록. 그래서 제주에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GPU 정책 그 중심에 제주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제주대학교하고 4대 과기원이 같이 관련된 AI 전문대학원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런 GPU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지역 할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대림 위원 실질적으로 인재들이 양성돼서 제주도의 미래산업을 열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컨테이너형 모듈러 GPU 센터를 갖추게 되면 많은 창작활동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제주로 몰려들 것이고 외부 인재도 몰려들 것이고 내부 인재도 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방미통위 위원장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님.

○김태규 위원 혹시 위원장님은 부속실에 차나 음료 이런 것 좀 넉넉히 잘 채워 놓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시지요?

혹시 차, 전기차 맞지요, 관용차?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지금은 관용차가 휘발유차입니다.

○김태규 위원 휘발유차입니까? 전기차로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전기차 타고 다녔었는데.

휘발유값 본인 돈으로 쓰신 적은 없으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관용차 말씀이십니까?

○김태규 위원 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규 위원 당연히 그리 안 하셨겠습니까.

위원장·위원 차량 유류비 전액 삭감, 소송비용 전액 미편성, 국내 여비·출장비 70% 삭감, 일반수용비 50% 삭감,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이었습니다. 저는 부속실에 차도 없고 마실 음료도 충분치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사 들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였는데 제 개인카드를 주면서 전기 충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그런 고통 안 당하고 계셔서 조금 부럽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쭙어봤

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예산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잠시 물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쭙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 회의록 중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하나는 광고, 하나는 시청자, 상당히 이질적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통합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것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정확하게 기억이……

○김태규 위원 이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훈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한테 하신 말씀이고요. 이훈기 위원님은 또 이런 말도 더했습니다. ‘원래대로면 언론진흥재단과 KOBACO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문체부의 반발인지 잘 안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KOBACO는 방송광고 대행을 하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문·방송광고를 독점 대행하면서 무조건 수수료를 10%를 뺍니다.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맞지요? 그래서 재정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맞으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규 위원 어쨌거나 KOBACO와 언론진흥재단은 둘 다 광고를 담당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규 위원 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디어교육 또 하는 데가 어디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시청자미디어재단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두 곳 다 지금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광고끼리 이렇게 묶을 경우에는 하나 더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를 기계적으로 떼기 때문에 좀 재정적인 형편이 낮고, KOBACO는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안 좋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둘을 합치면 오히려 KOBACO의 만성 적자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

○김태규 위원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한 쪽은 돈이 있고 한 쪽은 돈이 없으니까 합치면 상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기관을 합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그리고 광고는 광고끼리, 교육은 교육끼리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학자들의 보고서 그다음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인수위 격의 기구에서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태규 위원** 왜 안 됐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김태규 위원**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 주시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기본적으로 언론진흥재단과 방송광고대행, KOBACO 간에는 영역이 광고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김태규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 시간이 오늘은 10분밖에 안 되네요. 그저께는 20분이었는데……

문체부 반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김태규 위원** 그게 제일 큰 장애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두 기관 통합과 관련된 것은……

○**김태규 위원** 아니, 어쨌거나 문체부에서 여기 반대하는 것은 맞지요? 문체부에서 찬성합니까?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협의가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 대단한 걸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쉽게 답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제가 허를 찌를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다단계의 공공기관 통폐합의 과정을 우려한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 갈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KOBACO하고 언론진흥재단의 광고기관끼리 합쳤을 때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언론진흥재단의 교육 기능하고 합쳤을 때 이렇게 합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KOBACO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합치는 게 시너지 효과가 크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 말고 시너지 효과 하나만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시너지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습니까?

한 11년째 KOBACO 지금 적자인데요. KOBACO는 적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지만 다행히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금 방발기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거의 소요되는 만큼 받고 또 그걸 그대로 다 쓰고 하는 그런 구조라서 특별히 재정 적자가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을 합치면 정원이 900명이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정원은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800명 정도……

○김태규 위원 다르지만 일단 두 기관 인원을 합치면 한 900 안 됩니까,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방통위가 한 300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통위 300 정도 안 됩니까, 직원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건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을 거기다 합칠 수는 없고요.

○김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KOBACO가……

○김태규 위원 방통위 300인데 이 기관은 900명짜리, 굉장히 대형 기관이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정이고……

○김태규 위원 방통위보다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예산 한 1400억 정도 예상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산은, 그것도 역시 추정치지만……

○김태규 위원 추정치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규 위원 굉장히 큰, 인원도 일단 900이라고 안 한다 하시더라도 얼추 그 비슷한 게는 같 겁니다. 굉장히 큰 부실 공공기관 하나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그게 그 두 기관만 합치는 게 아니고……

○김태규 위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난 12월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 3월에 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이렇게 결정하셨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취임하시고 석 달 만에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 정부의 기관장들을 다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하고 그다음에 KOBACO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민영삼 사장이었지요? 그렇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규 위원 제가 민 사장님하고 사적으로 통화를 한번 했더니 ‘왜 임기 남으셨는데 나오셨어요?’ 하니까 ‘그것 만들어서 나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 뭇 하러 있겠냐’ 하면서 그래서 나왔다 합디다.

그리고 지금 최철호 이사장님도 이 법 만들어지면 자리에서 나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예, 기관이 설립되면 새로운 기관으로 됩니다.

○**김태규 위원** 시간이 많이 가네요.

방송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법? 지금 중앙그룹이 올림픽하고 월드컵에서 독점중계권 187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렇지요? 감당 안 되니까 이걸 지금 방송 3사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 3사는 손실이 크다면서 거절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 명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은 JTBC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꺼리를 다른 방송사들이 하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내냐 하면요, 지금 이미 IOC에는 260억 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FIFA에서도 당연히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오겠지요. 그런데 FIFA나 IOC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강행규정이 돼서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떠안게 되도록, 다른 공영방송들이 떠안게 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나름대로는 JTBC 입장에서는 그쪽들과 협상하기가 좀 나아지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당신들 260억 가져갔고 다른 부분의 손해들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송 3사들이 떠맡아 줄 거니까 그 방송 3사한테서 보전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JTBC 입장에서는 자기들 손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더 질문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답하셔도 좋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예, 물론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께서 시간 때문에 일방적인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을 시작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 동계올림픽이 종편 단독으로 중계됨으로써 아주 감동적인 여러 가지 경기들이, 이벤트들이 국민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잃게 되는 그런 여론이 악화된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박했던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청권 확보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방송법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보편적 시청권 확보에 필요한 중계권과 관련된 행정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방송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지상파 방송사 한 곳이 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정 방송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전부 다 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그 법에 의해서

그 방송사는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양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기관 통합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하에 KOBACO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는 2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두 기관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일환,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위원회로 변모하기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능을 집행하기 위한 하위 집행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또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단계로 저희 산하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또 공공기관 통폐합이 있다면 그 다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독소조항 없애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또 전체회의에서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에 부총리님 또 감사위원장님 이하 국무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시네요. 조금만 기운 내십시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한 세 분 정도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노동부차관님 어디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노동부차관입니다.

○**임호선 위원** 예, 차관님. 장관님 안 나오셔서……

2009년도 공무원노조 노조 아님 통보하신 것 기억…… 보고받으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보고받았습니다.

○**임호선 위원** 우선 자료부터 떠올까요, 시간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0년도 전교조 판결입니다. 저 판결을 보시면 저 판결에 비추어서 2009년도에 노조 아님 통보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서를 보면 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작성하셨나를 의심할 정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교조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 위헌 결정이 아니고요. 저 근거가 된 게 보면 그 노동법 시행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 논조입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기관력 운운하면서 2009년도 공무원 노조의 범외노조 결정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겁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위원님, 저희가 그 당시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에 일단 기속을 하는 게 맞고 다만 위원님 저희가……

○**임호선 위원** 다시 법리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다시 한번…… 관련된 경우가 복잡해서 위원님께 이걸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저희 검토……

○**임호선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무위원들이 저 내용을 보신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내용의 검토의견이라서 사실 재고의 가치가 없을 정도입니다.

행정의 기본을 어디다 정해 놓고 있지요, 법에?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법과 원칙에다……

○**임호선 위원**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18조에 두고 있거든요. 소급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 법외노조 아님 결정을 내린 노동부의 그 처분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 결과를 초래했는지 기억나시지요? 2018년도 법내노조 인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이 전혀 공백기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명예회복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저 법외노조 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더 잡아서 결정한 그 근거를 전교조 판결을 통해서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무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법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려면 법률에 의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무효로 결정한 게 전교조 판결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걸 가지고 더 잡아서 내린 법외노조 결정을 왜 취소 못 한다는 거지요?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법의 ABC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저 자료 검토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게 세 번째 조항에서 뭐냐 하면 침익적 집행 시와 구제 청구 시에 이게 승계 연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든요, 저거 보면.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깐 2009년도 11월 달에 초대 위원장 양성윤, 사무처장 라일하 이런 분들을 지도부로 선출을 했는데 이때는 과거 노동부에서 뭐라고 이걸 반려하냐 하면 신설 통합노조에도 승계 연장된다, 이런……

똑같은 결정을 하면서 불이익 집행을 할 때는 승계가 연장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저 경우는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권창준** 예, 위원님 저희가 법률자문을 두 차례 거쳤는데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예, 법원행정처장님 나와 계시면 직접 한번 여쭙볼 생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예산처장관님, 노근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1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 공식 유감을 표명하셨던 사안인데요. 6·25 전쟁 발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모르실까 봐……

황간 노근리에서 백오십여 분 이상이 미군들한테 희생된 사건인데 참전단 미군들까지도 유족들이나 희생자분들이 다 용서를 해서 지금은 노근리평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함

께 이분들을 안타깝게 추모를 다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 지인도 관련돼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일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분들 명예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이루어진 부분은 있는데 아직도 배·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숙제예요. 이걸 법,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노근리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국비 191억 원을 2005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잘 관리·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비 지원이 많이 들어갔고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2012년부터 평화공원의 관리·운영을 거기 평화재단 측에서 맡아서 민간위탁으로 7억 3200만 원을 집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영동군의회에서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거든요.

돈 욕심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재단 측에서도 ‘그래,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다만 평화공원 관리·운영 프로그램만큼은 우리 재단에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비목이 잡혀 있으니까 이를 명분 삼아서 사실은 군의회에서 그런 의결을 한 것 같은데 내내역사업으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서, 그러면 좋으니 비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7억 3000을 2억 3000하고 4억 9000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민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군의회 의결을 받아 내 와라 이런 주문을 계속 하신다고 그러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행안부와 영동군이 이 문제 관련해서 재단의 인건비하고 사업비 일부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교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전용의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단 저희로서는 우선 그런 행안부와 영동군의 협의 결과, 그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유사 사업에 인건비를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 전용 요건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분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예요. 한 분의 삶을 녹여 내서, 이 사건을 사실은 이분들이 다 규명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저희 지역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한화큐셀 음성공장 작년 12월 달에 문 닫았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희망퇴직 받았습시다.

아시다시피 태양광 밸류체인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햇빛소득마을 또 영농형 태양광, 그런데 이분들……

저희 증평의 신성ENG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문을 닫았어요. 생산을 중단했어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세제개편안 발표하면서 세액공제 신설 내용인데, 부총리님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세 못 내요. 적자거든요. 그런데 세액공제하는데 뭘 공제하지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보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부총리님께서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5월 달이셨던가요, 간담회 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호선 위원 그때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때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여러 사람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에서 꼭 생산은 해야 되는데 생산 세액공제로 하다 보면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꼭 국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국내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임호선 위원 태양광기업 살려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 실종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청과 정부가 자체 셀 프조사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체 실종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감사할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원장 김호철 현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은 관련 내용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수용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는 즉각 좀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감사원이 경찰청을 감사한 것이 보통 한 9년에 한 번 정도 지방경찰청의 경우에 순서가 돌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안 한 해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보시면 경찰청 정기감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전수 감사를 검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 김호철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예.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나경원 위원 계속해서 용산공원에 닥치고 불도저 식으로 공사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런 조감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여의도에—아직 안 나왔는데요—여의도 지금 국회의 사당 자리에 아파트 개발이나 해라, 국회 뭐 하느냐,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곳에 아파트 개발이나 하라. 저는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페버스 청년주택, 고시원 육조 대책까지 지금 정부가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 청년들한테 임대주택에 살아라라는 거예요. 빌라만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청년·신혼부부가 주택을 자기들이 살고 싶은 데 살 수 있는 시작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지일관 주장하는 것이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결혼한다 그러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한 2억 원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한 20년 해 줍니다. 정부는 이자 차액 부분만 20년 동안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택을 사거나 주택 전세를 얻기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청년들은 임대주택에 살아라,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에 살아라 이것은 주거 카스트제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산공원은 어린이정원 만든다 그럴 때도 독극물 공원이라 그러고, 김민석 대표 그 당시 정책위 의장일 때 15cm 흙 덮어 봤자 위험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안 맞는 이야기들 하시지 말고, 탄천 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요. 탄천 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탄천 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탄천 부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빨리……

○나경원 위원 자, 용산공원은 어떻습니까?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공원은 한 번 만들면, 한 번 없어지면 불가역적으로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아무리……

○나경원 위원 공원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산공원 없애겠다고 하는 주장은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나경원 위원 저 공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 없애겠다는 건……

○나경원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가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나경원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용산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 짓는 것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 그동안 보면, 우리 법에 따르면 공원보다 주택의 경우에 일종의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이 더 높은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산공원이 주택용지로도 부적절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특공 폐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완전히 몰수하는 것 이것 징벌적 과세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장특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유와 거주랑 이런저런 말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거주하면 8% 해 가지고 10년 하면 80%까지 공제해 줍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조금 조정하셨지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나경원 위원 이거 징벌적 과세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징벌적 과세보다 더 문제가요, 이게 지금 전월세 시장을 왜곡하고 힘들게 하고 씨가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정부 믿고 임대 등록했었습니다. 이분들 그 당시 8년 동안 거주하게 하면, 8년 동안 거주하게 하고 5% 정도만 세를 올리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주겠다 했던 그 대책 아시지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나경원 위원 그게 전월세 활성화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월세 씨 말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8년 임대하던 게 이제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요. 끝나고 나서 영원히 보유를 해도, 시장에 내놓지 않아도 계속 혜택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고 그걸 지금 더 이상 하지 않는 임대에 대해서는 좀 종료시키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지금 이거 청원 엄청나게 오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이분들이 2029년 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임대 시장의 8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나경원 위원 이분들이 내놓으면 내년에 2만 2800가구, 내후년에 1만 4800가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대 시장에. 그러면 전세 임대의 씨가 마르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나경원 위원 지금 이런저런 말씀 하시지 말고요. 이분들에게는 정부만 믿고서는 8년 동안 착하게 임대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 맞는 셈이고 실질적으로 위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이익도 침해되고 위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부 공동명의면 실질적으로 보유세 더 많이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그거는 1세대 1주택 특례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가 선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보유한 것보다도 세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 장려세다 이런 말이 나오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나경원 위원 아니면 아닌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설명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출 문제, 선착순 대출 배급이라든지 청년 빌라 포비아 강요한다라는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청년들에게 빌라의 경우에만 대출해 주고 그리고 사실상 대출 총액 규제로 인해서 선착순 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돈 번 곳은 미래에셋 같은 자산운용사고요, ETF 운용사고. 그것만으로 번 거는 아니지만 미래에셋 상반기 9000억 원 이상 벌었습니다. 그런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한마디로 개인들이 얼마를 손실을 봤느냐, 고점 대비해서 54조 원을 손실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금융감독원장 아드님이 ETF 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맞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의 공정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금융위원회 구성에 금융감독원장님 포함되지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나경원 위원 그리고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되어 있도록 하지요? 제척되도록 하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것뿐만 아니라,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제척이 돼야 되지요.

○나경원 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나경원 위원 그리고 적어도 애매하다면 스스로 기피하거나 회피해야 되겠지요? 기피해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지요.

○나경원 위원 지금 시중에 김용범 실장님 아드님하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장님 아드님 두 분이 미래에셋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급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근무한 것이 맞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장께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잘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위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 정도의 중한 책임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수장의 자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건 어느 회사에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금융위원회의 이런 건들도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에 해당이 되면 제척을 하고 그런 선례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것에 따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금융감독원장이나 김용범 실장으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구 받은 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런 적이 없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나경원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하에 저희들이 도입을 추진했고요.

○나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사안이 사실이라고 확인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답변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광재 예, 그러시지요.

나경원 위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아까 부동산 대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총량 관리 부분을 1.5%에서 3%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고요.

○나경원 위원 제가 조금 이상한……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다음에 빌라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빌라로만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월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선택지를 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빌라로 한정하고 액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빌라라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많은 차임이 뜯기는, 보증금을 뜯기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을 내놓은 것은 오히려 청년들을 그리로 내몬다 이렇게 인식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청년들과 대화 많이 하고 국민들 이야기 조금 더 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읍의 권향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읍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79명이 사망한 참사 관련한 원인 규명이 아직 잘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를 개설할 때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개량하라는 과업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했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감사가……

○**권향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무안항공참사특위 활동을 할 당시에 한국공항공사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콘크리트 상판은 중간·최종 보고회에서도 설계업체가 제안했고 보고회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어서 수용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계업체인 안세기술이 제안을 했고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향엽 위원** 당시 보고회에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무안·울산 출장소, 한국공항공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당시 발표했던 최종보고회 PT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보강으로 안테나 작업공간 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제출된 종합보고서입니다. 기존 기초대를 재활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했다며 기존 기초 콘크리트를 보강 콘크리트로 연결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최종보고회 PT와 종합보고서 모두 로컬라이저의 철근 콘크리트를 보강한다는 방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업체인 안세기술은 국조특위에서 발주처 쪽에서 둔덕은 재활용하는 방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항공사는 안세기술이

제안했다고 하고 안세기술은 공항공사가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자체 조사 보고서에서 콘크리트 보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요 장관님, 공항공사가 지시하지 않았고 업체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과업 지시를 해 놓고 콘크리트 재활용을 지시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설계업체가 제안했는데 그대로 수용했다 해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화면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해당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참석자입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의 관리 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이들 기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장관님,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뒷짐 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로컬라이저 문제와 관련해서 조직적인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9명 기소 의견 송치되었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했던 기관들에 대해서 부처 자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보니까 지방주도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셨던데요. 비전으로 보니까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지방산업 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 서남권 반도체에 대한 것도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던데요. 성장엔진이 될 수 없나요? 국가산단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전연 그건 아닙니다. 저건 지금 저희들이 각 지방정부들과 같이 선정을 하면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서 하는 부분이고 잘 알다시피 철강산업이나 석유화학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기본 산업 중의 기본 산업입니다.

○권향엽 위원 역시 성장엔진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래서 잘 관심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감사원장님, 산업통상부로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 즉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권향엽 위원 산업부장관님, 언제 감사 청구하셨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 기억에 작년 11월 정도에 신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이제 곧 1년이 다 돼 가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장관님께서 석유공사 대상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를 담당했던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고 승진까지 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그 승진했던 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지난주였던 8월 18일까지 임기 다 채우고 퇴직했지요. 그리고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최문규 본부장의 경우는 지난 3월에 사임했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임기만료까지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 대상자가 퇴직하고 임원으로 승진했던 터라서 성과급도 2024년에 약 4200만 원, 2025년에는 약 33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두 번째까지 다 받고 나간 것이지요.

감사위원장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권향엽 위원 감사를 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얼마 기간 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되나요?

○감사원장 김호철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6개월 정도 되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6개월, 예.

○권향엽 위원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종료를 못 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원장 김호철 예.

○권향엽 위원 감사원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산업부에 연장 신청을 하셨나요?

○감사원장 김호철 이 건 현재 감사는 종료가 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중입니다. 조만간 부의해서 의결이 되면……

○권향엽 위원 저희가 보니까 5월 18일에 다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기간은 정하지 않아서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산업통상부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6개월 이내에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 훈령 위반이기도 합니다. 훈령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장관님, 산업부장관님께 여쭙는데 감사 처리 연장 통지까지 했었는데, 산업부 답변 지연으로 이렇게 연장 통보까지 됐다 했는데 이 경위 파악해 보셨나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좀 더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4월 17일 날에 질문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의 답변서는 7월 24일 날 했어요. 무려 99일이 걸렸습니다, 답변서를 내는 데. 공익감사는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되는데 답변서는 3개월이 넘게 걸린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석유공사와 산업부가 한 몸처럼 전광석화로 움직이신 것 잘 아시지요? 답변 과정에 산업부 내에서 고의적으로 지연이나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곧 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니까 감사원에서도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감사 종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부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유형 상품권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최근 스타벅스 카드 환불 사건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카드 금액 얼마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냐 그런……

○권향엽 위원 모든 유형의 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 기프트콘, 온라인 머니 이런 것이라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2019년에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8조 6000억 원으로 약 2.5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일상화된 지금 거래 규모도 엄청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장 이면에는 빈틈도 있습니다. 2021년에 머지포인트 사태, 2024년에 티메프 사태, 2026년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으로 인한 상품권 환불 사태까지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소비자 보호의 한계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자신이 구매한 상품권이나 포인트 환불도 못 받은 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분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거래구조와 규제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지금 현재 실태 파악을 위해서 사업자,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될 것인지, 누가 환불의 대상이 될 것인지 풀어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상품권 유효기간 소멸 후에 남은 잔액, 즉 낙전 수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돈은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역시 논쟁적인 부분이고 규모도 매우 큼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 주체들 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실태조사 후에 소비자 피해 없도록 그리고 관련 약관에서 불공정한 게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향엽 위원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도 저희 의원실로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재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홍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2시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 저한테 SOS를 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5분 회의중지)

(2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서구갑의 김교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홍 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21년도에 구광 덕평물류센터 불이 크게 났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교홍 위원 얼마 전에 인천에서 또 크게 나고.

그런데 이게 한번 물류창고는 불이 나면 일주일 가요, 6일에서 일주일. 그걸 국토부에서 뭔가 좀 정비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24년도에 스프링클러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좀 보강을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교홍 위원 그것만 가지고 될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메자닌과 랙 방식으로 돼 있어서 커커이 물건을 쌓아 놓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그 대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교홍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리고 미국에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진보된, 선진화된 기술도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담당 과장을 9월쯤에 출장을 보내서 연구도 해 보고 해서 이른 시간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메자닌과 랙 방식은 그냥 물류창고 건축허가만 받고 나머지는 허가사항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걸 보강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리튬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게 위험하다고. 그것은 터지기 시작하면 옆의 지역까지 다 번져서 그것은 물을 뿌린다고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리튬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교홍 위원 수조에 담가야 되거든. 아니면 가스를 발생시켜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를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공간에 적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물류창고, 대형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하나는 5차망,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금 있으면 발표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교흥 위원 언제쯤 발표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10월·11월 안에는 끝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런데 4차망은 약 43조 원 수준이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교흥 위원 5차망은 그것 갖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만 하더라도 시도 공약만 53조 정도 되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에서 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민은 출퇴근 시간이 평균 138분이 걸린대요, 하루에. 그리고 인천시민은 161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전철 기다리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가야겠다, 이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장관님께서 여기 우리 박홍근 장관님하고 같이 실령을 잘 했으면 좋겠다.

특히 GTX-D Y자 노선, E 노선, 대장-홍대선 연장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수도권에서도 서북부 지역이 굉장히 오지이고 교통에 아주 정말 혼란스러움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혼잡도를 좀 줄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요. 재정 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이번 5차망 철도망 계획이 수도권 주민들의 편리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부연하면 2030년도의 계획이, 인천공항의 5활주로가 계획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교흥 위원 5활주로가 생기면 1년에 유동인구가 1억 한 오륙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공항철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더더욱 GTX-D Y자나 E 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장관님께서 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박홍근 장관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소식을 안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다음에 정은경 장관님, 이것은 국무위원들이 한번 공유를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천 지역, 얼마 전에 박찬대 시장 만났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인천 통합돌봄 때문에 현장방문 했습니다.

○**김교흥 위원** 거기서 인천의 보건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서로 안 나눴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몇 가지 건의사항도 주셨습니다.

○**김교흥 위원** 인천 인구가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1명으로 전국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필수의료 의사 수도 1000명당 0.5명, 그러니까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공공의료기관도 그렇고 공공병상 수도 그렇고, 인천은 사립대학에 병원과 의대가 있 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부터 배제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아무래도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교흥 위원** 그러니까 지역 의사제도, 인천은 6명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인천은 섬 이 146개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예를 들어 백령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육지로 넘어오 는 데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필수의료, 공항과 항만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필수나 아니면 말씀하신 그런 위기 대 응하는 데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 위원** 그리고 인천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연계 의료산업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 것도 다 배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리는 거예요, 감염병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인천이 수도권에 있고 사립대의 대형병원이 있다는 것만 보시지 말고 정말 진정하게 공공의료, 필수의료의 제대로 가동이 되는가 이것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국의 국립대 중에서, 거점 국립대에서 의대가 없는 데는 인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인천에 국립의대는 없습니다.

○**김교흥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의료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감염병 전문 의료진도 배출하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까지 해소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국립인천대에 의전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교흥 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부예산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부지도 한 6만 5000평이 있고 또 인천의 인천의료원, 시립병원하고 연계 해서 수련병원을 만들고 한다면 정부예산 안 들고도 이것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이것을 우리 국무위원들이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예, 인천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그리고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부 문신학 차관님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장관 나와 있습니다.

○**김교홍 위원**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자료에는 차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천에 정부비축장이 있어요. 비축탄을 거기 저장하는데 수십 년 동안 비축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교홍 위원** 6만 6000t에서 4만t을 빼내고 한 2만여t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좀 빨리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탄소배출도 서울에 비해서 인천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불소까지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주변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또 하나는 비가 오면 침출수까지 나와서 주변을 더럽히고. 비축장이 결국은 민가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연탄을 방출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출 비용이 제 기억에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막 받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원을 해 주시면……

○**김교홍 위원** 예산 10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도권의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해서 수도권을 정말 효능감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7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홍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교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의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부총리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좋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일정 부분은 또 잘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임이자 위원** 나는 잘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제가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공정과세를 표방하지만 정책목표, 과세원칙, 시장영향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중심 과세가 주거 이동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 부동산과 금융자산 간 과세 형평성,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정책 실효성이 문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세제개편안 여론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께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런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결코 없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돼 가지고 어디서 조사를 해도 다 압도적인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45%고 찬성이, 긍정이 24%입니다. 무려 21%나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좋은 얘기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다음.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고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민심이 마구마구 들끓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조회 숫자입니다. 조회 숫자가 14만 8790회에 국민 의견이 1만 7246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조세 정상화입니까, 조세 폭력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댓글 달린 것 중에서. ‘제발 ETF처럼 하지 말고 이 제도를 실행했을 때 연구용역 맡겨서 신중하게 천천히 실행했으면 합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모든 게 끝나나요? 대통령 임기 맞춤형 대책 반대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까지 세금을 깎아 줍니다. 그러면 전체 국민 주택 수의 한 99%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이자 위원 아니, 부총리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이게……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게 팩트라니까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 하여튼 다음 봅시다.

그것은 부총리님 혼자 앉아서 주장하는 거고 국민의 분노는 끓고 있어요. 이래서 정책 실패의 해부도를 보게 되면 부동산 조세개편 관련해서는 메스(mess)라고 그러니까, 메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개판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다음.

조세지출 관련돼 가지고 재정전환 17건 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정부 재량에 맡기게 되면 고무줄 예

산이 될 수가 있다.

부총리님, 조세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재량으로 예산으로 가져갔을 때는 우리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또 규모가 변경될 수 있고 또 여기 정부…… 다수 여당이잖아요. 다수 여당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편성이 가능하지요. 맞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선거 때 정부여당이 대상 그다음 지원 규모 이런 것을 확대해서 현금 살포성 사업에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국가사업의 정치화가 아닌가, 국가사업의 정치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예산처에서도 더 많이 늘려 줬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냐고요. 야당의 숫자는 비록 적지만 야당에서 이런 선심성 포퓰리즘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임이자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재량 예산으로 갖고 오거나 예산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으로 전환했을 때 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될 건데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재정전환 17건 넘어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수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가령……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출산세액공제에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 출산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요 예측은 정확하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예측 영역이니까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해마다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올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넘치면 이것은 불용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이런……

○임이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할 일이 없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염려하지 마시고요.

○임이자 위원 확신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오히려 재정으로 전환하면 첫 번째……

○임이자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연말에 공제하지 않고 않고 직접 저희가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감도가 높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이자 위원 그러니까 17건에 대해서 지금 분석해 놓은 결과 다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내년 예산이 조만간에 발표되면 제가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재경부장관, 이것 다 분석해 놓은 거 갖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17건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연차별로 얼마나 지원되는지도 다 들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나중에 방으로 보내 주세요, 예산에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그다음에 주가 누르기, 인위적 주가 누르기 방지법하고 또 하나 생산적 금융 ISA 관련돼 가지고 정부안 발표하자 청년과 투자자들이 아주 그냥 거센 반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정확하게 준비 안 했다고 질타하게 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입법예고하기 전에?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그냥 입법예고한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청와대하고는……

○임이자 위원 아니,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하라 했던 말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임이자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협의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분석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재경부는 무능한 것이고 분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소영 안하고 정부안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소영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오히려 재벌을 도와주는 거고 조세 회피를 방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전면 재검토라는 게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대통령 말씀은 무시하는 겁니까,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일부만 살짝 건드리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그게 국민들 뜻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보라는 말씀이십니다.

○임이자 위원 다음.

‘고가주택 잡으려다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연초부터 구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또 투기 억제, 부동산 조세 정상화, 아주 수없이 많은 글들을 올렸지요. 그러고 나니까 정부

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종부세·양도세는 가액, 실거주 중심으로 하고 고가 비거주 주택에는 아주 그냥 세부담을 강화시켰습니다. 세계 때렸습니다.

이렇게 세제개편안을 내놓게 되니까, 도대체 말이야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반영하는 건 좋지만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조세법에 담아 놓을 수가 있겠는가. 이거 재경부가 제정신인가, 분석해서 했는가. 아까 분석했다고 그러셨지요, 분명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반발이라는 게 부분적이지요. 전체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약간 부당한 그런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임이자 위원 약간이 아니고, 약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로 떨어집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내가 여기서 안 밝혀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부동산이 제일 커요, 영향이. 부동산 중에서도 종부세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문 좀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실거주자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30억까지는 저희들이 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별로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임이자 위원 그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장관님.

그다음에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냐. 계속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하도 잘하시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께서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지셨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따지는 이런 단체가 있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1만 601건이나 접수가 됐다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님 정치하시는 거 너무 잘 알겠지만 이게 1만 건 정도 넘어가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정너 철학이 낡은 대참사다, 이번 조세 개편은.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면 재검토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래도 어떤 정책을 볼 때는 또 잘한 부분은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임이자 위원 잘하는 게 없다니까요, 와닿지가 않다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시가 30억 미만은요.....

○임이자 위원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30억 미만은……

○임이자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면 좀 새겨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자꾸 그러면 다음 주에 가면 20%로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줄여 주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비거주하는 부분은 자꾸 보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주로 전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이자 위원 거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비거주자·거주자 따지지 말자, 구분하지 말자’, 민주당에서 김민석 당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새겨들으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갈 길은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은.

○임이자 위원 안 그러면 다음 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진다니까.

○위원장 이광재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그만하려 했는데 자꾸 시키잖아요.

○위원장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임이자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의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준 위원 인천 계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지방교부와 또 철도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의 결함을 조정하는 지방교부가 없어지는 때, 다시 얘기해서 지방재정의 자립이 이루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완벽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는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를 관점을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해 보자면 여전히 중앙 의존적인 이런 재정체계에서 지방정부 간 균형을 잡아 주는 게 바로 지방교부의 목적이고 이는 대단히 중요한 재정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보통교부세가 추경 기준으로 66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저의 지역구가 속한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지방 주요 3개 광역시에 비해서 교부 규모가 조금 적게 나타납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일 오른쪽이 증가율인데 증가율로 비교하면 10% 대 3%, 조금 더 격차가 명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인천, 그렇습니다,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도 지역마다 여건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단일 단위로 취급을 해 버리게 되면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 결산심사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교부도 이러하지만 철도예산을 봤을 때 더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결산상 철도사업 분야 정부지출 규모를 보니까요 2025년까지 6조 원에서 8조 원 내외 수준을 보이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9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인천광역시 철도사업비 국비 예산을 보니까 4773억 원, 전체 철도예산의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GTX라든지, 아니면 인천 KTX,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GTX-B 이거는 중앙정부 사업이고 인천시 민자사업 구간에 건설보조금 명목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인천발 KTX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순수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7호선 연장 사업 하나다. 그게 한 1000억 원 내외, 그러니까 전체 철도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천 여건에 과연 적절한 철도예산 규모인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인구총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인천에서 출퇴근 그리고 통학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하는 인구가 35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또 수도권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인구도 1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6년 전 데이터가 이 정도 규모고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늘어났을,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더욱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서울시 조사를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니까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비중이 5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출퇴근 인구들은 절반이 지하철, 철도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 인프라고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천 철도 사업의 비중이 전체 6%, 실질적으로 따지면 1%에 불과하다. 과연 기본적인 교통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민이 아시다시피 서울·경기, 우리 수도권 경제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또 소비라든지 서비스 창출 등 경제활동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수적인 대규모 광역교통 수요가 인천에서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계양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기대를 받아서 제일 빠르게 착공한 곳이 바로 계양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양신도시의 주민들 또 계양테크노밸리 입주 기업과 주민들을 위한 철도교통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만 있고 교통대책이 없으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계양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서운산단으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수도권 서부 산업벨트의 요충지가 작전서운동 지역입니다. 여기도 철도 인프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여기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 중심의 수도 서부권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또 계양신도시 그러니까 계양테크노밸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작전서운동 이런 데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지금 거론되고 있고 예정하고 있는 것은 GTX-D Y자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계양신도시 혹은 작전서운동을 지나가는 대장-홍대선의 연장 사업들 이런 것들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경제 연결하고 또 시민들의 시간비용 절감하고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 서울 2호선과 인천 1호선, 공항철도, 서부권광역철도 이런 것들의 연계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겠다고 했고요. 고속철도의 수혜면적이라고 하는 서비스 권역, 고속철도가 들어가는 곳을 현재 39%에서 임기 내에 53%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TX-D 사업 조속히 착공을 해야 되고 대장-홍대선 연장 사업과 같은 이런 철도망 구축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토부장관님 자리에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한번, 지금 말씀드린 철도 인프라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만 덜렁 놓고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합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김남준 위원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3분도 남지 않아서 기회가 되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역급행버스 그리고 대광위 준공영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버스 사업자의 적자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총 262개 노선에 196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아셨습니까? 모두 다 경기도 버스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서울 많이 오가고 하는 것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인천 광역버스 중에서도 출퇴근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여쭙겠습니다.

대광위 준공영제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다면 혹시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김현정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기 신도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의 교통난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 교통 후 입주 이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테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규모 그리고 교통 수요를 고려해서 S-BRT 중심의 교통체계를 철도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계양 지역으로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철도 중심 교통대책으로 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철도는 개통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발생할 교통 공백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계양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입주가 빠르게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장 처음 가늠해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계양이다, 그런 상징성을 지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출퇴근 불편을 겪는다라고 하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철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교통수단을 확충해야 되고 BRT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계양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지금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이 주민들 입주하기 전에 마련이 돼야 한다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준 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라도 예상되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인천 광역버스를 대광위 준공영제로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박홍근 장관님께 인천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건의드린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토부에서 5차 철도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국토부랑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 철도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따라서 공항이나 도로 또 고속도로 또는 국도·국지도에 비해서 사실은 철도망에 대한 투자가 보다 보강돼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차 계획에서 신규사업이 43조였습니다. 그런데 요구가 상당액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규사업으로 총량, 즉 신규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역버스는 아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노선 관련해서 준공영제 노선 중에서 선정을 아마 대광위에서 할 모양인데요. 대광위에서 타당성 조사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저희들도 관련된 재정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준 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김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우리가 출근 시간을 1시간을 줄여 주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80만 원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1시간을 줄여 주면 30년을 출퇴근하는 걸로 보면 1억 2000만 원을 보태 주는 거라고 경제학 책에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인구의 한 삼사십 % 정도가 1시간씩 줄여 준다고 보면 이걸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명이면 1억 원씩이면 1000조 원을 보태 주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한 100조 원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가요, 5차 철도망 계획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이광재 산수로 따져도 그렇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인간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용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지만 국가재정 전체 상황을 봐 가면서 적정 규모로 하는 것 또한 재정운용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재 결단이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박홍근 장관님의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읍의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동탄2신도시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남준 위원님과 이광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조금 더 없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신도시들에 보면요 수요자 부담 원칙 비슷하게 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걷는 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인 동탄2신도시가 한 9200억 원 정도를 거기에, 도시 철도로 트램을 건설하자라는 취지로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트램이라는 것이 노면전차인데 결국 이것이 버스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데 그때 제 선배이신 이원욱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셔서 가지고 한 2018~2019년 돼서야 이게 법 정비가 되고 2021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 풀어 나간 거는 그거대로 놓지만 9200억 원을 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원래 동탄2신도시 토지 조성할 때 다 낸 돈이고 그러면 이거는, ‘위원장, 이게 늦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자는 쳐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자 안 쳐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던 동탄2신도시 사례를 보면 몇 년 정도는 사실 화성시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고 몇 년은 법안 정비하느라—또 국토부 관련 법안이니까요—거기서 좀 정체되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걷은 돈 그것이 거의 9200억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남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통대책 같은 것은 3기 신도시가 수립되기 전에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수립된 이후에라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훈령으로서 지금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자 또는 물가상승률들을 고려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침 며칠 전에 이 훈령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께서 살펴보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들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조정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저희 동탄 지역의 이 트램사업만 해도 21년도부터 저희가 사업비 책정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24년도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최근에 건설비 많이 상승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했더니만 건설비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건설사가 안 들어오고 또 늦어졌더니만 늦어진 만큼 공사비가 올라 가지고 또 입찰이 안 들어오고, 이게 약간 무한 루프같이 이렇게 돼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탄도시철도라는 것은 동탄, 오산 그리고 기흥 이렇게 다 걸쳐 있는 곳인데 조금씩 자꾸 노선이 열화돼요. 원래는 지하로 하기로 했던 것도 지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 낮추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스템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 특별하게 이걸 관리해 가지고…… 사실 국가 전체적인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잘되면 제가 국토부장관님 플래카드 걸어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이준석 위원 다들 기대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분당선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사비 들여 가지고 감사 현수막 걸겠습니다, 잘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하여튼 정확히 살펴서 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이준석 위원 마침 이번에 이 훈령이 개정됐으니깐요 좀 살펴봐 주십시오, 사례로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준석 위원 그리고 배경훈 부총리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잘 지냈습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과방위 떠나고 나서도 계속 눈에 밝히네요, AI 모델 사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파모 사업 하는 것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원래 대선공약으로 거셨던 것 중에 저도 TV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기억남니다마는 모두의 AI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이준석 위원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해 봤을 때 독파모 사업에서 2개 기업이나중에 결정되고 나면 그 기업들이 모두의 AI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모두의 AI는 곧 사업 결정이 됩니다.

○이준석 위원 지금 이미 3개 업체로 줄어들었지요, 독파모 모델이?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독파모와 지금 모두의 AI는 구분돼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준석 위원 국산 모델이 50% 가까이 쓰여야 되는 것은 맞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모두의 AI는 독파모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연계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좀 불일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고평가를 받은 모델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데……

약간 짚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가 사실 지향하는 사업의 방향이 뭔지 국민들이 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모두의 AI가 원래 나온 것으로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들 종합해 보면 그리고 과기부 발표 종합해 보면 ‘토큰 걱정 없이 모델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한 토큰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일단 국민들이 그런 토큰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아시다시피 일단 AI가 교육에도 많이 쓰이는데 교육에서 지금 토큰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준석 위원 맞습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런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또는 그 안의 대다수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쿠폰 이런 건 아닌 건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일단 모든 국민들이 쓰시는 데 비용 부담 없도록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이준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000만 국민들이 모바일 신분증이든 무슨 방법이든 간에 국민임만 인증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클로드나 아니면 챗GPT 이런 것 쓰면 최소 한 3만 원 정도, 2만 9000원 정도의 구독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이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그 정도의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서 어느 정도 유료 버전까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겁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부총리님, 월 3만 원어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가액 기준으로, 그러면 5000만 국민 중에서 한 4000만 명만 써도 이게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연간으로 보면 10조 원 가까운 금액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것과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무료 서비스라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정부가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토큰경제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만들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콘텐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또 부여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비용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단순히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이준석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독파모에 참여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지금 상당한 기업 가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맞습니다.

○이준석 위원 얼마를 밸류에이션했지요,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국민성장펀드가?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5조 원 가까운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간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다음이라는 포털을 갑자기 인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하지요. 그런데 원래는 1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던 업스테이지가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면서 5조 원 가치가 돼 버리고 그러면 주식 교환할 때 주식의 5분의 1만 교환하고도 인수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 상당히 그 당시에 말도 많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주식 거래 방식은 기업의 의사결정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준석 위원 그런데 국민성장펀드가 우선 들어간 거잖아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일단 그 전에 의사결정이 된 거지요, 그게.

○이준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고.

제가 아까부터 그 고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이 업스테이지라는 기업 물론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AI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 2대 포털 중의 하나인 다음을 인수한 것이고 이번에 독파모 평가하는 과정에서 물론 업체들 간의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원래는 우리가 독파모 사업 시작할 때 ‘세계 LLM들의 수준의 95% 달성하겠다’ 이 구호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게 목표였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런데 다른 나라들, 지금 중국 모델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프런티어 모델과 경쟁할 때는 우리는 벤치마크에서 몇 점 한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업스테이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기업들도.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사용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사실 업스테이지가 벤치마크 점수는 그렇게까지 돌출된 1등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용성 평가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기본적인 지표 그리고 전문성 평가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말씀하신 업스테이지가 전반적으로 고른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간에 평가 기준도 사실 사용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논란이 업계에서는 있지요. 당연히 떨어진 분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있겠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사용성 평가는 1차에서도 원래 있었습니다. 25점 배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준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에 있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다음을 인수하게 되

였는가, 1. 그다음에 이 평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가. 3, 그다음에 나중에 모두의 AI 사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만약 KT 컨소시엄이나 SKT 컨소시엄이나 이런 데서 국내 모델 고를 때 여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또 상당한 매출을 올리게 된다면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국가가 하나의 기업을 맡아주는 거고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모두의 AI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구개발 정도가 아니에요, 매출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때만큼은 부총리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엔지니어의 마음으로 이것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형태로 들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답을 더 드려도 될까요?

○이준석 위원 예.

○위원장 이광재 물론이지요.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저희가 칠팔 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국내의 NPU 업체도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 기업들도 거의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중의 하나가 우리가 AI 3강이 되기 위해서 이런 AI 모델,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도 세계 수준으로 우리가 키워 내야 됩니다. 업스테이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AI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고 데카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가 빠른 시점에서 이런 AI 모델을 선점하고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을, 이런 스타트업들을 우리는 더 많이 발굴하고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위원 저는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투명하게 또 이렇게……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예, 모든 과정은 저희가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고 모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가 과정에서의 평가 순위 그리고 배점 방식에 대한 방법들을 저희가 다 발표하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준석 위원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재 이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갑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강원도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종합질의에 이어서 용산공원 좀 여쭙겠습니다.

김윤덕 장관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날 현장에도 같이 계셨으니까 용산공원추진위원장이 총리고, 그런데 총리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여태 용산공원이 공원을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가지고 지금 용산공원 해체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총리는 전혀 모르시는 것까지는 그날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요, 현장에 계셨으니까?

동의하시지요? 맞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정하 위원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논의가 있지도 않았다. 총리가 된 후로는 한 번도 회의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서면으로 추진위원회 회의하고 나서 여태 회의도 한 번 없었고 그나마도 금년 4월에 민간위원들은 임기가 다 돼서 그냥 공백 상황이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이러면서 용산공원이 갑자기 공원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켜야 되는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체해서 주택 놓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있는 정부 위원회가 다 이것 거수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다들 한번 정부 부처에 위원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침에 오세훈 시장 만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정하 위원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가지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7만 3000호 추가 공급에 용산공원은 없다. 탄천 공급은 검토해 보겠다. 꼭 용산공원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 기사가 막 돌아가다가 오후에 장관님 폐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서울시에 당부합니다. 안 된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하지 마십시오’ 이런 취지의 폐북 글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정하 위원 그리고 앞서 조배숙 위원님 그다음에 나경원 위원님 질의에 정해진 것 없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가 꺼져서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하시고 용산공원 해체하는 것 철회하자는 나경원 위원 말씀에는 답을 안 하셨어요.

하루 종일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현재 국토부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용산공원에 대해서 현재 청년 또 신혼부부……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해체하고 주택 공급하는 대체부지로 쓰실 생각이 장관님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언제라도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백지 상태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 건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해체한다’ 이런 표현도 사실 견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박정하 위원 아니아니, 장관님 지금 11시 45분 현재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현재 서울시내에 청년과 신혼부부 또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 어떤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고 또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박정하 위원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이 녹지를 보존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이미 훼손된 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박정하 위원 그 부분부터 이제 정리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지요. 끝까지 들으셔야……

○박정하 위원 아니, 이따 말씀 주셔도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정하 위원 장관님, 이 용산공원이 어디서부터 갑자기 시작이 됐냐 하면 작년…… 장관님 취임 1주년이 8월 14일이었나요? 맞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8월……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때 1주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즈음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정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8월 19일 날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사청 부지 등과 같은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산공원이 해체되고 주택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박정하 위원 특별히 말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박정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장관님 지금도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주택 공급의 주무 장관이신 국토장관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지금 말씀 못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앞서 우리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앞의 말 다 자르고 이런 말만 하시고……

○박정하 위원 부동산시장은 흔들리고 있는데 대출 막았더니 이걸로도 방법이 없고 세제로 막았더니 이것도 방법이 없고 그전에 대통령은 말씀 주셔서 공급 막 하겠다고 시원하게 했는데 그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딱치고 공급하자라고 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이것 청와대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막 상상한 것 소설 쓰지 마시고……

○박정하 위원 장관님,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게 아니면 장관님이 주무 장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어 보고 답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박정하 위원 용산공원이 필요합니다, 아니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저를 막 일방적으로 공격할 목적이 아니라면……

○박정하 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만할게요.

○위원장 이광재 이렇게 하시지요.

○박정하 위원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이따 답변하시지요.

○박정하 위원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근거로, 어디에서 근거해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원래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최근에 4차 변경계획이 2024년 12월에 있었습니다. 12월에 2차 고시, 2차 고시는 21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고시였는데 신규 편입된 지역, 이 신규 편입된 지역이 지금 상당히 훼손됐다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녹지축의 핵심 거점이고 이 부지를 공원으로 우선 조성해야 된다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김성환 장관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하고 계시지요? 기후에너지부에서 국토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산공원 부지는 서울에서 최박하게도 2등급이에요. 장관님은 무슨 근거로 이게 훼손됐다고 말씀하시는지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론화, 공론화, 공론화라고 하시지만 그냥 생각의 근거 없이 이것 훼손됐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는 분은 텔레비전·라디오에 나와서 어린이공원에 관람객도 없고 아무도 안 찾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공원관리소나 이런 데서 제출한 자료는 금년도에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요, 매년. 그리고 금년도 누적 관광객이 100만 명이나 되고 심지어 만족도가 87%나 된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용산어린이공원이 훼손됐고 아무도 안 찾는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억지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어린이정원이 훼손됐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용산공원의 일부 기능이 훼손됐다고 하는 것은 장관님 말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어린이공원을 쉬지 마시고……

○박정하 위원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정하 위원 1분 40초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제가 그냥 억지로 추론을 하면 그냥 근거 없이 ‘용산공원의 일부가 훼손됐고 이것 주택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장관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는 양반은 ‘어린이공원 아무도 안 찾는다니까 이것 그냥 막 써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지금 소위 공론화 작업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용산공원을 지금까지, 어제까지 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국토부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국토부 공직자들은 ‘이것 안 됩니다’ 소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아무도, 180도 거꾸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연하지요.

○박정하 위원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어제까지 용산공원 만들겠다고 했다가 영원히 보존하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었다가 갑자기 이것을 해체한대요? 어떻게 이걸 믿어요. 그리고 장관님께서서는 완전히 훼손됐다고 하는데 거기 청정지역에 가까운 2등급지고, 어린이공원 많이들 가고 만족하고 있다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국민이 납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좀 전에 시작부터 말씀 여쭙었지만 아직 장관님 분명한 입장도 말씀…… 아니, 내 생각이 분명하면 그냥 밀고 가시면 되잖아요. 어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 데서 오더가 있어서 장관님 그것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럼요.

○박정하 위원 자,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에 맞춰서 일을 좀 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왜 그런 배짱이 없어요? 사명감 갖고 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셔도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재 예, 이제 말씀하시고.

박정하 위원님 들어가셔도 되고 서 계셔도 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을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공원 내에 있는 그런 정원을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그런데 용산어린이정원에다 집을 짓겠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용산공원 전체에서 일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제한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을 등치시켜서 마치 어린이정원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냐라고 자꾸 등치키면서 마치 녹지로 되어 있는 용산공원을 훼손해서 국토부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나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위원님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들이 저한테 ‘용산어린이정원에 집을 짓습니까?’라고 묻길래 그렇지 않다.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국한해서 집을 지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 고민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용산 특별법을,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결국은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큰 틀에서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왜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용산공원 내에는 미군이 실제 썼던 학교 그다음에 실제 사람들이 살았던 장교 숙소 그다음에 병원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를 녹지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생각하고 있

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용산공원을 정말 녹지로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20년 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이곳을 녹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공감하고 있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후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용산공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된 땅의 일부라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과연 이게 녹지를 지키는 문제와 주택을 짓는 문제가 양립할 수 없는 거라면 불가능하겠지만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후손들에게 녹지도 제공하지만 또 다른, 정말로 그 녹지를 품은 그런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국토부는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치 용산공원의 녹지를 허물어서, 해체해서 말도 안 되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 구시대적으로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는 제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재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시각이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하였다가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 위원(46인)

강경숙 강대식 권향엽 김교홍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선교 김태규 김 현
나경원 문대립 박수영 박용갑 박정하 朴芝源 배준영 백선희 서지영 송언석
송재봉 안도걸 어기구 엄태영 유상범 윤용근 윤재옥 이건태 이광재 이기현
이연희 이인선 이종욱 이준석 임이자 임호선 정준호 정태호 정혜경 조배숙
조인철 최기상 한동훈 허성무 허 영 황명선

○출장 위원(2인)

김성희 전진숙

○청가 위원(2인)

박상웅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주성훈

입법심의관 이재운

입법심의관 이윤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호철

기획조정실장 이윤재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2차관 허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장관 배경훈

기획조정실장 강상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김종구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정책기획관 정상용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 안세창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기획조정실장 김헌정

정책기획관 이주열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무대행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차관 조용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기획조정관 양순필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기획조정관 박현희
국세청
청장 임광현
기획조정관 유재준
관세청
청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기획조정관 장홍태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차장 김상경
기획조정관 이상호
산림청
청장 박은식
차장 임하수
기획조정관 임영석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기획조정관 장호연

입법시회의록

기상청

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김동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 문성요

기획조정관 정인권

해양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장인식

기획조정관 임명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 고민수

기획조정관 성종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손주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기획조정관 김기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